

직업교육 혁신 2020

정태화 전종호 홍광표
이길순 이병욱



+

+

연구보고서 2009-5

직업교육 혁신 2020

정태화 전종호 홍광표
이길순 이병욱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와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걸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단편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특정의 학교급, 주제, 정부 정책 등에 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왔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전망에 기초한 직업교육의 종합적인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사회의 전망에 기초하여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혁신 과제를 연구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이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체제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천 방안 제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16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정태화 박사가 책임자로서 전종호 전문연구원, 홍광표 연구원, 신구대학 이길순 교수,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정책방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관련 부처 관계자와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9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3

1.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실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 3
2. 직업교육 주변 환경 변화는 직업교육 혁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 3
3. 직업교육 혁신은 어떤 방향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 3

제3절 연구 방법과 추진 절차 · 4

1. 연구 방법 · 4
2. 연구 절차 · 6

제4절 용어 정의와 연구의 범위 · 7

1. 용어 정의 · 7
2. 연구의 범위 · 9

제2장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제1절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 11

1. 전문계 고교 교육 · 11
2. 전문대학 교육 · 17

ii 목차

- 3. 노동시장 · 28
- 4.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 38

제2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 46

- 1. 전문계 고교 · 46
- 2. 전문대학 · 55
- 3. 선행연구 분석 요약과 시사점 · 65

제3절 과거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 89

- 1. 성과평가의 틀 · 89
- 2. 성과평가 결과 · 92

제4절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통한 문제점과 혁신 과제 · 105

제3장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혁신 관련 시사점

제1절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 변화 전망 · 109

- 1. 인구 변화 · 109
- 2. 산업 변화 · 114

제2절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 · 120

- 1. 전문계고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 120
- 2. 전문대학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 121

제3절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 128

- 1. 국제기구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 접근 · 128
- 2. 중등직업교육 제도 혁신 · 130
- 3.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 · 133
- 4.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제도 운영 · 139
- 5.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 일본의 단기대학 사례 · 147

6. OECD의 한국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 148

제4절 주변 환경 변화가 직업교육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 · 149

제4장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논의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은 왜 재정립 하여야 하는가? · 154

제2절 직업교육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는가? · 155

1. 학제 혁신 · 155
2. 전문계 고교 포함 고교 유형 재편과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 163
3. 직업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 · 169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 178

1.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 178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 197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 214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 216

1. 직업교육기관 간의 계열 및 학과 교환 · 218
2.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 218
3.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 선정 · 219
4. 사립 직업교육기관 폐지 · 219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 · 221

제5장 직업교육 혁신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 227

제2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 229

1. 학제 개편 · 229
2. 전문계 포함 고교 유형 정리와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 230
3.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 230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 232

1. 학교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 232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 236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 · 243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 245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 · 관리 · 247

SUMMARY · 251

[부록-1] 1990년대 이후 추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 · 257

[부록-2] 주요 국가의 학제 · 297

[부록-3]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가 현황 · 303

[부록-4] 한국의 고교 유형에 관한 법령 내용 · 319

[부록-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대·소 계열별 학과 수 및 학교 수
현황 · 325

[부록-6]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천채용 제도
확대 관련 법령 내용 · 331

[부록-7]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법령 내용 · 335

[부록-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37

[부록-9]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법령 내용 · 339

참고문헌 · 353

〈표목차〉

- 〈표 2-1〉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 · 12
- 〈표 2-2〉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입학생 수 변화 추이 · 14
- 〈표 2-3〉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재학생 수 구성비 변화 추이 · 14
- 〈표 2-4〉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참여 변화 추이 · 15
- 〈표 2-5〉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 15
- 〈표 2-6〉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 · 16
- 〈표 2-7〉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 17
- 〈표 2-8〉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 · 18
- 〈표 2-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생 충원률 변화 추이 · 19
- 〈표 2-10〉 전문대학 위탁생 변화 추이 · 20
- 〈표 2-11〉 전문대학 학생의 성인 연령 비율 변화 추이 · 21
- 〈표 2-1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변화 추이 · 21
- 〈표 2-1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 · 22
- 〈표 2-14〉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 · 23
- 〈표 2-15〉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변화 추이 · 24
- 〈표 2-1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추이 · 25
- 〈표 2-17〉 전문대학 현장실습 및 취업률 변화 추이 · 26
- 〈표 2-18〉 전문대학과 산업체간 인적교류 실적 변화 추이 · 26
- 〈표 2-19〉 고등교육기관의 폐교 예상 추산 결과 · 28
- 〈표 2-20〉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 31
- 〈표 2-21〉 학력별 최근 1년 동안 이직 및 자발적 이직 여부 · 33
- 〈표 2-22〉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가 큰 정부정책 · 34

- 〈표 2-23〉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변화 추이 · 35
- 〈표 2-24〉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 35
- 〈표 2-25〉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계획 · 36
- 〈표 2-26〉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 38
- 〈표 2-27〉 최근 5년간 직업훈련기관 운영 현황 · 41
- 〈표 2-28〉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최근 2년간 연수 실적 · 42
- 〈표 2-29〉 전국의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 설치 운영 현황(2008) · 43
- 〈표 2-30〉 전국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 44
- 〈표 2-31〉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현황 비교(2009) · 45
- 〈표 2-32〉 전문대학 졸업생의 해외유학생 현황(2008) · 45
- 〈표 2-33〉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에 따른 파견학생 현황 (2005-2008) · 45
- 〈표 2-34〉 선형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66
- 〈표 2-35〉 선형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77
- 〈표 2-36〉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 · 90
- 〈표 2-3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 · 92

- 〈표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110
- 〈표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 111
- 〈표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변화 추이 · 113
- 〈표 3-4〉 학교구분별 학령인구 · 114
- 〈표 3-5〉 우리나라 향후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 · 117
- 〈표 3-6〉 OECD 기술수준별 고용비중 전망 · 117
- 〈표 3-7〉 산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 118

- 〈표 3-8〉 OECD 기술수준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 118
- 〈표 3-9〉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 · 119
- 〈표 3-10〉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 · 120
- 〈표 3-1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122
- 〈표 3-12〉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 123
- 〈표 3-13〉 학력별 취업자 전망 · 124
- 〈표 3-14〉 산업별 수급차 전망(2007-2017) · 125
- 〈표 3-15〉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7~2017) · 126
- 〈표 3-16〉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
운영 현황 · 144

- 〈표 4-1〉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의 특징 · 158
- 〈표 4-2〉 전문계 고교생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진학 현황 · 160
- 〈표 4-3〉 일반대학 편입학생의 출신학교별 현황(2007년 1학기) · 160
- 〈표 4-4〉 전국의 산업대학 현황 · 160
- 〈표 4-5〉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비교 · 162
- 〈표 4-6〉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 · 170
- 〈표 4-7〉 전문계 고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필요성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 · 173
- 〈표 4-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 · 173
- 〈표 4-9〉 전문대학 주요 보직자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의 전문대학 기능별
중요도 · 176
- 〈표 4-10〉 전문대학에 적절한 학과에 대한 일반대학의 학과 운영
사례(2009) · 177
- 〈표 4-11〉 고1 학교의 목적 유형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 · 180
- 〈표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년별 · 교과별 평가문항 개발 현황 · 184

- 〈표 4-13〉 전문대학의 설립주체별·계열별 개설교과 현황·185
- 〈표 4-14〉 정부 방침에 따른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용의 개요·188
- 〈표 4-15〉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학교 운영 현황(초·중·고 포함)·195
- 〈표 4-16〉 주요 국가에서 강조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요소·197
- 〈표 4-17〉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198
- 〈표 4-18〉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현황·201
- 〈표 4-19〉 산학협력 지원 사항과 관련 법령의 관계·206
- 〈표 4-20〉 교과부외 특별법에 따른 타 부처의 설립·운영 고등교육기관 현황·223

- 〈표 5-1〉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안)·238
- 〈표 5-2〉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249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 7

- [그림 2-1]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 · 13
- [그림 2-2] 실업률 변화 추이 · 29
- [그림 2-3]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 · 31
- [그림 2-4] 연령별 · 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 · 32
- [그림 2-5]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 · 훈련 미실시 사유 · 37
- [그림 2-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 · 37
- [그림 2-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 준거의 도출 모형 · 91

- [그림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 110
- [그림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111
- [그림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 112
- [그림 3-4]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 · 121

- [그림 4-1] 한국의 학제 · 157
- [그림 4-2]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 202

- [그림 5-1] 생애 경력발달 단계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교육 지원 정책 접근도 · 228
- [그림 5-2] 전문대학의 해외 인턴십 제도 운영 모형(안) · 244

【요약】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사회의 전망에 기초하여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의 종합적인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외국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전문가 협의회, 정책토론회 등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2.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각종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범주화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고교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
- 교육제도상의 문제
 - 학제 문제 : 단선형 학제에서 복선제 성격의 전문계 고교 운영
 -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미흡 : 진학 위주의 현상,

취업률 저조

- 일반계고교 졸업자와 전문계고교 졸업자가 동일 대학 동일 학과에 진학하는 상황의 문제
- 대졸자보다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교가 한국사회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
- 고교 학교 유형 및 전문계 고교 계열 구분의 불확실성
- 직업훈련기관과의 수평적 연계 미흡
- 공동실습소 운영 미흡

□ 학교 내부의 문제

- 재학생의 낮은 수학능력
-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산업계의 수요 반영이 미흡한 교육과정 : 산학협력, 교과서 개발제도
- 교사의 실기지도 능력 미흡 : 교원양성제도, 현직교육
- 교육과정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부족

□ 정부의 지원 부족

-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 전문계 고교 졸업 근로자를 위한 비전 제시 부족 : 계속 교육 기회 제공 등
- 소외계층으로서의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배려 부족 : 장학금 지급 등

둘째, 전문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문대학 기능조정 필요
- 성인학생 확보의 필요성 검증
- 교육제도상의 문제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별성 확보 미흡 : 고등교육 기관 간 역할 부재
 - 수업연한 자율화 쟁점
 -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취업약정제 활성화 미흡
- 학교 내부의 문제
 - 재학생의 낮은 수학능력
 -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산학협력 미흡 : 산업계의 수요 반영이 미흡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미흡, 인적교류 미흡
 - 교수의 교수능력 및 실기지도 능력 미흡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과다
 - 교육과정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부족
 - 직업교육 국제화 노력 부족 : 해외인턴십 등
- 정부의 지원 부족
 -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 전문대학 졸업근로자를 위한 비전 제시 부족 : 계속교육 기회 제공 등
 - 소외계층으로서의 전문대학 재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장학금 지급 등

셋째,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관련 문제

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청년실업과 대졸자의 하향 취업 증가
 - 지속적인 청년실업 속에서도 일반대학 선호
 - 일반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전문대졸자 취업의 어려움,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전문계고 졸업자 취업의 어려움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 학력별 임금 격차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입학 기피
- 산업계의 군복무 미필자 기피로 인한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 곤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의 어려움
- 직업교육기관 출신 재직근로자의 계속 교육 지원 부족

넷째,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① 미래지향성의 부족, ②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 ③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 운영의 다양성 부족, ④ 특성화 추구 부족, ⑤ 수직적·수평적 연계의 미흡, ⑥ 운영체제의 유연성과 자율성 부족, ⑦ 학습과 일의 연계 강화 부족, ⑧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추출된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2020년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직업교육 혁신정책에서는 직업교육 실태 분석과 혁신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는 정책 의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의 혁신 과제를 제안함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정책은 학교급별보다는 혁신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주제 내에서 학교급 간 연계 및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혁신정책 관리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혁신 관련 시사점

직업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가 직업교육의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의 변화 전망,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 그리고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의 증가 등 인력구조 전반의 변화는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성인대상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2020년경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수출은 둔화되면서 경제의 지식집약화 및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으로 전 산업 내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는 줄고,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직업교육기관의 인력양성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정책에서는 단순히 학교 수 및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학과의 재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지만 2006년에는 그 규모가 5천 명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되는 등 향후에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계고교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이 같은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전문계 고교 중심으로 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는 2007년 2,623천 명에서 2017년에는 3,706천 명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이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고학력 인력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년제 중심의 전문대학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학과)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여러 나라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경계 모호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는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여러 나라의 직업교육은 산학협력체제의 구축과 함께 직업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제도 및 제도의 운영 필요성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OECD가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해 자문해 준 내용인 산업계의 직업교육 분야 참여 확대, 우수한 품질의 현장 실습(workplace training) 확대, 직업교육기관 교원의 학생 교육능력 향상, 국가자격체제와 직업교육의 연계 확대 등의 내용은 향후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4.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논의

2020년경의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중심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혁신 방향의 논의 준거를 ①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분석, ②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관련 시사점 도출, ③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② 직업교육체제 혁신, ③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④ 직업교육의 국제화, ⑤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⑥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관리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5. 직업교육 혁신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직업교육훈련’ 개념을 ‘평생직업능력교육’으로 대체하고 ‘평생직업능력교육’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 단계에서 평생에 걸쳐 국민이 ‘취업능력’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 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교과부의 직업교육 관련 법령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학교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위의 개념 재정립 후에 정부는 가칭 ‘직업교육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이 대책에서는 국민의 생애 경력발달 단계에서 각 집단의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하위 정책을 포함시킨다.

나. 직업교육체제 혁신

1) 학제 개편

- 학제 개편 시에 일반교육 경로(고급 기술자 양성, 학자 양성)와 직업교육 경로(중견기술인 양성, 재직근로자 계속교육<대학원 과정>)를 구별하도록 한다.
- 고등교육 체제 개편 시에 다음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한 후 수업연한을 1~4년으로 자율화하는 방안
 - 고등교육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현행 체제 유지 시에는 고등교육법 개편을 통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철저한 차별화 방안 마련
 - 전문계 고교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 전문계 고교의 수학 연한을 2년으로 단축시켜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매력도를 높이고, 취업 후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함.
 - 전문계 고교 2.5년 과정과 전문대학 1.5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한 학교내에서 전문계 고교 졸업장과 전문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명칭은 ‘취업사관학교’ 등의 대안을 검토)의 신설을 추진함.
- 2) 전문계고 포함 고교 유형 정리와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전문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을 최대한 단순화시킨다.
 - 전문계 고교의 계열을 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재편한다.
- 3)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기능인력 전반의 양성 및 활용 관련 다양화·다변화 정책을 통해 전문계 고교의 인력 공급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일정량의 기능인력 공급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함.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에 따라 전문계 고교가 다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지역주민 대상의 직업교육(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포함)
 -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의 주부 대상 직업교육과 언어·문화적응 교육
 - 다문화 가정의 주부 중 외국어 능력 소유자를 향해 전문계 고교 재학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에서 활용
 - 탈북가족 대상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 평생학습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시켜 주는 평생직업능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 고졸입학생을 위한 실무중심 직업교육, ㉡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도, ㉣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직업교육으로 설정
-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학과 신설·폐지·조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1) 학교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계속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수학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이

외에 수준별 수업 실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방과후 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
 - 교육과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칭 '연차별 전문대학 입학생 기초수학능력 평가제도' 도입
 - 재학생은 물론 전문계 고교생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수학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한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 전문계 고교생에게 적합한 대학 진학 경로를 지원한다.
 - 전문계 고교 졸업 후 현장에서 3~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학비를 보조해 주어 전문계 고교 → 산업체 근로와 현장경험 습득 → 대학교육 → 현장으로의 복귀로 이루어지는 '순환교육 제도'(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 위의 정책 추진 시에는 근로자의 학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교과부의 일반회계를 통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
- 직업교육기관 교원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 직업교육기관 학교급별 가칭 '교원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
 - 전문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 양성기관에서의 교사 양성과정 혁신

- 전문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도입하도록 지원
 - 당해 대학을 중심으로 3~6개월간의 학생 수업지도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는 혁신적 방안 검토
 - 위의 방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인근의 일반대학의 교육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교과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같은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기관 교직원의 현직연수를 적극 강화
- 직업교육기관 교원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제공
- 교육과정 중심의 연계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수직적 연계차원에서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 정책 강화
 - 수평적 연계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과 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추천채용제도를 확대한다.
 -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타 교육청에서도 추진
 -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기능인재(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추천채용제 확대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정부는 창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학생의 전공과 창업과정 연계 방안, 창업 실패에 따르는 재정 부담 해소, 프로그램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 직업기초능력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기획 및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교과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유도함.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 확대
- 「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한다.
 - 다음의 관점에서 이 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 지원
 - 산업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산업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관 육성
 - 공급자(정부·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 육성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산학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역사적으로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이들 단체의 기능 확대
 - 기존에 이 협의회가 갖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 추진

- 기관 내부적 문제: 전담직원 부족, 직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 확보 미흡, 정부의 장기적 적극적 재정 지원 미흡, 기관 내의 업무전담 조직 미설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차별화 미흡, 경영진의 인식 부족
- 정부 차원의 전담 부처 및 기관 역할 불분명 : 「산업발전법」은 지식경제부가 관장, 노동부는 사업전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
- 이 협의체가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업 활동 이외에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
 - 각급 학교별 인력수급 분석
 - 일반대학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평가
 - 각급 학교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결과의 '환류'(Feedback)
 -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관련 사업 추진
 - 각급 학교와의 산·관·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 기존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산학협력'은 '산업계, 정부, 교육기관, 연구소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 산학협력교육, ㉡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 정보의 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에 반영함.
 - 각급 학교에 따른 산학협력의 강조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새로

은 산학협력의 개념 재정립에 따른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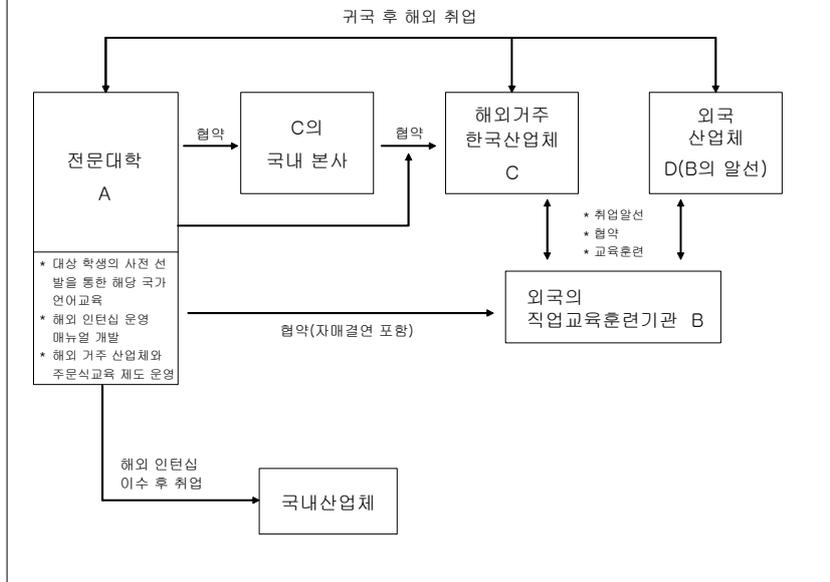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간의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과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법령과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산학협력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일관된 법적 체계 구축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혁신한다.
 - 정부의 정책은 다음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둠.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강화(현장실습 산업체 지원, 산업체의 협조체제 구축 등)
 - 교과부 관장의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개정
 - 학생의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노동부 관장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 개정
 -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이 특히 어려운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실습소를 산업체 현장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체의 맞춤형 교육제도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현재 운영 중인 KSS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켜 다음 단계에 따른 KSS 운영체제 구축
 - 1단계 : 「산업발전법」에 따라 선정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의 참여 유도. 참여협의체는 'KSS 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근로자, 경영주, 인사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사(수)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이 조직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 2단계 : 산업 구조, 기술 구조, 취업 구조 등의 노동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직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 파악
 - 3단계 : 직종별·직업군별로 직무요소 추출
 - 4단계 : 정부는 그 결과를 '국가표준직무기준'으로 공포하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자격제도의 검정기준, 사내훈련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도
- KSS 체제를 통해 다음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노력
 - 사회 내에서 일관되고 상호 연계된 틀에 따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자격제도를 운영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자격제도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결과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 구축
 - 산업계의 관계자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의 활성화 추구
 - 정부는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재정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중·장기 인력개발 계획 수립
 - KSS 체제를 우리나라와 타 국가 간 인력이동 시 이동대상 인력에 대한 상호 인정의 기본 틀로 준비

라. 직업교육의 국제화

-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부족한 학생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국가의 다원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킨다.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 환경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침
 - 유학생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지도·관리 방안
- 해외인턴십사업은 해외 취업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전문대학의 해외 인턴십 제도 운영 모형 (안)>



- 전문대학이 다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소재 한국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주문식 방식에 따라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 해외소재 한국기업에서 필요한 해당국가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 ODA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발굴과 이들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과 외국어 교육
 - World Bank, ADB, IBRD 등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사업
 - 2008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음식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전문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 타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확대에 따른 국가 간 인력이동에 대비하여 국가 간에 통용시킬 수 있는 국제직업자격을 개발한다.

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의 개념과 정책 목적을 설정한다.
 -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의 개념은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가는 행위’로 규정함. 그리고 구조조정은 내부적 구조조정과 외부적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
 -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목적은 ㉠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 ㉡ 직업교육기관 교육의 질 제고, ㉢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제고, ㉣ 부실 직업교육기관의 퇴출 등으로 설정

-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추진 시에는 학교 수 및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학과로의 재편도 적극 추진
-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정책에서는 다음 사안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 직업교육기관 간의 학과 교환 지원
 - 당해 직업교육기관의 재정적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
 - 계열 및 학과 교환으로 인해 과원 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타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
 -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지원
 - 공동의 충원 시행 등을 통한 학생모집(해외 유학생 포함)
 -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서관, 진로상담 서비스 등)의 공동 운영
 - 원격교육체제나 가상교육매체 또는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훈련이나 교원 간 공동연구
 -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과 적용. 평가도구에는 다음 내용 포함
 - 학생중심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교원의 자구적 노력
 - 기관장의 리더십
 - 지역주민의 의견
 - 사립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폐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

정 시 포함 내용

- 사립대학 폐지 근거 마련 및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의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 교직원 처리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사항
- 사립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폐지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발족과 운영

바.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 · 관리

-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만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범부처적 접근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직업교육 정책 총괄 및 직업교육기관 재정 지원
 - 노동부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및 감독, 근로감독, 산재보험 지원, 고용보험 지원(졸업생의 향상교육훈련 지원 포함)
 -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 산업체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및 인사관리 정책 유도과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 국방부 :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원, 군 특성화 고교 사업 지원
 - 행정안전부와 지역교육청 :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

공기관 추천채용제도 확대

-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 직업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제도와 우리나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정책 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 : 한국음식 세계화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조리 관련 학과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산업과 연관을 맺는 직업교육기관 관련 학과 지원
- 중앙 정부 정책 수립 후 지역의 지방자치기관 및 지역 교육청과의 정책 협력체제 구축
- 최근에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전문계 고교 육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다양한 중앙부처가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당해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국가차원의 능력인정 체제를 구축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 및 승진과 사회적 인정 및 가치부여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정책의 형성과정에 직업교육 현장의 담당 및 관련자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체제를 구축한다.
- 직업교육 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직업교육 혁신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 직업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혁신정책을 적극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 1 장 서 론

정태화 · 전중호 · 홍광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등 우리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직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정태화, 2005: 130-133).

첫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는 학교급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교육체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내용의 학습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직업교육 기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체제 및 제도의 차별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평생학습사회의 원리와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직업교육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그간에 정부가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기능과 계열 구조의 재검토, 산업계의 변화와 정부 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기관의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이 요청되어 왔으나, 산업계와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 부족과 정부 지원 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수요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기관의 교육 내용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해, 산업계와 직업교육기관 간의 괴리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중앙 부처의 정책 간 연계와 통합적 접근의 미흡으로 인해 단편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참여에 대한 유인가를 높이고,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직업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미흡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직업교육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걸쳐서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단편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특정의 학교급, 특정의 주제, 특정의 정부 정책 등에 관해 접근하여 왔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전망에 기초한 직업교육의 종합적인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고 향후 10년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직업교육의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탐색함을 주 목적으로 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연구의 목적인 직업교육의 혁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관한 답변을 구하고자 했다.

1.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실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 직업교육 관련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 그간 직업교육 혁신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실 진단의 결과는 미래의 직업교육 혁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가?

2. 직업교육 주변 환경 변화는 직업교육 혁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 변화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가?
-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은 어떠한가?
-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제도의 사례는 무엇인가?
- 주변 환경 변화 전망은 직업교육 혁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가?

3. 직업교육 혁신은 어떤 방향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은 어떠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가?
-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제3절 연구 방법과 추진 절차

1.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주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기초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문대학 교육지표'와 '전문대학 편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부터 수행된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집, 기관 발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그간 직업교육 혁신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혁신계획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사례 연구(Case Study)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관련 주요 혁신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에 관한 사례 연구는 국가별로 종합적인 동향보다는 한국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정책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다. 전문가 회의 개최

연구진행의 적절성 확보와 실천 가능한 혁신 방안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기법을 활용하였다.

1) 1차 회의

1차 회의는 2009년 5월 28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성태(명지전문대학 교수), 김수연(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부장), 송달용(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부학장), 손호일(군자공업고교 교사)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연구 방향의 적절성,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제안한 직업교육의 문제 진단 항목의 적절성,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 2차 회의

2차 회의는 2009년 6월 3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이광용(수원여대 교수), 최봉희(대덕대학 교수), 이창우(서울여상 교사), 이영민(전북기계공고 교사)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에 기초하여 직업교육의 문제 진단 항목의 적절성과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 3차 회의

3차 회의는 2009년 11월 4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연구진이 정책토론회에 제출할 최종 연구 결과의 초안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세 집단(전문계 고교 관계자, 전문대학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계 고교에서는 손호일(군자공업고등학교 교사)과 강연홍(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조영택(한림성심대학 교수)과 안규철(안산1대학 교수)이 참여하였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배동욱(한국물류협회 부장)과 김영무(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과장)가 참석하였다.

라.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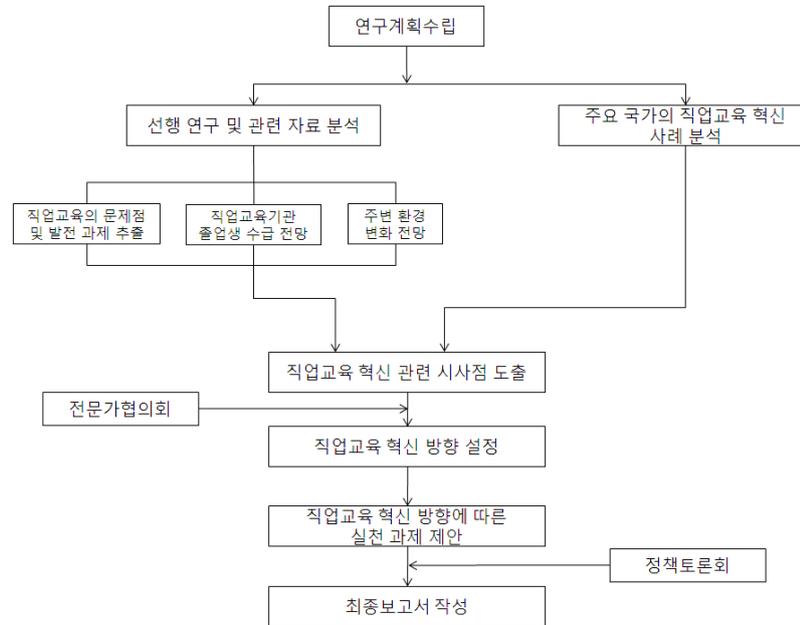
2009년 11월 11일에 그간 연구진이 개발한 혁신 방안에 관한 검증과 보완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학교현장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전문계 고교에서는 이창우(서울여상 교사)와 송달용(교과부 교육연구원)이 참석하였고, 전문대학에서는 김재홍(서강정보대학)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이효천(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 관계자로는 김진형(교과부 사무관)과 오병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장)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추진 체계 하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4절 용어 정의와 연구의 범위

1. 용어 정의

가. 직업교육의 혁신(革新)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naver 국어사전, 2009 : www.naver.com). 또한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동아 참국어사전, 2009)을 의미하거나, “묵은 조직, 풍속, 습관 따위를 바꾸거

나 버리고 새롭게 함”(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2009)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 정의에 따를 때,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보다 확연히 다른 것이어야만 하며, 혁신의 목표는 임의의 사람 및 사물의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한편 혁신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개혁(改革)은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동아 참국어사전, 2009)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2009)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 정의에 따를 때 개혁은 정치·사회적 변화 및 조직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연적인 변화 또는 발전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인위적으로 추진되므로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의 저항을 유발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naver 국어사전, 2009 : www.naver.com).

이상에서의 관점을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의 혁신은 기존의 직업교육체제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근본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과 모순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 및 제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변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8852호)」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법령에서의 정의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은 주로 교육과학부의 관할 하에 있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주로 노동부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 직업교육체제와 직업교육제도

위에서의 직업교육에 관한 용어 정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체제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학제, 수업연한, 유형 및 계열 구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제도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학사제도를 의미한다.

과거에 산업대학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대학과 유사한 외형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제외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적용하였다.

첫째, 학교중심의 직업교육, 즉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중심의 직업교육에 관해 접근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의 하위 주제에 따라서는 직업훈련과의 연계성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둘째,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실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이 연구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 10년(2000년~2009년)의 시기를, 그리고 직업교육의 혁신 시기는 향후 10년(2010년~2019년)을 그 시기로 설정하였다.

셋째,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에서는 학교급별로 접근하되, 직업교육의 혁신 방안 제안 시에는 학교급을 통합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정태화 · 전중호

직업교육의 현실은 직업교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선행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어떻게 적시하고 있는지, 그간에 정부가 추진한 직업교육 혁신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직업교육 혁신 방안 구상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1. 전문계 고교 교육

가. 학생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미래의 진로로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우선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1995년의 59.4%(일반고) : 38.4%(전문고)에서 2008년도에 76.8% : 22.0%로 변화되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교로의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의 비율은 1995년 51.4%(진학) : 33.6%(취업)에서 2008년 83.8% : 5.8%로 변화되어 고교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2-1>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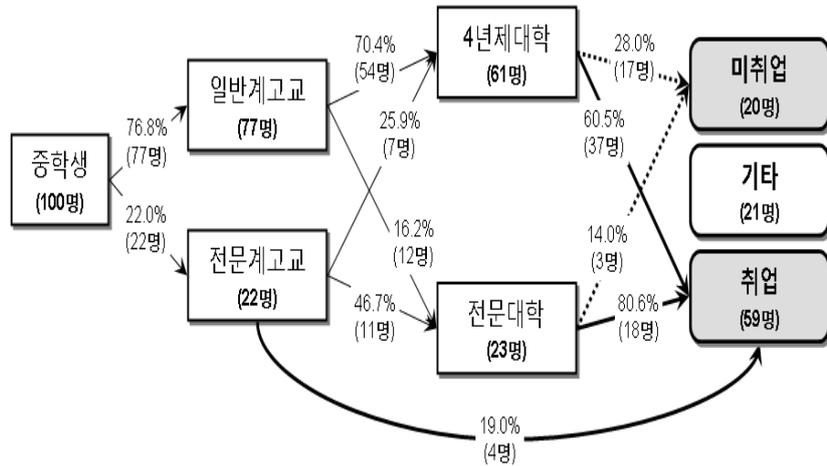
<표 2-1>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

구분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전문대	4년제
졸업자(명)	690,438	423,513	158,408	207,741	282,670
진학(%)	99.7 일반고 76.8 전문고 22.0 기 타 0.9	87.9 전문대 16.2 4년제 70.4 기 타 1.3	72.9 전문대 46.7 4년제 25.9 기 타 0.3	3.9	9.6
취업(%)	0.01	0.8	19.0	80.6	60.5
군입대(%)	-	0.1	0.6	1.4	1.9
무직+미상(%)	0.3	11.3	7.6	14.0	28.0

주: 진로경로별 비율은 전체 졸업자 대비 비율이며, 상급학교 유형별 진학률은 전체 진학자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의 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중학교 졸업생 100명 중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는 4명에 불과하고, 중학교 졸업생 100명 중 20명 정도는 고등교육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림 2-1]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



주: 1) 학교급 간 경로에서의 비율은 해당 단계의 진학 및 취업률임. 예를 들어 중학생→전문계고교의 22.0%는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전문계고교로 입학한 비율임.
 2) 학교급 간 경로에서의 팔호(인원수)는 학교급 간 진학 및 취업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0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각각의 교육경로로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가정한 값임. 이 자료는 중단자료가 아닌 '08년 기준의 진학 및 취업률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의 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계 고교 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소규모에 불과하고 대학 이후에 노동시장 진입이 집중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2-2〉와 같이 1990년도에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27만 3천 명으로 전체 고교 입학생의 약 35.8%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전문계 고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1995년 이후 신입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도에는 22만 1천 명(전체 고교 입학생의 34.8%)으로 줄었고, 2008년도 현재에는 17만 1천 명(전체 고교 입학생의 25.1%)으로 줄고 있다.

<표 2-2>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입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759,553	764,085	790,905	633,932	611,396	608,457	669,850	681,440
전문계 고교	306,535 (40.35)	273,134 (35.75)	343,799 (43.47)	220,841 (34.84)	173,039 (28.30)	167,917 (27.60)	174,220 (26.00)	171,156 (25.11)
일반계 고교	453,018 (57.27)	490,951 (64.25)	447,106 (56.53)	413,091 (65.16)	438,357 (71.70)	440,540 (72.40)	495,630 (73.99)	510,288 (74.8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 2-3>과 같이 1995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계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5년도에 42.2%였던 구성 비율은 2005년도에는 28.5%,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6%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진학 선호에 따른 중학생의 일반계 고교 진학과 이로 인한 전문계 고교에 대한 기피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계 고교의 혁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3>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재학생수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2,152,802	2,283,806	2,157,880	2,071,468	1,762,896	1,775,857	1,841,374	1,906,978
전문계 고교	885,962 (41.2)	810,651 (35.5)	911,453 (42.2)	746,986 (36.1)	503,104 (28.5)	494,349 (27.8)	494,011 (26.8)	487,492 (25.6)
일반계 고교	1,266,840 (58.8)	1,473,155 (64.5)	1,246,427 (57.8)	1,324,482 (63.9)	1,259,792 (71.5)	1,281,508 (72.2)	1,347,363 (73.2)	1,419,486 (74.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2-4>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참여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학급수	514	245	224	247	288	154	153	184	185	195
학생수	20,616	11,038	9,185	8,893	7,738	4,245	4,488	4,172	3,923	4,11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전문계 고교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위해 직업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4>에서와 같이 1995년도에 20,616명이었던 이들 학생들은 계속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4,488명으로 줄었으나, 2008년도(4,111명)에는 2007년도(3,923명)에 비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5년도의 153개 학급은 2008년도에 195개 학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계 고교에서 진로 전환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절하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계 고교생이 직업과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나친 대학진학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청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5>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계고교	4.3	3.2	3.9	4.4	2.6	2.6	3.0	3.5
일반계고교	2.7	1.9	1.4	1.1	0.8	0.8	0.9	1.1

주: 중도탈락률=(학업중단자 수/재적학생 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2-5〉에서와 같이 전문계 고교생의 중도탈락률은 일반계 고교생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왔다. 한편 1990년도에 3.2%였던 중도탈락률은 2005년도에 2.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5%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생의 중도탈락 원인을 분석하여 이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 졸업생의 진로

〈표 2-6〉에서와 같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2-6>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계고	졸업자	276,535	274,150	259,133	291,047	170,259	162,600	158,708	158,408
	진학자	36,910 (13.3)	22,710 (8.3)	49,699 (19.2)	122,170 (42.0)	115,164 (67.6)	111,601 (68.6)	113,487 (71.5)	115,407 (72.9)
	취업자	143,214 (51.8)	210,113 (76.6)	190,148 (73.4)	149,543 (51.4)	47,227 (27.7)	42,151 (25.9)	32,075 (20.2)	30,036 (19.0)
일반계고	졸업자	365,819	487,772	390,520	473,665	399,013	405,455	412,649	423,513
	진학자	196,827 (53.8)	230,121 (47.2)	284,251 (72.8)	397,641 (83.9)	352,344 (88.3)	354,647 (87.5)	359,478 (87.1)	372,102 (87.9)
	취업자	27,190 (7.4)	47,792 (9.8)	27,892 (7.1)	11,729 (2.5)	5,625 (1.4)	4,967 (1.2)	3,605 (0.9)	3,434 (0.8)

주: ()의 수치는 졸업생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990년도에 졸업자 중에서 8.3%였던 진학률은 2000년도에는 42.0%, 그리고 2008년도에는 72.9%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문계 고교의 수치 72.9%는 일반계 고교의 수치인 87.9%에 비해 15.0%밖

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1990년도에 76.6%였으나, 2000년도에는 51.4%, 그리고 2008년도에는 19.0%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현상은 그간 중국교육기관, 즉 취업준비기관으로서 인식되었던 전문계 고교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제기하여 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표 2-7>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공분야	122,448 (85.5)	174,057 (82.8)	158,483 (83.3)	115,028 (76.9)	33,834 (71.6)	30,136 (71.5)	23,568 (73.5)	21,737 (72.4)
다른분야	20,766 (14.5)	36,056 (17.2)	31,665 (16.7)	34,515 (23.1)	13,393 (28.4)	12,015 (28.5)	8,507 (26.5)	8,299 (27.6)
전 체	143,214	210,113	190,148	149,543	47,227	42,151	32,075	30,03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2-7>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199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도의 82.8%였던 전공분야 취업률은 2000년도에는 76.9%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72.4%로 감소하고 있다.

전공분야 취업률은 산업체 현황 대비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대변해 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문대학 교육

가. 학생

<표 2-8>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재학생 수는 1990년도의 23만 9천 명에서

2000년도에는 60만 명으로 증가(1990년 대비 2.5배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50만 3천 명(1990년 대비 2.1배 증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대학의 재학생수는 1990년도의 77만 7천 명에서 2000년도에는 115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1990년 대비 1.5배 증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127만 9천 명(1990년 대비 1.6배 증가)에 이르고 있다.

<표 2-8>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 대학	입학 정원 수	200,430	130,520	215,470	294,175	266,090	247,604	238,069	240,374
	입학자 수	108,483	130,670	223,689	318,135	251,283	254,433	255,395	249,291
	재학생수	202,382	239,361	412,533	599,789	530,149	527,614	519,698	503,397
일반 대학	입학 정원 수	639,910	196,550	253,180	314,410	323,537	321,107	319,882	321,752
	입학자 수	201,934	196,397	253,605	321,399	326,284	335,581	342,250	342,916
	재학생 수	706,321	776,731	897,899	1,157,219	1,263,932	1,290,680	1,318,029	1,278,97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양 집단의 합계에서 전문대학 재학생의 구성비는 1990년도의 23.6%에서 2000년도에는 34.1%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28.2%에 이르고 있다. 이 비율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2-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생 총원율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전문 대학	입학정원	266,090	247,604	238,069	233,729
	정원 내 입학자 수	218,783	219,354	219,411	214,690
	총원율	82.2	88.6	92.2	91.9
일반 대학	입학정원	323,537	321,103	319,882	321,752
	정원 내 입학자수	308,650	313,684	317,208	313,505
	총원율	95.4	97.7	99.1	97.4

주: 학생총원율=(당해년도 정원내 입학생수/당해년도 입학정원 수)×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간추린 교육통계(<http://cesi.kedi.re.kr/index.jsp>).

<표 2-9>에 따르면 두 가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05년도 이후 전문대학의 입학생 총원율은 2007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08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입학생 총원율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원율이 낮은 대학이 다수 존재하여 이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0>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생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도의 위탁생은 4만 6천 명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위탁업체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00년도의 위탁업체 수는 2만 7천 개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1만 1천 개로 감소하였다.

전문대학의 위탁생 제도 운영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성인 학생의 확보, 산업체 현장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의 제공, 전문대학과 산업체와 협

력체제 유지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10> 전문대학 위탁생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위탁업체 수	27,291	24,008	19,037	12,324	10,967
위탁학생 수	46,159	45,249	42,133	40,126	36,197
재학생 수	534,779	521,588	511,027	508,049	500,483
재학생 대비 위탁학생 비율	8.6	8.7	8.2	7.9	7.2

주: 1)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2) 위탁교육 = 산업체위탁교육 + 군위탁 교육.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육지표, 각 연도.

그간에 전문대학은 고교 졸업생만이 아니라 성인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노력으로 그간에 전문대학은 26세 이상의 성인학생을 꾸준히 확보하여 왔다. 1990년도에 전체 학생의 2.0%였던 성인학생 비율은 2000년도에는 7.4%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13.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전문대학이 성인학생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사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 2-11> 전문대학 학생의 성인 연령 비율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242,114 (100)	323,825 (100)	569,820 (100)	913,273 (100)	853,089 (100)	817,994 (100)	795,519 (100)	771,854 (100)
26세 미만	235,352 (97.2)	317,444 (98.0)	552,855 (97.0)	846,146 (92.6)	759,732 (89.1)	717,232 (87.7)	691,552 (86.9)	668,661 (86.6)
26세 이상	6,762 (2.8)	6,381 (2.0)	16,965 (3.0)	67,127 (7.4)	93,357 (10.9)	100,762 (12.3)	103,967 (13.1)	103,193 (13.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따라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전문대학에서 학사가 배출되었다. 이 제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 근로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제공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제도는 수업연한을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기능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 2-1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입학정원	주간	-	3,351	4,860	6,433	5,922
	야간	-	725	1,102	1,187	540
	소계	-	4,076	5,962	7,620	6,462
운영실적	주간	0	212	255	20	384
	야간	79	474	270	1,473	2,085
	소계	79	686	525	1,493	2,469

주: 1) 재학생 기준.

2) 전년도 3. 1~해당년도 2. 28. 기준(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2005. 3. 1~2006. 2. 28.).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육지표, 각 연도.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현재 입학정원은 6,462명이었으나 운영실적은

2,469명으로 나타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이 제도에 관한 개선 대책 탐색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1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대학	7.2	2.6	2.9	4.9	7.8	7.8	8.5	8.5
일반대학	2.2	1.5	2.0	3.8	4.2	4.1	4.1	4.9

주: 1) 중퇴율 = (제적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2) 중퇴율은 재적학생 수 대비 제적된 자(자퇴 포함)의 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3>에 따르면 두 가지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문대학 재학생의 중퇴율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4.9%였던 중퇴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8.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 재학생의 중퇴율은 일반대학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양자 간의 비율은 4.9% : 3.8%였으나, 2008년도에는 8.5% : 4.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생의 경우도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졸업생의 진로

<표 2-14>에 따르면 두 가지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자 비율은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도에 54.0% : 48.2%였던 양 집단의 비율은 2000년도에는 71.6% : 48.7%로 나타나고, 2008년도에는 80.6% : 60.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1990년도에 54.0%였던 취업자 비율은 2000년도에는 71.6%로 증가하고, 다시 2008년도에는 80.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전문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와 개선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표 2-14>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 대학	졸업자	73,927	87,131	143,075	223,489	228,763	222,973	215,040	207,741
	진학자	6,991 (9.5)	6,718 (7.7)	9,972 (7.0)	14,817 (6.6)	12,221 (5.3)	9,399 (4.2)	8,234 (3.8)	8,092 (3.9)
	취업자	29,566 (40.0)	47,094 (54.0)	88,843 (62.1)	159,960 (71.6)	177,919 (77.8)	177,364 (79.5)	173,804 (80.8)	167,526 (80.6)
일반 대학	졸업자	118,584	165,916	180,664	214,498	268,833	270,546	277,858	282,670
	진학자	12,278 (10.4)	12,782 (7.7)	16,500 (9.1)	26,000 (12.1)	28,652 (10.7)	27,016 (10.0)	27,412 (9.9)	27,072 (9.6)
	취업자	48,552 (40.9)	79,975 (48.2)	97,290 (53.9)	104,371 (48.7)	154,542 (57.5)	162,174 (59.9)	168,254 (60.6)	170,878 (60.5)

주: 1) 졸업자 수 = 진학자+취업자+무직자+입대자+미상.

2) ()의 수치는 졸업생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5>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 대학	전공분야	23,486	38,361	69,831	119,216	127,118	128,815	125,311	120,963
	다른 전공	6,070	8,733	19,012	40,744	50,801	48,549	48,493	46,563
	계	29,556	47,094	88,843	159,960	177,919	177,364	173,804	167,526
	일치도	79.5	81.5	78.6	74.5	71.4	72.6	72.1	72.2
일반 대학	전공분야	36,730	58,143	67,217	69,398	108,019	111,692	115,424	118,226
	다른 전공	11,822	21,832	30,073	34,973	46,523	50,482	52,830	52,652
	계	48,552	79,975	97,290	104,371	154,542	162,174	168,254	170,878
	일치도	75.7	72.7	69.1	66.5	69.9	68.9	68.6	6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졸업생의 전공분야로의 취업은 교육의 질을 대변해 주는 지표로서 인정되고 있다. <표 2-15>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일반대학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내부에서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199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도에 81.5%였던 비율은 2000년도에는 74.5%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72.2%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대학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95년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볼 때, 전문대학의 전공분야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 확보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16>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41.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1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문대학	51.2	44.1	44.5	44.5	41.6
일반대학	32.2	29.5	28.6	28.3	23.6

주: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재학생 수/총 교원 수(총 학장+전임교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보도자료(2008. 11. 20).

라. 산학협동

<표 2-17>에 따르면 전문대학 취업예정자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은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2000년도에 73,435개였던 현장실습업체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0,183개로 줄었다. 둘째, 2000년도에 174,274명이었던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61,550명으로 줄었다. 셋째,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자는 2000년도에 35,559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7,579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은 2000년도 20.4%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12.3%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학협력 하에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으로의 연계 고리가 잘 작동되지 않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개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2-17> 전문대학 현장실습 및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실습업체 수 (A)	73,435	73,623	69,846	65,411	30,183
참여학생 수 (B)	174,274	145,030	135,369	132,949	61,550
취업자 수 (C)	35,559	21,915	17,723	16,847	7,579
실습업체당 참여학생 수(B/A)	2.30	1.97	1.94	2.03	2.04
참여학생의 취업률(C/B)	20.4	15.0	13.0	12.7	12.3

주: 자료는 전년도 3. 1.~해당년도 2. 28. 기준(위탁생 제외)이며, 전체 152개 대학 중 사립 대학 2개를 제외한 통계임.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육지표, 각 연도.

<표 2-18> 전문대학과 산업체 간 인적교류 실적 변화 추이

(단위: 건,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교류건수 (학교→ 기업)	기술지도	4,423(30.6)	3,763(37.9)	3,333(41.6)	1,990(33.1)	2,524(28.1)
	특강	2,650(18.4)	2,134(21.5)	1,788(22.3)	1,514(25.2)	2,046(22.8)
	자문위원	2,966(20.6)	2,572(25.9)	1,732(21.6)	1,782(29.6)	2,233(24.9)
	겸임교수	3,164(21.9)	-	-	-	-
	기타	1,229(8.5)	1,460(14.7)	1,155(14.4)	728(12.1)	2,168(24.2)
	계	14,432(100.0)	9,929(100.0)	8,008(100.0)	6,014(100.0)	8,971(100.0)
	참여교수 수		3,521	2,957	1,610	2,346
	교수 1인당 교류 건수	2.7	2.8	2.7	3.7	3.8
교류건수 (기업→ 학교)	전임 교수	1.7	0.9	0.7	0.5	0.8
	겸임교수	-	7,756(85.6)	7,945(88.0)	3,712(82.6)	1,601(28.6)
	기타	-	1,304(14.4)	1,080(12.0)	782(17.4)	5,590(71.4)
계	-	9,060(100.0)	9,025(100.0)	4,494(100.0)	7,191(100.0)	

주: 전임교수 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자료는 전년도 3. 1.~해당년도 2. 28.일 기준으로 전체 152개 대학 중 사립 대학 2개를 제외한 통계임.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육지표, 각 연도.

전문대학과 산업체 간의 인적교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지향적인 전문대학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8〉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가 산업체를 지원하는 활동(기술지도, 특강, 자문위원 등)은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체 관계자의 대학 참여 활동(겸임교수 등) 실적도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적교류를 통한 산학협력 활동이 잘 작동되지 않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개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 구조조정 : 입학생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폐교 규모 추산

전문대학 입학생 미충원율의 확대에 따라 전문대학 폐교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미충원 예상 인원 증가로 인해 폐교가 예상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추계한 연구 결과(정태화 외, 2006)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추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하였다. 첫째, 고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5년도의 비율인 82.1%를 적용하였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 예상 인원은 2006년 미충원 규모(구성비: 대학 36.9%, 전문대학 63.1%)를 적용하였다. 넷째, 폐교 예상 전문대학의 숫자는 입학정원이 2,000명인 대학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상에서의 가정에 따른 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0년에는 고등교육기관 입학 대상자가 약간 증가하지만 38,041명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178,432명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충원 예상인원을 바탕으로 폐교가 예상되는 전문대학의 숫자는, 입학정원 2,000명 규모의 전문대학이 2020년도에는 56.3개로 추산된다. 이

리한 추산 결과가 해당 연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일부 한계점 (성인학생 확보의 결과 반영 미고려, 정부의 전임교원 확보율 추진에 부응하여 정원을 사전에 감축하는 상황 발생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혁신이 전문대학 전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9> 고등교육기관의 폐교 예상 추산 결과

(단위: 명, 개)

연도	2000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20년	
고등교육기관 입학대상자 (18세 인구)	827,000	624,000	611,000	679,000	508,000	
고등교육기관 입학대상자	-	512,304	501,631	557,459	417,068	
고등교육기관 정원	일반대학	352,100	359,451	347,996	347,996	347,996
	전문대학	294,175	266,090	247,504	247,504	247,504
	계	646,275	625,541	595,500	595,500	595,500
미충원 (예상)인원	일반대학	16,092	32,243	16,416	14,037	65,841
	전문대학	12,963	46,978	28,028	24,004	112,591
	계	29,055	79,221	44,444	38,041	178,432
폐교예상숫자 (정원 2,000명 기준)	일반대학	-	-	-	7.0	32.9
	전문대학	-	-	-	12.0	56.3
	계	-	-	-	19.0	89.2

주: 1) 일반대의 인원은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한 인원임.

2) 2000~2006년은 미충원 실제인원, 2010~2020년은 미충원 예상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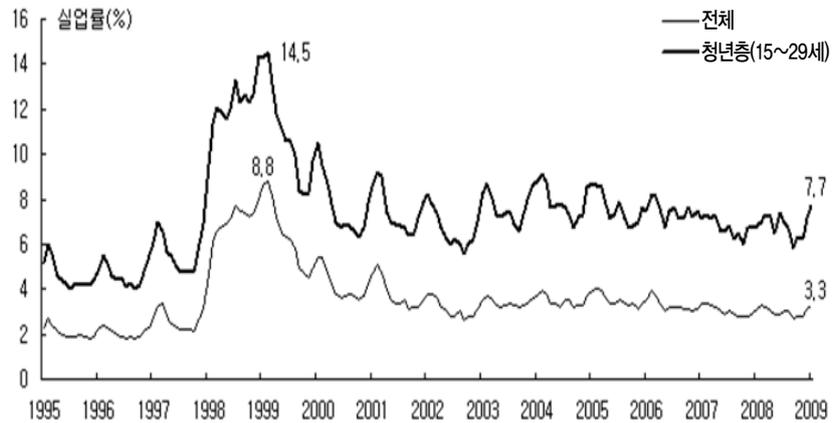
자료: 정태화 외(2006), 19쪽.

3. 노동시장

가. 청년실업과 하향취업

우리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그림 2-2]와 같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림 2-2]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취업과 역류입학의 증가는 개인적·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향취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도에 9급 세무직 공무원 661명을 공개 채용한 국세청의 경우 과거 고졸(高卒)직으로 인식하던 이 시험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110명이나 응시했다(동아일보, 2006. 11. 23). 2007년도에 포항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결과, 10명 모집에 481명(남자 478명, 여자 3명)이 접수해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학력도 대졸 이상이 9%인 41명(중퇴 9명 포함), 전문대졸은 25%인 123명(중퇴 7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경주시의 경우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명 모집에 737명(남자 628명, 여자 109명)이 지원해 4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에는 전문대졸 이상이 34%인 253명이었다(세계일보, 2007. 02. 27). 2009년도에 실시된 환경미화원 시험에서 광주 북구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55%가 그리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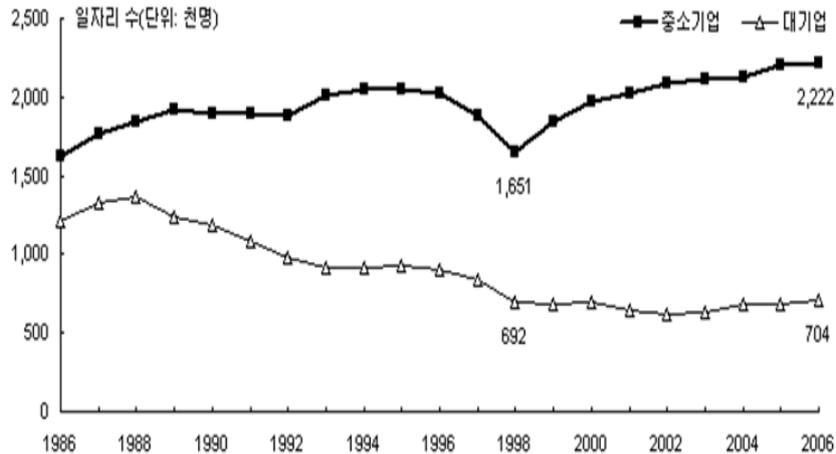
울 강서구의 경우 응시자의 37%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로 나타났다(정태화 외, 2009a: 1).

한편 대학 졸업자가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역류입학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보건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재입학이 2005년 605명을 시작으로 2006년 620명, 2007년 765명, 올해 780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사 1명 등 석사 15명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박사 1명, 석사는 10명이 지원했다. 영진전문대학의 경우도 2006년 186명이었던 고학력 지원자가 2007년 238명, 2008년 236명으로 3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 2009년에도 165명(정시모집 제외)이 지원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영남이공대학은 2005년 64명에 불과했던 고학력 지원자가 2006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105명이 지원한 이후 2007년 107명, 2008년 121명으로 늘었다(매일신문, 2008. 12. 24). 한편 기존에 주로 고교 졸업자가 입학한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사과정에 정원(6천 명) 대비 전문대학졸 이상 입학자 비율은 2006년 37.1%에서 2008년 41.6%로 증가하였다(정태화 외, 2009a: 1).

나. 중소기업 인력 부족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취업과 역류입학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림 2-3]과 같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997년도의 189만 개에서 2006년도에 220만 개로 늘었으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조선일보, 2009.01.28).

[그림 2-3]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한편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인력부족률이 4.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능직 3.69%, 단순노무직 2.98% 등으로 나타나,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인력수급 체계를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표 2-20>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구분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생산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부족률(%)	2.68	0.72	4.33	2.89	3.69	2.98	1.72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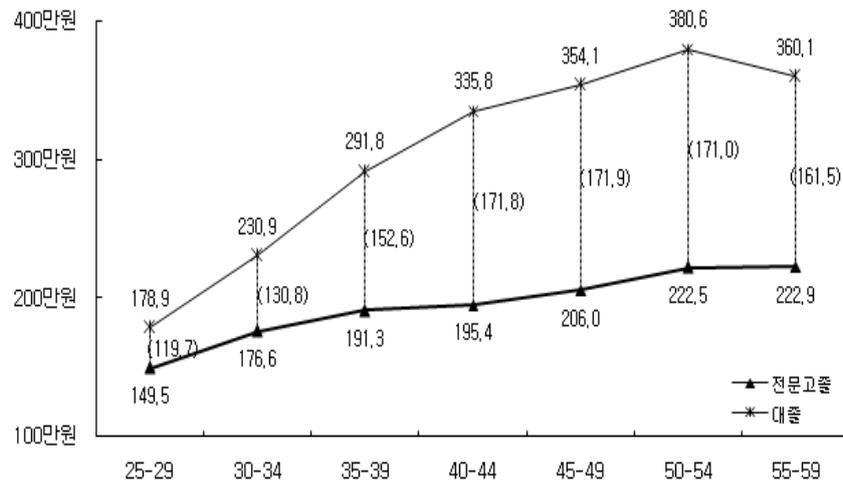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2008), 54쪽.

다. 학력별 임금 격차

전문계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연령이 증가하면

서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 2-4]에서와 같이 25~29세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1.2배에 불과하나 40세 이후에는 1.7배로 그 격차가 확대된다. 이와 같이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른 임금구조는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려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4] 연령별 · 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



주: 괄호는 전문고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 자료.

학력별 임금격차의 문제는 역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과정에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2008 : 91)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적합한 인력이 없음(52.8%), 임금조건이 맞지 않음(34.9%), 작업환경 열악(29.8%)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력별 임금격차의 문제는 이직과의 연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08 : 71)에 따르면 <표 2-21>에서와 같이 최근 1년 동안

종사자들이 이직한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자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6.9%, 대졸 4.8%, 석사 이상 4.7%, 그리고 중졸 이하가 3.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학력별 최근 1년 동안 이직 및 자발적 이직 여부

(단위: 명,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석사 이상	전체
최근 1년간 이직여부	예	159,767 (3.6)	664,669 (6.9)	219,171 (8.0)	264,007 (4.8)	35,847 (4.7)	1,343,461 (5.8)
	아니오	4,289,597 (96.4)	8,953,634 (93.1)	2,528,925 (92.0)	5,254,721 (95.2)	732,070 (95.3)	21,758,947 (94.2)
	전체	4,449,364 (19.3)	9,618,303 (41.6)	2,748,096 (11.9)	5,518,728 (23.9)	767,917 (3.3)	23,102,408 (100.0)
자발적 이직여부	예	115,612 (72.4)	544,771 (82.0)	187,694 (85.6)	224,078 (84.9)	29,812 (83.2)	1,101,967 (82.0)
	아니오	44,154 (27.6)	119,897 (18.0)	31,478 (14.4)	39,930 (15.1)	6,035 (16.8)	241,494 (18.0)
	전체	159,766 (11.9)	664,668 (49.5)	219,172 (16.3)	264,008 (19.7)	35,847 (2.7)	1,343,461 (100.0)
동일직업 근무여부	동일	90,051 (10.8)	363,513 (43.5)	143,780 (17.2)	204,551 (24.5)	34,696 (4.1)	836,591 (100.0)
	비동일	67,597 (13.2)	259,585 (50.8)	87,240 (17.1)	89,365 (17.5)	7,329 (1.4)	511,116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71쪽.

라. 산업체의 군필자 선호로 인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 취업 애로

산업체의 군필자 선호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체 인사담당자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시 기능 수준 미흡(32.1%)보다 군복무 문제(33.9%)가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박동열·윤영한, 2007 : 93).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태화 외, 2009a: 17). 이 제도 유지의 중요성은 중소기업청(2008 : 91)의 조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에 참여한 중소기업체는 22.8%이며, 그 중 외국인인력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1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2.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1.4%,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표 2-22>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가 큰 정부정책

(단위: %)

구 분	구성비
최근 1년 동안 정부의 인력지원정책 활용함	22.8
산업기능요원제도	2.5
외국인력제도(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18.8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0.8
인력채용패키지사업(구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0.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1.4
유급휴가훈련	0.3
능력개발시설, 장비 대부	0.3
학습조직화지원사업	0.2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1.0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1.3
기타	0.0
활용한 적 없음	77.2

주: 기 활용한 정부지원정책의 유형에 대한 응답은 중복응답.

자료: 중소기업청(2008), 91쪽.

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중소기업청(2008 : 87)에 따르면 <표 2-23>과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중 22.0%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 비해 3.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3>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용함	24.2	24.7	19.8	25.7	22.0
고용하지 않음	75.8	75.3	80.2	74.3	78.0

자료: 중소기업청(2008), 87쪽.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표 2-24>에서와 같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 곤란'이 57.8%로 가장 높고, '인건비 절감 필요' 35.8%, '인사관리의 편리성' 5.0%, '노조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5%였다.

<표 2-24>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유	내국인 근로자 구인곤란	인건비 절감	인사관리의 편리성	노조문제 걱정 불필요
백분율(%)	57.8	35.8	5.0	1.5

자료: 중소기업청(2008), 87쪽 재구성.

한편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현행 수준의 유지'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활용확대'가 30.1%, '활용축소'가 1.9%로 나타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97.3%로 집계된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활용 안 함'이 80.8%, '신규활용'이 19.2%로 나타났다.

<표 2-25>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계획

(단위: %)

구 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체				외국인 노동자 비고용 사업체	
	활용확대	현행수준유지	활용축소	활용 안 함	활용 안 함	신규활용*
전국	30.1	67.2	1.9	0.8	80.8	19.2
5~19인	27.1	71.8	0.8	0.3	80.4	19.6
20~49인	36.6	60.0	2.0	1.3	81.2	18.8
50~99인	28.6	63.5	6.3	1.6	86.7	13.3
100~299인	29.0	61.8	5.9	3.3	87.8	12.2

주: 신규활용*은 미활용기업의 경우임.

자료: 중소기업청(2008), 88쪽.

중소제조업체의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은 직업교육 특히 전문계 고교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관련된 직업교육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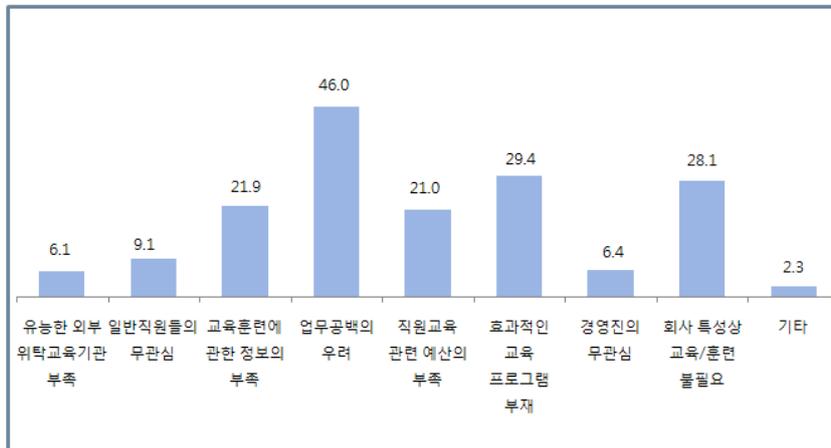
바.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부족

근로자가 산업체에서 전문가로 발전하고자 하거나 자신에게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비용 부족,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작업 중단에 어려움, 우수 프로그램의 부족, 교육 후 이직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태화 외, 2009a: 7)

한편 근로자는 [그림 2-6]에서와 같이 시간 부족(81.6%), 높은 교육훈련 비용(33.8%)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2-5]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훈련 미 실시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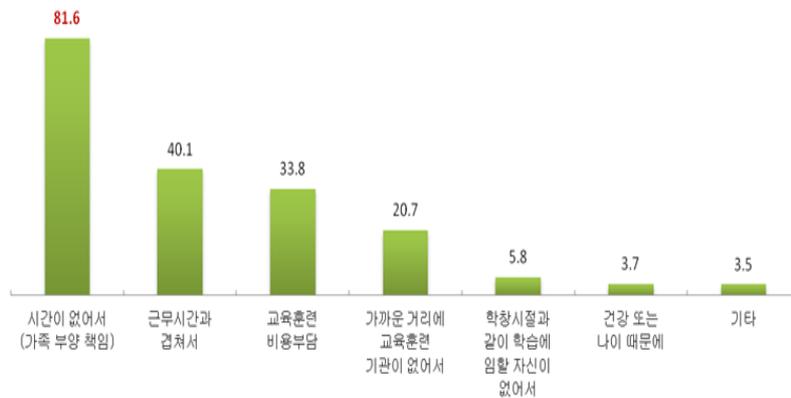


주: 중복응답.

자료: 중소기업청(2008), 116쪽.

[그림 2-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11.29), 보도자료.

한편 산업체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제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의 접근가능성 부족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2-26>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표 2-26>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단위: %)

구분	사내 훈련	기업 부설 기관	산업 교육 전문 기관	대학	민간 훈련 기관	공공 훈련 기관	기타
'05년 훈련 받은 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자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8쪽.

최근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노동부의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폴리텍대학을 포함한 43개 대학(2008년에 774.9억 원 지원)에서 재직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자는 7개 대학(2008년 7억 원 지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정태화 외, 2009a: 9).

성인근로자 대상의 계속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기존의 고교 졸업생 위주의 학생 확보에서 벗어나 성인 학습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학사운영도 성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4.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가. 연계교육과 취업약정제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은 교육개혁위원회가 1996년 2월 9

일에 발표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 전문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중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단계의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호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계교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과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제5조)에서 연계교육 이수 학생의 선발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변호걸 외, 2001: 28). 또한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연계교육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그 성과를 기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연계교육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 제안된 '협약학과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정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65개 전문대학, 225개 전문계 고등학교가 참여했고(박세중, 2005: 22-23), 2004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340개교, 전문대학 152개교가 참여하였다(교육혁신위원회, 2005: 19). 그리고 1999년~2003년 기간에 연계교육을 위해 투입된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30억,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이길순 외, 2008: 29). 이어서 기존의 연계교육 정책이 협약학과 정책으로 변경되면서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문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부터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내에 포함되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이길순 외, 2008: 29). 2006년에는 44개의 사업단에 40개교 전문대학, 150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326개 산업체가 참여하여 2008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았다(김태국, 2008: 66). 한편 2007년부터 협약학과 정책이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정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2가지 모형으로 운영되며, 첫 번째 모형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전문대학 진학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형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연계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모형이다(김태국, 2008:

65-66). 이 제도는 기존의 주문식교육과 연계교육을 동시에 접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42개 사업단(38개 전문대학, 262개 전문계고 참여), 2008년 61개 사업단(전문계고 168개교 참여)이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다(이길순 외, 2008: 30, 교육과학기술부, 2008: 3, 옥준필, 2008: 58-59). 그리고 2009년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내에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이 연계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교육기관 교원 연수과정 운영

이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7>에서와 같이 직업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되며, 노동부 산하에 공공훈련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있다. 그리고 민간훈련기관은 훈련법인, 노동부 지정시설, 학원 등 기타 기관으로 구성되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훈련, 재직자위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 중 민간훈련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없으며,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과정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27> 최근 5년간 직업훈련기관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 상공 회의소	한국 기술교육 대학교	소계	직업전문학교		기타	소계
						훈련 법인	노동부 지정 시설		
2004	3,569	44	8	1	53	63	627	2,826	3,516
2005	3,174	44	8	1	53	56	612	2,453	3,121
2006	3,877	40	8	1	49	68	687	3,073	3,828
2007	4,931	40	8	1	49	67	756	4,059	4,882
2008	5,154	40	8	1	49	70	873	4,162	5,105

주: '04~'05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기관 수는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기관 수 합계임.

자료: 노동부(2009), 내부 자료.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대학법 제3조(기능대학의 설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공공직업훈련시설)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0년 창원기능대학(현 폴리텍 VII대학)을 개교한 이래 전국에 11개 대학(38개 캠퍼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조직원은 '09년 5월 현재 1,906명이며 이 중에서 교수가 1,302명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은 '0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통합하면서 개명하였다. 폴리텍대학(polytechnics)은 종합기술전문학교라는 뜻으로 기존의 산업인력양성중심에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변화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직업교육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생활기술훈련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훈련대상이 일반근로자, 공무원 등 제한이 없는 관계로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원의 훈련인원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담당자 면담을 통해 확인된 규모는 전체 참여자의 30~40% 정도로 파악되었다(김정우, 20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근로자의 전문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고 교수 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훈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2년에 노동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2009년 현재에는 3,867명이 재학 중에 있다.

이 기관에서 직업교육기관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능력개발교육원의 기술연수과정과 HRD연수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통한 전문계 교원의 최근 2년간 참여 현황은 <표 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28>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최근 2년간 연수 실적

구분	대상 구분	교육 시간	2007년		2008년	
			수료인원	비율	수료인원	비율
기술 연수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31	619	19	812	22
	공공직훈 훈련교사	31	645	20	506	14
	민간직훈 훈련교사	31	284	9	395	11
	전문계고 교원	31	1,557	49	1,860	51
	산업체 등 기타	31	87	3	54	1
	합계	-	3,192	100	3,627	100
HRD 연수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12	12	1	123	4
	공공직훈 훈련교사	12	812	30	739	24
	민간직훈 훈련교사	12	881	33	1,016	33
	전문계고 교원	12	490	18	677	22
	산업체 등 기타	12	504	19	524	17
	합계	-	2,699	100	3,079	100
계	-	5,891	100	6,706	100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09), 내부자료.

<표 2-28>에 따라 전문계고 교원대상 훈련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는 총 2,047명으로 기술연수과정에 1,557명(전체 교육인원의 49%)이, 그리고 HRD연수과정에 490명(전체 교육인원의 18%)이 참여하였다. 2008년도에는 총 2,537명으로 기술연수과정에 1,860명(전체 교육인원의 51%)이 참여

하여 전년에 비해 인원과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HRD연수과정에도 677명(전체 교육인원의 22%)이 참여하여 전자와 같이 증가하였다.

다. 전문계 고교의 공동실습소 운영 현황

전문계 고교의 공동실습소는 2008년 현재 공업계열 공동실습소 29개소, 농업계열 공동실습소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2-29> 전국의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 설치 운영 현황(2008)

계열·전공 지역		공업계				농업계
		기계	전기·전자·통신	금속·자동차	섬유·화공	농기계
광역시 소재	서울	서울기계공고 경기기계공고				
	부산	부산공고	부산전자공고			
	인천	인천기계공고				
	대전	충남기계공고				
	대구		경북기계공고		대구공고	
	광주	광주공고				
	울산	울산공고				
도 소재	경기	이천제일고				여주자연농고
	강원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	강릉농공고			홍천농고
	충북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청주농고
	충남	연무대기계공고 천안공고				공주생명과학고
	경북	경주공고 금오공고		경북자동차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	진주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삼천포공고			경남자연농고
	전북	삼례공고 이리공고	전주공고			김제자연농고
	전남	담양공고				전남생명과학고
	제주	한림공고				제주관광산업고
	계(총 38개소)		22	5	1	1

자료: 김진모(2008), 34쪽.

한편 김진모(2008: 37)의 연구에 따르면, <표 2-30>과 같이 공동실습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7년 기준으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30> 전국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 개설 수	실시 횟수	교육과정당 평균실시 횟수	입소생 수	1회당 평균 입소생 수	1회당 평균 교육시간
전문계고 학생 첨단기술교육	39 (43.3)	839 (78.9)	21.5	24,420 (81.9)	29.1	36.8
전문계고 교사 직무연수	12 (13.3)	23 (2.2)	1.9	578 (1.9)	25.1	35.4
일반계고 및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	25 (27.8)	178 (16.7)	7.1	4,140 (13.9)	23.3	7.91
일반계고 및 중학교 교사 직무연수	7 (7.8)	9 (0.8)	1.3	439 (1.5)	48.8	30.7
지역주민 및 산업체 종사자 대상 기술교육	7 (7.8)	14 (1.3)	2.0	255 (0.9)	18.2	6.0
계	90 (100.0)	1,063 (100.0)		29,832 (100.0)		

자료: 김진모(2008), 37쪽.

라. 전문대학의 국내·외 유학생 및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표 2-31>에서와 같이 2009년에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3개 학교에 5,543명으로 1개 대학당 54명에 이르고 있다(일반대학은 191개교에 53,284명으로 1개교당 279명).

<표 2-31>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현황 비교(2009)

(단위: 명)

외국인 학생 수	전문대학(103개교)	일반대학(191개교)
전 체	5,543	53,284
평 균	54	279

- 주: 1) 전문대학의 경우 폴리텍대학은 제외하였음.
 2) 일반대학의 경우 본교와 캠퍼스를 분리하여 산출하였음.
 3) 외국인 학생 수: 정규 학위과정생+어학연수생+교환학생+방문학생+그 외 기타 연수생(자료기 준일: 2009년 4월 1일).
 자료: 대학알리미 공시자료(<http://www.academyinfo.go.kr/>)에서 재구성.

한편 2008년 기준으로 해외로 유학을 간 전문대학 졸업생은 9,632명에 이르고 있다(<표 2-32> 참조).

<표 2-32> 전문대학 졸업생의 해외유학생 현황(2008)

(단위: 명, 천 원)

구 분	2008년
재학생 해외유학생 수 현황	9,632
지원 현황	13,337,032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8), 90쪽.

<표 2-33>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에 따른 파견학생 현황(2005~2008)

(단위: 개교, 명, 천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참여대학 수	45	39	65	83	232
파견학생 수	368	282	458	690	1,798
국고지원금	1,930,383	1,933,731	1,942,999	2,876,863	8,683,976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보고서, 각 연도.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파견학생은 2008년도에 1,79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05년

에는 약 19억 원을, 그리고 2008년에는 약 8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2-33〉 참조).

제2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2000년도 이후에 수행된 직업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직업교육 혁신 방안의 구상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계 고교

정철영(2000)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 현황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의의와 장점을 소개한 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그 원인 및 발전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높은 교육열,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공급자 중심의 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자긍심의 함양과 비전 제시의 미흡,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 또는 개선을 위한 유연성 결여, 관련 제도 및 교육기관의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계속교육기회의 제도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행·재정적·사회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철영 외(2000)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

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인력 구조 및 관리 체제의 현황,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의 배경, 개편 방안 및 추진 전망,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의 문제점, 선진 외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체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상당수의 실업교사들이 과원으로 남게 되거나 신설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원교원 대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및 학급 증설과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를 통한 학생 수 조절,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 연수 실시, 과원교원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교육과정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 시·도별 또는 공·사립 간 실업교사의 교류 활성화, 과원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에 대한 적극 수용과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족교원 및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교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장의 재량을 통한 산업체 경력자의 기간제 교사 임용, 학교장 추천에 따른 시도 교육감의 (준)교사 자격 부여 및 임용, '기타' 교원자격을 신설을 통해 소정의 심사절차 후 새로운 표시과목 자격 부여와 임용, 기존 교사 대상의 일정 연수 후에 새로운 표시과목 자격을 부여 및 임용, 관련 분야의 실기교사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2003)는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중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 및 문제점, 주요국의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 및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생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직업선호도의 편중, 그리고 전문계 고교의 위상 약화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강

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 확보, 산학협력 기구와 인턴십 제도의 활성화,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향상과 내실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영조(2003)는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발전방향 탐색'이라는 과제를 통해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상업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으로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교육정책의 부재, 교육과정의 혼재 및 혼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상업계 교원 양성의 개선,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5)는 '직업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의 발전 과정, 직업교육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 교육의 발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감소와 중도탈락생 증가, 입학생의 기초적인 학습능력 부족과 전문교과 부분의 지식 습득 성취도 저하,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미흡, 지나친 전공세분화와 교과목 수 과다로 인한 학생의 수업 부담,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실기 지도 능력 부족,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 부족, 과원교사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교사의 신분 불안 가중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업계 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체제의 확대를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실업계 고교의 기능인력 양성 기능과 계속교육 기능 동시 수행,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극 활용한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의 적극 지원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 범위 확대, 계열 간 이동이 허용되는 통합형 고교 운영의 적극 지원, 부처 간·정

책 간 협력체제의 확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안치민(2006)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실업계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계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동안 실시되었던 실업교육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 및 교육체제와 활성화 정책, 특성화 고등학교 및 통합형 고등학교의 운영 현황과 체제,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문제점으로 제도적 개선의 부재, 실업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진로 선택 및 진로 교육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능력 강화, 선진국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정원 하향 조정, 「2·1체제」 운영 확대 실시, 특성화 및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6)는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산학협력의 개념과 운영 원리,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의 문제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교의 산학협력 문제점으로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수용 기피, 현장교육기회 제공보다는 필요 인력을 선도매입하려는 산업체의 태도, 단순 반복 업무와 허드렛일 배정으로 인한 현장실습생의 교육기회 부족과 취업의사 저하, 산업체 내의 현장실습생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및 예산 지원 부족, 현장실습생 보수의 비현실성,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불분명함, 정부의 현장실습생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 알선 노력 부족, 정부의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 감독 소홀, 정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현장실습생 지도를 위한 학교 예산의 부족, 현장실습생 순회지도에 따른 교사(수)의 업무 부

담, 현장실습 업무 전담 조직의 부재 내지는 형식적 운영, 학생의 병역문제와 대학 진학을 위한 이탈,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적극적 학습 태도 결여,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습평가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학협력의 개념 정립과 통일된 운영 내용 체계 구축, 산학협력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문·전담 요원의 배치,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웹사이트 구축·운영, 산학협력을 통한 교사(수)의 실기 지도 능력강화, 산업체의 교사(수) 대상의 연수 기회 적극 제공, 산업체 주관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향후 그 결과의 적극 활용, 정부의 산학협력의 여건 조성을 위한 세금면제, 기금 제공 등의 지원 대책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이용환 외(2007)는 ‘교사가 인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및 발전,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델파이조사를 통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첫째, 학생의 문제점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의 대학진학 희망, 학생의 가정환경 열악, 우수학생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둘째, 교사의 문제점으로 행정업무 과다, 우수한 특성화 분야의 교원 확보 어려움, 전공 교과 교사의 수업시수 과다를 지적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특성화 프로그램 벤치마킹 대상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관점의 변화, 학생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대,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교육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정철영 외(2007)는 ‘경상북도 직업교육 종합 발전 방안 연구(2008~

2010)’를 통해 경상북도의 지역 여건, 산업 여건 및 교육 여건을 검토하고, 직업교육 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종합발전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로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 및 혁신사례 분석, 경상북도 지역 여건 분석, 경상북도 전문계 고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경상북도 직업교육 종합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산업 및 전략산업과 경상북도 소재 전문계 고교와의 연계 미흡, 전문계 고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전문계 고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전문계 고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는 ①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학교, 학과, 학급 등의 학교체제 개편, ② 전문계 고교 운영의 주체인 교원의 역량 개발 기회 확대와 교직원문화 조성, ③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인재 확보, 교육과정 개편, 생활 및 진로지도 개선, ④ 효율적인 자원 관리, 탁월한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계 고교의 학교 경영 혁신, ⑤ 지역의 산업, 인력, 문화, 복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최지희(2007)는 ‘전문계 고교를 희생시키자’를 통해 전문계 고교 기술인력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 기술인력 양성·관리 단계의 주요 문제점, 기술인력 양성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기술인력 양성·관리 단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입학생 감소와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 선호, ‘고교졸업→대학진학’이라는 획일적인 진학경로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족, 입직 후 경력개발을 위한 계속학습의 지원과 기회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기술 분야 미래 인재의 양성기관으로서의 전문계 고교 위상 정립, 산업 분류를 반영한 학교 계열 정비,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한 취업 보장, 한국표준직무능력기준의 운영을 통한 산업

계의 수요 적극 반영, 중견기술인으로서의 경력을 설계하는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생활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추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계 고교생 재정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활용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계속교육 참여기회 확대, 맞춤형 교육체제 운영과 취업보장, 전문계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계속교육체제 운영 활성화,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나승일 외(2008)는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계 고교 관련 선행연구 분석, 인력육성 및 특성화 방향 설정을 위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국의 산업여건 분석,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진단평가와 개편 요구 분석,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교의 문제점으로 학교 혁신의 방향 설정 및 추진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생의 기초수학능력 부족, 학생의 중소기업 기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 부족, 교원 업무 분장의 편중, 학교 체제 변화에 대한 교사의 관심 부족, 첨단분야 전문교과 교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인력 양성, 특성화 체제 구축, 학교 교육 혁신, 인적자원 혁신, 학교경영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정철영 외(2008a)는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계 고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정책, 전문계 고교의 교육여건, 전문계 고교 진단, 전문계 고교의 발전방향 설정, 추진과제 제시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상북도 전문계 고교의 문제점으로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전문계 고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전문계 고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선, 학생

의 학습동기 향상,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진학 및 취업지도의 내실화, 전문계 고교의 특성화에 대한 노력,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정철영 외(2008b)는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급속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정 수준의 전문계 고교 유지를 위한 운영체제 개편과 전환 및 학과 신설·증설·감축·폐과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및 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계 고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산업 및 전략산업과 전문계 고교 교육 간의 연계 미흡,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전문계 고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전문계 고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교 발전을 위한 6대 기본방향으로 ①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특성화 교육 추진, 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구를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③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성과중심의 전문계 고교의 교육기반 조성, ④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생지도 및 지원, ⑤ 전문계 고교 운영의 주체인 교사를 위한 행·재정 지원, ⑥ 지역의 산업, 인력, 문화, 복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8a)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통해 새로운 국정 방향과 정책에 따라 MB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의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의 주요 문제점, MB 정부의 직업교육 국정과제 분석, MB 정부의 직업교육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신입생 입학자원의 수 감소, 입학생의 기초수학능력 부족,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학생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험위주의 현장

교육 미흡, 전공과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과목 수 과다로 인한 학생의 수업 부담, 전문교과 교사의 실기지도능력 부족, 산업체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재직 교원의 실기지도 능력 미흡, 전문교과 교사의 직무 연수 기회 부족, 과원교사 발생으로 인한 신분 불안 가중,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운영을 통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증진기술인력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전문계 고교의 경우 전액장학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실용성 기반의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교육 참여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부처 간 협력 정책 강화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 외(2009a)는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을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과 직업교육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여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대입 위주 학교교육으로 인한 내실 있는 진로 교육 운영의 어려움, 직업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진로교육 여건 부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격차 심화, 전문계 고교의 직업교육 정체성 논란, 기업의 군필자 선호로 인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 취업기회 제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초·중·고교생의 진로교육 강화,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 진로를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계 고교 학생의 전문계 고교 전학 지원, 전문계 고교 교육비 지원 확대,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대상의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단축(10년에서 9년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상 교육 강화, KSS(국가직무능력표준 : Korean Skills Standards)를 활용한 전문교과 개발과 활용,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운영, 단계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국내 전문계 고교와 해외 명문 직업교육기관 간에 연

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능력위주 인사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표창제도 도입,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추진, 필요인력 확보와 취업이 보장 되는 산업체 협약학교 도입, 산업체 전문가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전문계 고교 입학 후 4년 만에 전문학사학위까지 취득 가능한 경로 구축, 취업약정제 모형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학교와 훈련기관 간 연계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2. 전문대학

박헌 외(2000)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 방안과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및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현황과 문제, 국내·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에 관한 사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조정 방안과 전문대학의 위상제고 및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일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교육목적 및 기능의 모호성, 백화점식 영세학과 운영과 외적 팽창위주의 교육운영 및 학사관리,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와 지방 대학의 불균형,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현상, 재정 및 시설·설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열악, 교육 운영의 상호 연계성 부족의 문제, 산학연관의 협력 부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전공·교양과 전공이론·전공실습의 비중에 대한 교육과정구조의 부적절성, 교육내용의 부실화와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유연성 부족, 학사운영의 경직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교육매체의 활용 부족과 강의 위주 수업방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수의 현장중심 경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

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고등직업교육체제 속에서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국회 차원의 가칭 '대학 통합·조정 촉진법' 제정, 대학단계 직업교육학제 개선, 정부의 대학단계 직업교육기관 설립인가 정책 검토,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충,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교류 확산, 전문대학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 외(2000a)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을 통해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입학생 수 감소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 현황,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영향과 문제점,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입학생 감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투자 감소, 교육여건 악화, 중도탈락생 증가, 조직 풍토 악화, 학과 조정과 타 기관과의 통폐합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의 추진 방안으로 지방의 전문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전문대학의 정원 정책에 관한 정부의 개입 증대, 연차별 전문대학 입학생 감소 현황 분석과 정책 추진 시 활용, 지방대학의 통폐합 문제 공론화를 통한 최적 대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전문대학의 추진 방안으로는 성인대상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학습체제 개발·운영, 학사제도 운영의 다양화, 입학생 확보를 위한 전략의 적극 추진, 수익확보 사업의 적극추진, 중도탈락생 예방 대책 마련, 인근지역 학령인구 변화 조사·분석, 교원감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유휴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대학 간 통합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중하게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 외(2000b)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

안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문대학의 교육대상 확대,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의 직업교육의 다양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전문대학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방향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 논의,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 조사·분석, 외국의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실태 분석, 전문대학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전문대학 자체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경쟁 심화, 전문대학 입학생 수학능력 저하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과제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틀 설정, 국가수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 전문대학 교육체제 개편, 전문대학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 지원,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제도 개편,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학사제도의 다양화 지원 대책 마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과 타 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간의 연계성 지원 정책 추진,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질 향상 지원 정책 추진,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평가 실시·공표,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체계 수립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문대학의 추진 과제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열린 교육 운영체제 확립, 교육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수요자 확보,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심화·확대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모듈화·다양화, 학사제도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도홍(2000)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전문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현황, 국내 전문대학의 특성화 사례, 주요 선진국 전문대

학의 특성화 사례, 우리나라 전문대학 특성화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백화점식 학과 편성, 교육과정의 모방성, 재무구조의 취약성, 정부재정지원의 부족, 전문인 양성 노력의 부족, 산학협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 전문직업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목적 재정립,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교육서비스 공급, 4년제 대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환, 유사학과 통폐합 및 유망직종의 학과(계열) 개발, 산학협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전문대학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전문대학이 전문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탐색했다. 그 결과 전문대학 교육의 성과와 당면 문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세계와 교육의 변화 전망,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상, 전문대학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 높은 사립의존도와 재무구조도 취약, 전문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거리감에 따른 졸업생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학벌에 의한 임금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 계속교육 체제 정립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 곤란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원 자율채정 기준 및 설립 기준 강화, 사립 전문대학의 건실화, 대학 특성화 촉진에 따른 전문대학의 자생력 보강,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전문직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교육기관으로서의 육성,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및 구조조정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강무섭 외(2002)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이 통합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기준, 고등교육기관 간 통합 신청 시 정부의 규제권한행사의 방향과 기준, 구조조정 관련 고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대학의 양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낮은 국가경쟁력, 대학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제도와 운영, 설립별·지역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 지나친 사학 의존성, 자원 확보와 배분구조의 취약성, 연구역량의 취약성, 국내대학 간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 정비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을 2개 이상 설치·경영하는 사학법인이 설치·경영 중인 학교를 통합하여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대학의 운영과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관계법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 대학통합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통합의 보완 방안으로는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 감축, 다양한 입학자원 확보 지원, 수업연한 제도 개선, 전문대학의 다기능화 지원, 전문대학 3년제 전환학과 지정 기준 정비, 전문대학 학생의 계속교육 지원,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지원, 대학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구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별적 대학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정태화 외(2003)는 ‘전문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 대책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 및 방향,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현황 및 대학 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실태, 주요국의 전문대학 구조조정 지원 정책,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조정 추진 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과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위주로 경영하는 현 상황 하에서 교당 평균 2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구

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 및 운영 방안 수립, 다양한 수익사업의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학사관리 정책의 개선,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 활동 지원, 경영진단 사업 추진, 학과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원 처리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중·장기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명료화, 고등교육시장 참여 규칙 정비, 국립·사립·공립의 역할 구분 명확화와 각각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 차별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주광신 외(2003)는 ‘전문대학 정체성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정체성 및 존립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적 위상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역사적·이념적 정체성, 전문대학의 법적 정체성, 전문대학의 조직 정체성, 선진국의 직업교육기관 정체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대학 정체성 확립에 걸림돌이 된 원인으로 양적 팽창에 주력한 성장 정책,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편견과 편협한 사회의식, 전문대학 고유의 내재적 발전론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설립 이념과 운영철학의 재개념화, 전문대학의 역할·기능 명시, 핵심 이념 공유 및 실천, 대학의 조직문화 개선, 내부에서 성장한 CEO 선정 등을 제안하였다.

김성규(2004)는 ‘한국 전문대학의 변화 요인과 과정 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체제와 양적 규모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전문대학 변화 사례 및 변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대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고유한 특성 상실, 중견 직업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약화, 산학협동 체계의 미흡,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미흡, 개별대학의 자구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 전문대학 중심의 다양한 구조 조정, 산학협동 중심기능으로서의 전문대학 체

계 구축, 대학특성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 지역사회 중심대학으로서의 기능 부여,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조직의 유연성 확보,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학 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 학생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전문대학 학사관리 정책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기호(2004)는 ‘전문대학의 현안과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그간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전문대학 교육환경의 변화 정도와 그에 따른 현안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존폐위기, 기능대학 및 기술대학 등 경쟁교육기관의 도전, 중견직업인 양성기능의 미흡, 지역사회 봉사의 미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평생교육정책 부족,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미흡,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 확대, 인적자원개발 업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수업연한의 다양화, 전공심화과정의 학점 인정, 전문대학의 국고지원 확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윤여송 외(2005)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인력양성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사회환경과 교육의 변화, 전문대학 관련 교육정책 분석, 전문대학의 정체성 검토, 정부 차원의 전문대학 정책 현안 과제, 전문대학 자체의 현안 과제, 전문대학 자체 혁신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문대학 주변 환경 변화, 국가교육정책의 무관심, 전문대학 자체의 정체성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대학 정체성 확립,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직업교육기관 모델 구축, 표준직무능력 체제 구축 및 민간자격 개발 운영, 전

문대학의 대외 협력기능 강화, 전문대학 공동의 홍보활동 강화, 성장동력산업 관련 학과의 중점 육성, 대학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혁, 전문대학교육의 세계화 추진,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전문대학 간 공동사업 확대,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사업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5)는 '직업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과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의 발전 과정, 직업교육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사회환경의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 및 정체성 불분명, 학생자원의 부족,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지원제도 미흡, 높은 사립의존도와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업계 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체제의 확대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기능 개편, 전문대학 입학 희망 성인근로자 대상의 '사전학습 결과 인정제도' 도입, 현장실습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처 간·정책 간 협력체제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6)는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산학협력의 개념과 운영 원리,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의 문제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문제점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기피 현상,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전무, 산업체의 현장실습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현장실습생의 보수 미흡,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부여와 이로 인한 학생 이탈,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 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소재 불분명, 경기 침체 시 현장실습 산업체 감소로 인한 해당 산업체 선정의 어려움,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인력의 학교 교육과정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 대학 측의 현장실습 질 관리·전문가 배치·재정지원·현장실습생 순회지도 미흡, 학생들의 현장실습 회피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학협력의 개념 정립과 통일된 운영 내용 체계 설정, 산학협력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문·전담 요원 배치,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웹사이트 구축·운영, 산학협력을 통한 교사의 실기지도 능력 강화, 산업체의 교수 대상의 연수 기회 적극 제공, 산업체 주관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정부의 산학협력의 여건 조성을 위한 세금면제와 기금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 외(2006)는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전문대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현실 진단과 실태 분석,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과 발전 방향, 전문대학 특성화의 방향 정립과 특성화 유형, 특성화와 연계된 구조혁신 방안, 특성화를 통한 전문대학 정책의 변화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주요 문제점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생의 초과 공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입학생 미충원율 증가, 전문대학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투자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 시간제 등록제·복수전공제·부전공제 등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하고 필요한 제도의 운영 미흡,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교수의 기술이전율 및 특허출원점유율 미흡, 교육의 현장 적합성 부족과 산업체의 불신으로 산학교류 활성화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전문대학의 구조혁신 방안으로는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전문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개편, 학생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 구축, 성인학습자를 수용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 체제 구축,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전임교원확보율 확보와 학생정원 감축 추진, 대학 간의 계열·학과 교환을 적극 권장·지원, 지방의 전문대학 간

통합적 협력체제 운영 지원, 사립대학 구조혁신 방안 지속 추진, 전문대학 폐교에 대비한 관련 특별법령의 제정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조상일(2006)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 교양교육변천 및 내용, 사례 대학의 교양교육 만족도 및 필요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양과목에서 개론과목들의 폐쇄 양상, 교양과목의 질적·양적으로 낮은 수준, 현장 실무와 동떨어진 교양교육과정,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대학 특유의 교양교육 운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교양과목 확대 및 개편,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과목 확대 및 교육, 전공 특성에 맞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현장실무와 연계되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사회봉사과목 증설, 주말·계절, 사이버 강좌 등의 교양교육의 다양화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류지성 외(2007)는 ‘전문대학의 성공조건’을 통해 전문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역할 변화, 시대에 맞는 차별화 교육, 성공하는 전문대학의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성공을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영역의 차별화 육성 정책의 부재, 과잉 정원 및 백화점식 학과 증설, 입학생 모집에 대한 제도 및 자구책 모색 등의 노력 부족, 산·학·관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부재, 특약학과, 협약학과 프로그램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차별화 가능 분야의 선별적 공략, 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역량 집중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학생모집 제도의 획기적 개선, 개별 기업을 위한 주문맞춤형 교육 활성화,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태화(2008a)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통해 새로운 국정 방향과 정책에 따라 MB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의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의 주요 문제점, MB 정부의 직업교육 국정과제 분석, MB 정부의 직업교육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이 불분명, 학생자원의 부족,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지원제도 미흡,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시간제등록제·복수전공제·부전공제·전과 및 편입제도 등의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취약 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실용성이 강조되는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 대학 운영 자율 확대, 부처 간 협력 정책 강화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확대,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요약과 시사점

직업교육 혁신 방안 구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직업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34>, <2-35>와 같다.

<표 2-34> 실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0	정철영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높은 교육열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공급자 중심의 교육 자공심의 함양과 비전 제시의 미흡 개편 또는 개선을 위한 유연성 결여 관련 제도 및 교육기관의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의 다양화 계속교육기회의 제도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행·재정적·사회적 지원 확대
2000	정철영 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과원교원 현상 교원 부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교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학급을 증설하거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학생 수를 조절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 연수, 과원교원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교육과정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 고려 시·도별 또는 공·사립 간 실업교사의 교류를 활성화, 과원교원이 부득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교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경력자를 학교장 재량으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 - 학교장 추천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임용 - '기타' 교원자격을 신설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표시과목에 자격을 부여하여 임용 - 기존 교사의 일정 연수 후에 새로운 표시과목에 자격을 부여하여 임용 - 관련 분야의 심기교사를 활용
2003	대한상공회의소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향상 약화와 이공계 기피 현상 • 전문계 고교의 위상 약화와 이공계 기피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 확보 • 산학협력 기구와 인턴십 제도의 활성화 • 실업계고교의 경쟁력 향상과 내실화 •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2003	정영조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발전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 교육정책의 부재 • 교육과정의 혼재 및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 상업계 교원양성의 개선 •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5	정태화	직업교육 (논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감소와 중도탈락생 증가 • 입학생의 기초적인 학습능력과 전문교과 부문의 지식 습득 성취도가 낮음 • '공급자위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미흡 • 지나친 전공세분화와 교과목 수 과다로 인한 학생의 수업 부담 •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실기 지도 능력 부족 •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 부족 • 과원교사의 계속 발생으로 인한 신분 불안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체계의 확대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 • 실업계 고교가 기능인력 양성 기능과 계속 교육 기능을 동시 수행 •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업계 고교 계열 구조 개편 •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의 적극 지원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 범위 확대 • 계열 간 이동이 허용되는 통합형 고교의 운영을 적극 지원 • 부처 간·정책 간 협력체제의 확대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2006	정태화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수용 기피 • 현장교육기회 제공보다는 필요 인력을 신도메임하려는 산업체의 태도 • 단순 반복 업무와 허드렛일 배정으로 인한 현장실습생의 교육기회 부족과 취업의사 저하 • 산업체내에 현장실습생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및 예산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의 개념 정립과 통일된 운영 내용 체계 설정 • 산학협력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진단 요원 배치 •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웹사이트 구축·운영 • 산학협력을 통한 교사(수)의 실기지도 능력 강화 • 산업체의 교사(수) 대상의 연수 기회 적극 제공 • 산업체에서도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6	안치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현황 및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생 보수의 비현실성 •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불분명함 • 정부의 현장실습생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 알선 노력 부족 • 정부의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 감독 소홀 • 정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 현장실습생 지도를 위한 학교 예산의 부족 • 현장실습생 순회지도에 따른 업무 부담 • 현장실습 업무 집단 조직의 부재 내지는 형식적 운영 • 학생의 병역문제와 대학 진학을 위한 이탈 •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적극적 학습 태도 결여 •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습평가의 어려움 	<p>개선 방안</p> <p>그 결과를 직업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산학협력의 여건 조성을 위해 세제면제, 기금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개선의 부재 • 실업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 진로 선택 및 진로 교육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능력 강화 • 학급당 학생 정원 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 • 「2·1체제」 운영 방안을 확대 실시 • 특성화 및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의 활성화 방안 확대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7	정태화· 최지희	전문계 고교를 회생시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생 감소와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 선호 • '고교졸업→대학진학'이라는 확실적인 진학경로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족 • 입지 후 경력개발을 위한 계속학습의 지원과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술 인력과 산업기술 분야 미래 인재의 양성기관으로 전문계 고교의 위상을 정립 • 산업 분류를 반영한 계열 정비,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 보장 • 한국표준직무능력기준을 운영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 • 중견기술인으로서의 경력을 설계하는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 생활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추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계 고교생 지원 • 고용보험기금의 활용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계속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맞춤형 교육체계 운영과 취업보장 • 전문계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계속교육체계 운영 활성화 •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7	정철영 외	경상북도 직업교육 종합발전방안 (2008~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및 진락산업과 경상북도 내의 전문계 고교와의 연계 미흡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전문계 고등학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학교, 학과, 학급 등의 학교체제 개편 전문계고 운영의 주체인 교원의 역량개발기회확대, 교직원 화조성, 지원 등의 교원 역량 개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인재확보, 교육과정 개편, 생활 및 진로지도 개선 등의 학생 확보 및 교육 운영 개선 효율적인 자원관리, 탁월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경영 혁신 지역의 산업, 인력, 문화, 복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계 및 홍보 강화
2007	이용환 외	교사가 인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의 진학 희망 - 학생의 가정환경 열악 - 우수학생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 교사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과다 - 우수한 특성화 분야 교원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학생의 증진 및 선택 확장으로서의 교사의 인식 및 관점의 변화 전문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 획득을 위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교사의 이해 진통적 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교육을 추구하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 제공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8	나승일 외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 발전방안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교과 교사의 수업시수 과다 ● 교육과정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 특성화 프로그램 벤치마킹 대상 부족 ● 인시 면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부족 - 특성화 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경영 혁신 ● 특성화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체제 개편 - 교육과정 중심 특성화 - 학과 재배치 - 통합형 고교 도입 ● 학교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편 - 교육학습 개선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8	정철영 외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 학교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 전문계 고등학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개선 - 시설 및 기자재 개선 • 인적자원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 교원 역량 강화 - 학생 역량 강화 • 학교경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리더십 제고 - 경영 성과관리 강화 - 학교 재정 혁신 •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대학, 산업체, 지역주민과의 연계 강화 • 학생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선 • 학생의 학습동기 향상 •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 진학 및 취업지도의 내실화 •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에 대한 노력 •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8	장철영 외	울산광역시 진문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및 진력산업과 경상북도 내의 진문계 고교와의 연계 미흡 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진문계 고등학교의 우수 교원 유치의 어려움 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학생 수준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특성화 교육 추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구 차원에서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 산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기반 조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생지도 및 지원 진문계 고등학교 운영의 주체인 교원 지원 지역의 산업, 인력, 문화, 복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사회의 연계
2008	정태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입학 자원의 수 감소 입학생의 기초수학능력 부족 '공급지위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학생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험위주의 현장 교육 미흡 진공과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과목 수 과다로 인한 학생의 수업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스터고 운영을 통한 진문계 고교 졸업생을 증경기술인력으로 양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진문계 고교의 경우 진애장학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실용성이 강조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과 교사의 실기 지도 능력 부족 • 산업체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재직 교원의 실기 지도 능력 미흡 • 전문교과 교사의 직무 연수 기회 부족 • 과원교사 발생으로 인한 신분 불안 가중 •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교원능력 재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 • 부처 간 협력 정책 강화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2009	정태화 외	평생직업교육- 평생취업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위주 학교교육으로 인해 내실 있는 진로교육 운영이 어려움 • 단편적인 진로교육의 운영으로 직업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적 • 직업생활체험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전문고출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 심화 • 전문계고교의 직업교육 정체성 논란 • 기업의 근원자 선호로 전문고 졸업생 취업기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초·중·고교생의 직업체험 강화 •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구축 • 학교별 맞춤형 진로교육서비스 제공 • 진로를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의 전문고 진학 지원 • 전문고 교육비 지원 확대, 전문고 및 전문대졸자 기능분야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 기초학력 미달 학생대상 교육 강화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S를 활용한 전문 교과,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및 평가 도구 개발 • 단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국내 전문고와 해외 명문 직업교육기관 간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능력 위주 인사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표창제도 도입 •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 필요인력확보와 취업이 보장되는 산업체 협약 학교 도입 • 산업체 전문가 직업교육 참여 확대 •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전문고 입학 후 4년 만에 전문학사학위까지 취득 가능 경로 구축 • 취업약정제 모형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 학교와 훈련기관 간 연계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표 2-35> 실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0	박 현 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교육목적 및 기능의 모호성 배화점식 영세학과 운영과 외적 팽창위주의 교육운영 및 학사관리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 외 지방 대학의 불균형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비이진 부이진 심화 현상 재정 및 시설·설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열악화 교육 운영의 상호 연계성 부족 산학연관의 협력 부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전공·교양과 전공이론·전공실습의 비중에 대한 교육 과정구조의 부적절성 교육내용의 부실화와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유연성 부족 학사운영의 경직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교육매체의 활용 부족과 강의 위주 수업방법 전문기술인력 양상을 위한 교수의 현장중심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차원의 가치 '대학 통합·조정 촉진법' 제정 대학단체 직업교육학제 개선 정부의 대학단체 직업교육기관 설립인가 정책 검토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충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교류 확산 전문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0	정태화 외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투자 감소 • 교육여건 악화 • 중도탈락생 증가 • 조직 풍토 악화 • 학과 조정과 타 기관과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전문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 - 학교기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의 정원 정책에 정부의 관여도 증대 - 매년 전국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활용 - 지방대학의 통합할 문제를 공론화 하여 최적 대안 마련 • 전문대학의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대상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학습체제를 개발·운영 - 학사제도 운영의 다양화 - 입학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 - 수익확보 사업의 적극추진 검토 - 중도탈락생 예방 대책 마련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0	정태화 외	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경쟁 심화 • 진문대학 입학생 수능능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 학령인구 변화 조사·분석 - 교원감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유휴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대학 간 통합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신중하게 접근 • 정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 - 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틀 설정 - 국가수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 - 진문대학 교육체계 개편, 진문대학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 학사제도의 다양화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과 타 기관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간의 연계성 강화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0	최도홍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식 학과 편성 • 교육과정의 모방성 • 재구조의 취약성 •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향상 -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평가 실시·공표 -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체계 수립 • 전문대학의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열린 교육 운영체제 확립 - 교육대상의 다양화로 교육수요자 확보 -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직업능력을 심화·확대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의 운영체제를 모듈화·다양화 - 학사제도의 다양화
2000	최도홍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식 학과 편성 • 교육과정의 모방성 • 재구조의 취약성 •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목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제시 •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교육서비스 공급 • 4년제 대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환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1	교육인적 자원부	진문대학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 양성 노력의 부족 산학협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부족 임학장원 미달 현상 높은 사립의존도와 재무구조도 취약 전문대학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거리감에 따른 졸업생들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학벌에 의한 임금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 계속교육 체제 정립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학과 통제합 및 유망직종의 학과(계열) 개발 산학협동의 활성화 정원 자율채용 기준 및 설립 기준 강화 사립 전문대학의 건실화 대학 특성과 축진에 따른 전문대학의 자생력 보강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전문직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교육기관으로서의 육성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및 구조조정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예산 확대
2002	강부섭 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국가경쟁력 대학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제도와 운영 설립별·지역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 지나친 사학 의존성 자원 확보와 배분구조의 취약성 연구역량의 취약성 국내대학 간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관계법령 개정 수도권경비계획법 정비 대학통합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시스템 정비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 감축 다양한 입학지원 확보 지원 수업연한 제도 개선 전문대학의 다기능화 지원 전문대학 3년제 전환학과 지정 기준 정비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3	정태화 외	전문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위주로 경영하는 현 상황에서 교당 평균 2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학생의 계속교육 지원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지원 대학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구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별적 대학 운영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 및 운영 방안 수립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학사관리 정책의 개선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활동 지원, 경영진단 사업 추진 학과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원 처리 대책 마련 고등교육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명료화 고등교육시장 참여 규칙 정비 국립·사립·공립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각각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차별화 관련 법령 제·개정
2003	주광신	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적 팽창에 주력한 성장 정책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편견과 편협한 사회의식 전문대학 고유의 내재적 발전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설립 이념과 운영철학의 재개념화 설립 전문대학의 역할·기능 명시 핵심 이념 공유 및 실천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4	김성규	한국 전문대학의 변화 요인과 과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고유한 특성 상실 • 중견 직업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약화 • 산학협동 체계의 미흡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미흡 • 개별대학의 자구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트적 대학의 조직 문화 창출 • 내부에서 성장한 CEO 선정 •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 • 전문대학 중심의 다양한 구조 조정 • 산학협동 중심기능으로서의 전문대학 체계 구축 • 대학특성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 • 지역사회 중심대학으로서의 기능 부여 •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대학조직의 유연성 확보 •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 • 대학 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 • 학생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 전문대학 학사관리 정책의 개선
2004	이기호	전문대학의 현안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존재위기 • 기능대학 및 기술대학 등 경쟁교육기관의 도전 • 중견직업인 양성의 부재 • 지역사회 봉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업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 수렴연한의 다양화 • 전공심화과정의 학점 인정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4	이기호	전문대학의 현안과제 (논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평생교육정책 부족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미흡 •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국고지원 확대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강화
2005	윤여송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주변 환경 변화 • 국가교육정책의 무관심 • 전문대학 자체의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대학 정체성 확립 •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기관 모델을 전문대학에 도입 • 표준지무능력 체제 구축 및 민간자격개발운영 • 전문대학의 대외 협력기능 강화 • 전문대학 공동홍보활동 강화 • 성장동력산업 관련 학과의 중점 육성 • 대학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혁 • 전문대학교육의 세계화 추진 •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 전문대학 간 공동사업 확대 •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사업의 확대
2005	정태화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교육목적 및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직업교육 체계에 혼란 야기 • 학생자원의 부족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지원제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업계 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체계의 확대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 •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기능 개편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5	정태화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사립의존도와 취약한 재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성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전학습 결과 인정제도' 도입 ●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적극 지원 ● 부처 간·정책 간 협력체계의 확대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2006	정태화 외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생의 초과 공급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소 현상으로 전문대학의 입학생 미충원율 증가 ● 전문대학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투자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 ● 시간제 등록제, 복수진공제, 부진공제 등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하고 필요한 제도의 운영이 미흡 ● 산학협력 활동 수행에 따른 기술이전율 및 특허출원점 유율 미흡 ● 교육의 현장 적합성 부족과 산업체의 불신으로 산학교류 활성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전문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개편 ● 학생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를 수용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 체제 구축 ●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전임교원확보를 확보와 학생지원 감축을 추진 ● 대학 간의 계열·학과 교환을 적극 권장·지원 ● 지방의 전문대학 간 통합적 협력체제 운영을 지원 ● 사립대학 구조혁신 방안 지속 추진 ● 전문대학 폐교에 대비한 관련 특별법령의 제정 추진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6	정태화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현장실습 기피 현상,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진부 • 산업체의 현장실습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 현장실습생의 보수 미흡 •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부여와 이로 인한 학생 이탈 •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 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소재 불분명 • 경기 침체 시 현장실습 산업체 감소로 인한 해당 산업체 선정의 어려움 •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인력의 학교 교육과정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 • 대학 측의 현장실습 질 관리·진문가 배치·재정지원·현장실습생 순회지도 미흡 • 학생들의 현장실습 회피, 교수의 산업체 연수의 경우 산업체가 교수 연수를 담당할 인력 부족·산업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교수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체가 현장 연수를 회피 	<p>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의 개념 정립과 통일된 운영 내용 체계 설정 • 산학협력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진문 요원 배치 •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웹사이트 구축·운영 • 산학협력을 통한 교사(수)의 실기지도 능력 강화 • 산업체의 교사(수) 대상의 연수 기회 적극 제공 • 산업체에서도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업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 • 정부는 산학협력의 여건 조성을 위해 세제면제, 자금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제공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6	조상일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론과목들의 폐쇄 양상 교양과목의 질적·양적으로 낮은 수준 현장 실무와 동떨어진 교양교육과정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특유의 교양교육 설립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교양과목 확대 및 개편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과목 확대 및 교육 진공 특성에 맞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현장실무와 연계되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사회봉사과목 증설, 주말·계절, 사이버 강좌 등의 교양 교육의 다양화 필요
2007	류지성 외	전문대학의 성공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영역의 차별화 육성 정책의 부재 과잉 정원 및 백화점식 학과 증설 입학생 모집에 대한 제도 및 지구책 모색 등의 노력 부족 산·학·관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부재 특약학과, 협약학과 프로그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 가능 분야의 선별적 공략 특성과 분야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 경쟁력을 제고 학생모집 제도의 획기적 개선 개발 기업을 위한 주문맞춤형 교육 활성화 취업기회 확대

<표 계속>

연구 연도	연구자 (기관)	보고서명 (논문명)	문제점	개선 방안
2008	정태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이 불분명 • 학생지원의 부족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지원제도 미흡 •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 시간제등록제·복수전공제·부전공제·진과 및 편입 제도 등의 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취약 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실용성이 강조되는 산학협력 체제 구축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 • 대학 운영 자율 확대 • 부처 간 협력 정책 강화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확대 • 기여 외교를 위한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외국 유학생 유치

제3절 과거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관련 정책의 내용은 [부록-1] 참조).

1. 성과평가의 틀

성과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나, 문태선(2005)은 성과를 ① 효과성의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달성도로 이해하는 관점, ②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 ③ 효과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 ④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관점 등 4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정책성과의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효과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투입 대비 산출물인 효율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첫 번째 관점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 평가는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성과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될 틀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결과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수를 이룬다(장기원, 2001).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완전히 문헌분석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집행 단계에 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형성(목표 및 방향 설정)과 정책결과의 2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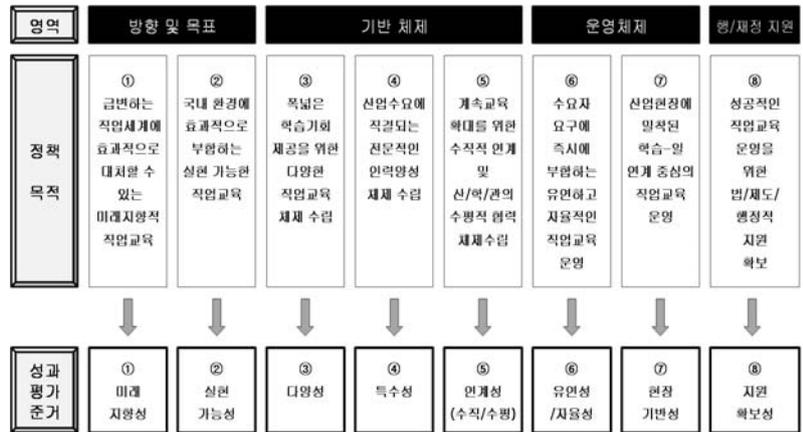
<표 2-36>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

구분	정책형성		정책결과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기준
김창곤 (1987)	정책환경	진단 정확성	-	영향력, 효율성
	정책결정과정	민주성		
	정책 목표	구체성		
장재원 (1992)	정책환경	진단 정확성	-	영향력, 효율성
	정책결정과정	합리성, 민주성		
	정책목표	적합성, 실현가능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장기원 (2001)	정책환경	환경 적합성	기회 확대	효과성
	정책목표	적합성, 실현가능성, 공평성	교육-노동시장 연계	효과성
	정책과정	합리성, 민주성	수직적 연계	효과성
			수평적 연계	효과성

자료: 김창곤(1987) : 장재원(1992) : 장기원(2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의 환경과 정책목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기준은 진단 정확성, 실현가능성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결과 단계에서는 평가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지만 장기원(2001)의 경우 기회확대, 교육-노동시장 연계,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 등의 4개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기준으로는 효과성을 활용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형성 단계와 정책결과 단계별로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을 모두 구분하여 평가의 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영역과 정책 목적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였다. 그 결과 평가영역은 '방향 및 목표', '기반체제', '운영체제', '행/재정 지원'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 정책 목적이 있고, 각 정책목표별로 성과평가 준거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 준거의 도출 모형



즉, 방향 및 목표 영역에는 ①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② 국내 환경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직업교육의 2개 정책목적이, 기본체제 영역에는 ③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체제 수립, ④ 산업수요에 직결되는 전문적인 인력양성 체제 수립, ⑤ 계속교육 확대를 위한 수직적 연계 및 산/학/관의 수평적 협력 체제 수립의 3개 정책목적이, 운영체제 영역에는 ⑥ 수요자 요구에 즉시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직업교육 운영, ⑦ 산업현장에 밀착된 학습-일 연계 중심의 직업교육 운영의 2개 정책목적이, 행/재정 지원 영역의 경우 ⑧ 성공적인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법/제도/행정적 지원 확보의 1개 정책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기반으로 성과평가 준거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정책목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목표점을 지칭하는 핵심 용어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8개의 성과평가 준거(① 미래 지향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다양성, ④ 특수성, ⑤ 연계성(수평/수직), ⑥ 유연성/자율성, ⑦ 현장기반성, ⑧ 지원확보성)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잠정적으로 개발한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은 <표 2-37>과 같다.

<표 2-3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

영역	성과평가 준거	성과평가 준거 내용
방향 및 목표	① 미래 지향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산업수요에 부합할 만큼 미래 지향적이었는가?
	② 실현 가능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였는가?
기본 체제	③ 다양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만큼 직업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는가?
	④ 특수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직업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시스템 및 기관의 특성화 및 특수화를 추구하였는가?
	⑤ 연계성 (수평/수직)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수직적 연계 강화와 산업체·학교·정부·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수평적 연계 강화를 추구하였는가?
운영 체제	⑥ 유연성/자율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수요자 요구에 즉시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유연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였는가?
	⑦ 현장 기반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현장에 밀착하여 학습-일 연계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현장 기반화를 추구하였는가?
행/재 정적 지원	⑧ 지원 확보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일련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하였는가?

2. 성과평가 결과

가. 방향 및 목표 영역

- ①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산업수요에 부합할 만큼 미래 지향적이었는가?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의 미래 지향성은 최근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변화를 예측·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 산업인력구조 고도화에 대비하여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체제의 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제안한 바 있다. 즉, 과거와는 다르게 중등교육 수준의 기술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 발맞추어 세부방안으로 중등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을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급 기술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1.11)의 『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서는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7차 실업교육 교육과정에 맞추어 현행 대입제도를 개선하여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대학입학 문호를 확대’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실업계 고교생에게 정원 외 입학울 허용하고, 대학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혁신적인 세부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5)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서도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직업교육기관 전반에 입학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입학생 유치를 위한 생존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및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의 특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 중 상당수가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향후 학령인구나 산업구

조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 및 학과 수나 교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유지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 대중요법식의 정책 수립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 결국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였는가?

정책은 단지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중요한 성과평가 준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의 방향 및 목표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충분한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의 기본 방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체제 개편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어서 충분한 실현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되어진다.

또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5)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 방안』의 기본방향은 단위학교의 자율보장과 교원의 전문

성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들이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기본방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과는 큰 괴리를 가지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2000.1)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 설정한 기본방향 가운데 실업계 고교의 구조조정과 운영체제 개편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학급 수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현가능성은 비단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방안을 포함하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정책 내 세부방안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야 한다.

나. 기반체제 영역

③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만큼 직업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는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수요자와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먼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목표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원한다. 한편 산업체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이 운영될수록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은 직업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다양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서 다양화가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에서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특성화고등학교 확대 등)를 추구하였으며, 교육부(2000.1)의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에서는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의 다양화(특수목적고 육성, 공고 2·1 체제 운영,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등)를 추구하였다. 또한 교육부·노동부(1999.12)의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에서도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과 유연한 학습경로 형성을 위하여 교육체제의 다원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다양화의 측면에서 정책이 집중된 분야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체제로서,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기관이 등장하였다. 이는 기존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분화 된 획일적인 교육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등장 여 따라 기존의 농/공/상/수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전공에서 벗어나 조리, 애니메이션, 신발, 자동차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전공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종전에 비해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화의 노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특성화 정책 도입, 기술대학 확대, 사내대학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여 연계된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만큼이나 고등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나친 다양화의 강조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안된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여 학생들이 2~3학년 단계에서 계열 구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교육선택의 폭 확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정철영 외(1999)는 계열분리식의 경우에는 이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진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계열통합식의 경우에는 우수 학생 확보의 어려움, 교사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④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시스템 및 기관의 특성화 및 특수화를 추구하였는가?

산업현장이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학교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즉시 직업현장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급격하게 산업구조와 직종이 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각의 직종 및 직무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은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의 특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서 특수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특성화 전문대학 설치 등을 추구하였으며,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특성화 고교 및 특별 교육과정 설치 확대,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및 다양화·특성화 유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교육부·노동부(1999.12)의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에서도 교육체제의 특성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특수성의 측면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 및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고등학교 체제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위탁·지원 특성화고가 집중적으로 육성됨에 따라 전공과 교육내용이 특정 직업에 특수하게 집중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교 육성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특수성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 마이스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이스터 고교 육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스터 고교는 특성화 고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되었던 주문식 교육제도가 특수성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라고 평가된다. 주문식 교육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협약을 맺은 산업체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산업체에 특수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으로 지나치게 특수화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특성화 고교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양적인 팽창에 치중하다보니 외형만 특성화 고교이고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 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제고의 문제 등이 주요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옥준필, 1999; 장기원, 2001).

또한 직업의 등장과 소멸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분야의 특수화는 상당한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애완동물 관련 산업 분야의 부흥에 힘입어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얼마 안 가 인력수요가 줄어 수급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⑤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수직적 연계 강화와 산업체·학교·정부·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수평적 연계 강화를 추구하였는가?

직업교육이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유관기관 간 협력은 크게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직적 연계는 학교급(초-중-고-대-평생교육)에 따라 기관 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서 수요자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직업교육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은 직업교육 기관 간 수직적 연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에서는 평생직업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육구조제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교육부(2000.1)의 『실업

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대학/산업대학 특별전형 유지,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5)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 방안』에서는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의 협약학과 운영을 강화하였다.

특히 수직적 연계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2007.2)의 『희망실현 실업계고 육성 전략』의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활성화, 전문계고 졸업자의 계속직업교육 완성과정으로 전문대에 전공심화 과정을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전문대학, 그리고 전문대학-대학 간의 수직적 연계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1.11)의 『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서 제시된 실업계 고교생의 정원 외 입학과 수능에의 실업계열 신설 검토 역시 중등단계와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한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한편 수평적 연계는 직업교육과 관련되는 모든 유관기관, 즉 산업체, 학교, 정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인문교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평적 연계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는 학교와 산업체 간 협력강화(『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에위한촉진법』 제정, 고교 및 대학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점임교원 활용 지원)를 제안하였고, 교육부(2000.1)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강조되었다.

특히 수평적 연계 차원에서 주목할 점은 2007년에 도입된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림부, 국방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하는 특성화고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09년부터는 지자체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고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기관 간 수평적 연계에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교육을 위한 기관 간 연계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1996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직업교육 혁신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범부처 간 협력·지원 체제의 미흡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과거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학교 및 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직업교육 정책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제도, 기관, 부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운영체제 영역

⑥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수요자 요구에 즉시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유연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였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직업교육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학생과 산업체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이 필수적인 것이다. 반면 기존의 직업교육 운영체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혁신이나 변화와 관련한 거의 모든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 대처 속도가 매우 느렸다. 따라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부여된 권한이 적고 자율

성이 적었다. 또한 교육과정 역시 3~5년 단위로 국가수준에서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은 운영체제의 유연화 및 자율화를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2000.1)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학교 지정 운영,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 운영, 학교기업 제도 도입 검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 교육위원회(2005.5)의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희망하는 실업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컨설팅을 활성화하며,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직업교육 분야의 유연성 및 자율성의 증대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단위학교에서 과연 스스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이다. 만일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시도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운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컨설팅 지원, 연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현장에 밀착하여 학습-일 연계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현장 기반화를 추구하였는가?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일터 학습(workplace learning) 등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공적인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 밀착하여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뜻

한다. 이것은 비단 정규 학교의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을 경험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학습하도록 촉진하는 학습-일 연계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많은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은 운영의 현장 기반화를 강조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점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고교 및 대학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전 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 교원 활용 지원을 제시하였고, 산업체의 사내대학 양성화와 기술대학 설립기준 완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교육부·노동부(1999.12)의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전면에 강조하면서 산학연계 교육훈련 강화, 벤처 창업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산·학 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1. 11)의 「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서도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2007.2)의 「희망실현 실업계고 육성 전략」에서도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일터학습 강화, 직장에서 학위 취득하는 사내대학 활성화)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교육에서의 현장 기반 운영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산업체와의 협력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체가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드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체와의 협력은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유인가 제공, 관련 법/제도 규정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현장 지향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 행·재정적 지원 영역

⑧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일련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하였는가?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 직업교육 정책 역시 이를 실현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직업교육 정책의 경우 다양한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각 기관 간의 협조를 촉진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수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들이 해당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정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 2)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관련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가 제도화, 법제 정비, 자원 확충 및 금융·세계 지원 등과 같은 세부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2000.1)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서는 직업교육 인식 제고,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 확대 강화 등을 행·재정 지원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교육부(1999.3)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에위한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와 학교의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정책 내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이 단지 선

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부적인 정책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지원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통한 문제점과 혁신 과제

이 장에서는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통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직업교육과 혁신 과제 도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실을 진단하였고, 이어서 1990년도 이후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추출해 보고자 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각종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범주화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고교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
- 교육제도상의 문제
 - 학제 문제 : 단선형 학제에서 복선제 성격의 전문계 고교 운영
 -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미흡 : 진학 위주의 현상, 취업률 저조
 - 일반계 고교 졸업자와 전문계 고교 졸업자가 동일 대학 동일 학

과에 진학하는 상황의 문제

- 대졸자보다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교가 한국사회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

- 고교 학교 유형 및 전문계 고교 계열 구분의 불확실성
- 직업훈련 기관과의 수평적 연계 미흡
- 공동실습소 운영 미흡

□ 학교 내부의 문제

- 재학생의 낮은 수학능력
-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산업계의 수요 반영이 미흡한 교육과정 : 산학협력, 교과서 개발 제도
- 교사의 실기지도 능력 미흡 : 교원양성제도, 현직교육
- 교육과정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부족

□ 정부의 지원 부족

-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 전문계 고교 졸업 근로자를 위한 비전 제시 부족 : 계속교육 기회 제공 등
- 소외계층으로서의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배려 부족 : 장학금 지급 등

둘째, 전문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문대학 기능 조정 필요
- 성인학생 확보의 필요성 점증

□ 교육제도상의 문제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별성 확보 미흡 : 고등교육 기관 간 역할 부재
- 수업연한 자율화 쟁점
-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취업약정제 활성화 미흡
- 학교 내부의 문제
 - 재학생의 낮은 수학능력
 -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산학협력 미흡 : 산업계의 수요 반영이 미흡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미흡, 인적교류 미흡
 - 교수의 교수 능력 및 실기 지도 능력 미흡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과다
 - 교육과정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부족
 - 직업교육 국제화 노력 부족 : 해외인턴십 등
- 정부의 지원 부족
 -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 전문대학 졸업근로자를 위한 비전 제시 부족 : 계속교육 기회 제공 등
 - 소외계층으로서의 전문대학 재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장학금 지급 등

셋째,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관련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청년실업과 대졸자의 하향 취업 증가
 - 지속적인 청년실업 속에서도 일반대학 선호
 - 일반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전문대졸자 취업의 어려움,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전문계고 졸업자 취업의 어려움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 학력별 임금 격차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입학 기피
- 산업계의 군복무 미필자 기피로 인한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 곤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의 어려움
- 직업교육기관 출신 재직근로자의 계속 교육 지원 부족

넷째,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① 미래지향성의 부족, ②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 ③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 운영의 다양성 부족, ④ 특성화 추구 부족, ⑤ 수직적·수평적 연계의 미흡, ⑥ 운영체제의 유연성과 자율성 부족, ⑦ 학습과 일의 연계 강화 부족, ⑧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추출된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2020년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서는 직업교육 실태 분석과 혁신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는 정책 의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의 혁신 과제를 제안함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 정책은 학교급별보다는 혁신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주제 내에서 학교급 간 연계 및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혁신 정책 관리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혁신 관련 시사점

이길순 · 이병욱 · 홍광표

제1절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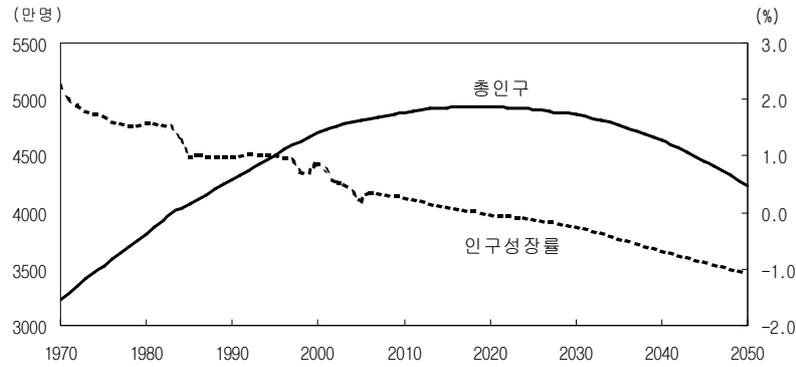
1. 인구 변화

통계청(2006)이 발간한 ‘장래인구추계(2005~2050)’를 중심으로 인구 변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에 49,340천 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 48,635천 명, 2050년에 42,34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2010년 0.26%에서 점차 둔화하여 2018년에는 0.02%에 도달한 후 2019년(-0.00%)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25%, 205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2006), 37쪽

<표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인 구	32 241	38 124	42 869	47 008	48 138	48 875	49 326	48 635	42 343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21	0.26	-0.02	-0.25	-1.07

주: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임.

자료: 통계청(2006), 37쪽.

나.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0천 명(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506천 명(72.0%), 2050년에는 22,424천 명(5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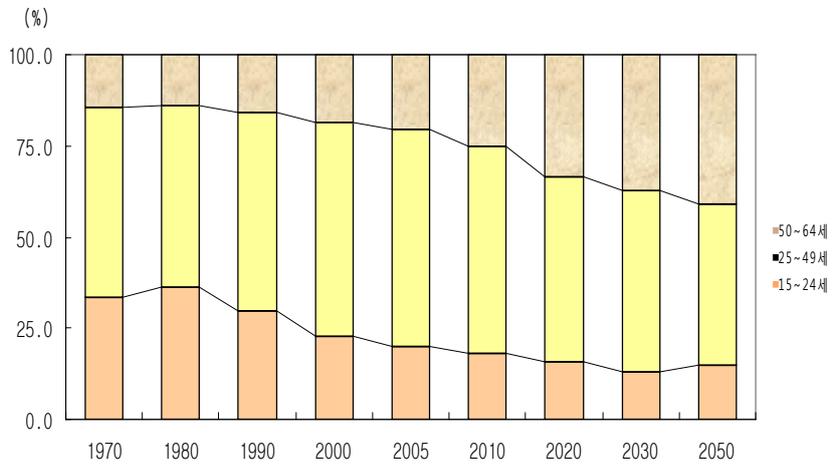
<표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단위: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생산가능인구									
15~64세	17 540	23 717	29 701	33 702	34 530	35 611	35 506	31 299	22 424
(총인구 대비)	(54.4)	(62.2)	(69.3)	(71.7)	(71.7)	(72.9)	(72.0)	(64.4)	(53.0)
15~24세	5 838	8 613	8 784	7 697	6 879	6 515	5 552	4 086	3 291
25~49세	9 179	11 812	16 148	19 816	20 587	20 196	18 078	15 494	9 957
50~64세	2 522	3 292	4 768	6 189	7 064	8 900	11 877	11 718	9 176
구성비									
15~64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33.3	36.3	29.6	22.8	19.9	18.3	15.6	13.1	14.7
25~49세	52.3	49.8	54.4	58.8	59.6	56.7	50.9	49.5	44.4
50~64세	14.4	13.9	16.0	18.4	20.5	25.0	33.5	37.4	40.9

자료: 통계청(2006), 42쪽.

[그림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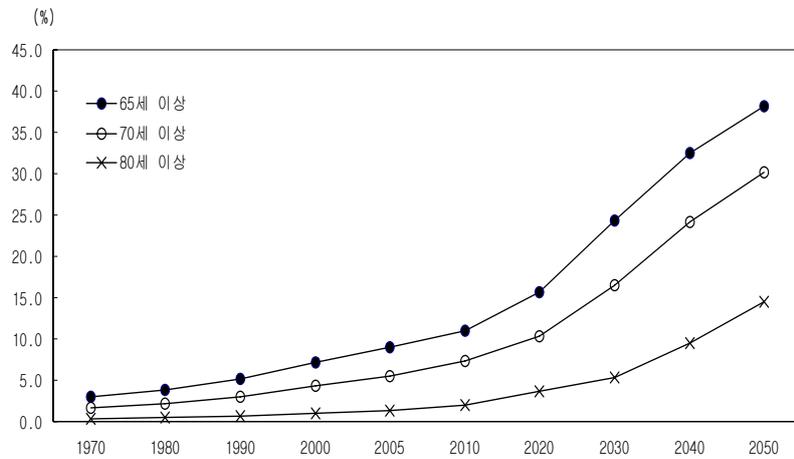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6), 42쪽.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 젊은 연령층 인구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소년인구 유입감소로 2020년 15.6%, 2050년 14.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20년 50.9%, 2050년 44.4%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20년 33.5%, 2050년 40.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연령계층별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50년에는 2005년의 3.7배인 16,156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70세 이상 인구도 2050년에는 2005년에 비해 4.8배인 12,77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자료: 통계청(2006), 46쪽.

<표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여자 100명당)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991	1 456	2 195	3 395	4 367	5 357	7 701	11 811	16 156
구성비	3.1	3.8	5.1	7.2	9.1	11.0	15.6	24.3	38.2
성 비	70.0	59.7	59.8	62.0	65.8	69.2	75.1	79.1	79.0
70세 이상	563	832	1 294	2 014	2 684	3 546	5 120	8 019	12 776
구성비	1.7	2.2	3.0	4.3	5.6	7.3	10.4	16.5	30.2
성 비	68.8	51.0	52.6	53.8	57.1	62.0	68.0	73.8	74.9
80세 이상	101	178	302	483	676	952	1 783	2 581	6 130
구성비	0.3	0.5	0.7	1.0	1.4	1.9	3.6	5.3	14.5
성 비	50.3	33.6	35.8	39.1	41.4	43.2	51.2	57.6	63.5

자료: 통계청(2006), 46쪽.

이러한 전망 속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고령화사회 : 7%, 고령사회 : 14%, 초고령사회 : 20%).

라. 학령인구와 교육조건 변화

통계청(2009. 3. 30)이 제시한 학령인구변화 전망 결과(2007~2050)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학교구분별 학령인구

(단위: 천 명, %)

구분	계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007	10,368	(100.0)	3,806	(100.0)	2,095	(100.0)	1,971	(100.0)	2,495	(100.0)
2010	9,901	(95.5)	3,297	(86.6)	1,962	(93.6)	2,069	(105.0)	2,574	(103.1)
2018	7,914	(76.3)	2,575	(67.7)	1,329	(63.4)	1,553	(78.8)	2,456	(98.4)
2030	6,163	(59.4)	2,209	(58.0)	1,131	(54.0)	1,175	(59.6)	1,648	(66.0)
2050	4,602	(44.4)	1,525	(40.1)	838	(40.0)	909	(46.1)	1,329	(53.3)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47쪽.

한편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수 및 교사 수 변화 전망 결과(2007~2050년)를 살펴보면 최근 추세대로 학교 수와 교사 수가 증가할 경우, 조만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6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교사 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추세대로 학교 수 및 교사 수가 증가할 경우, 2010년 중반경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필요 학교 수 및 교사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30년 현 학교 수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필요 학교 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62%, 중학교 166%, 고등학교는 154%로 과다가 예상되며, 2030년 교사 수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필요 교사 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89%, 중학교는 196%, 고등학교는 158%로 과다가 예상된다.

2. 산업 변화

최용재 외(2008)의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을 중심으로 미

래의 산업변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20년까지의 한국의 산업·무역구조 전망 요약

향후 한국경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투입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4%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의 지식집약화 및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으로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의 경우 관련 제품의 기술발전에 따른 가격하락세로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도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상대가격 하락추세가 명목비중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역시 실질산출 증가세가 둔화되어 명목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수요 확대에 명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와 점진적인 기술진보, 경제성장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 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2007년 17.6%에서 2020년 13.6%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총 공급 및 수요기반 확대에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중이 2007년 66.7%에서 2020년 74.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구조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비중은 2007년 85.5%에서 2020년까지 77.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비스업 수출비중은 2007년 14.4%에서 2020년 2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기간산업 중에서는 섬유류, 조선, 석유화학, 철강 및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감소하나 자동차, 일반기계 및 전자의 수출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취업자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노동생산성의 증가 및 점진적인 기술 진보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전 산업 대비 2007년 17.6%에서 2020년까지 13.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은 각각 2007년 5.0%, 12.6%에서 2020년 3.8%, 9.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은 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수요 증가에 기인해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 66.7%에서 2020년에는 7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부족, 경제성장의 둔화 및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2020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 취업자 감소세가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력기간산업은 반도체, 전자 등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제조업 전체 취업자 감소율보다는 적은 연평균 0.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형 업종의 경우 생산 증가세 둔화와 설비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의 대체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기술수준별 취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모든 기술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나 ICT 및 저위기술산업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작은 반면, 다른 기술산업의 감소폭은 1%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3-5> 우리나라 향후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15	2020
농업·임업 및 어업	17.90	11.77	10.60	7.94	7.37	5.97	4.72
광업	0.44	0.13	0.08	0.08	0.08	0.07	0.09
제조업	27.16	23.60	20.29	18.53	17.58	14.97	13.64
경공업	12.19	9.48	7.43	5.73	4.98	3.93	3.81
중화학공업	14.97	14.12	12.86	12.79	12.60	11.04	9.84
주력기간산업	11.84	10.14	8.92	7.75	7.52	6.96	6.65
자동차	1.89	1.67	1.34	1.38	1.41	1.34	1.25
조선	0.37	0.49	0.50	0.54	0.57	0.58	0.55
일반기계	0.93	0.95	0.79	0.78	0.79	0.71	0.66
섬유류	5.44	3.88	2.88	1.81	1.60	1.35	1.38
철강	0.80	0.79	0.85	0.68	0.60	0.54	0.49
석유화학	0.72	0.49	0.46	0.39	0.33	0.27	0.21
전자	1.04	0.82	0.99	0.82	0.84	0.82	0.82
반도체	0.65	1.06	1.11	1.35	1.38	1.34	1.2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39	0.34	0.30	0.31	0.37	0.40	0.38
건설업	7.44	9.37	7.47	7.94	7.90	7.03	6.34
서비스	46.68	54.79	61.25	65.21	66.72	71.55	74.84

자료: 최용재 외(2008), 134쪽

<표 3-6> OECD 기술수준별 고용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15	2020
첨단기술산업	0.78	0.75	0.58	0.56	0.54	0.43	0.30
ICT산업	1.85	2.11	2.36	2.40	2.47	2.32	2.25
중고위기술산업	5.60	4.96	4.26	4.12	4.10	3.52	3.03
중저위기술산업	10.22	9.22	8.04	7.79	7.35	6.12	5.48
저위기술산업	8.70	6.55	5.05	3.64	3.13	2.59	2.59

자료: 최용재 외(2008), 135쪽.

<표 3-7> 산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단위: %)

구 분	'91~'95	'96~'00	'01~'05	'06~'07	'08~'20	'08~'15	'16~'20
농업·임업 및 어업	-5.78	-1.37	-4.14	-2.49	-2.65	-1.94	-3.79
광업	-19.93	-8.15	0.23	1.73	1.74	0.48	3.77
제조업	-0.38	-2.28	-0.28	-1.37	-1.21	-1.33	-1.03
경공업	-2.57	-4.07	-3.57	-5.68	-1.32	-2.26	0.20
중화학공업	1.27	-1.15	1.45	0.51	-1.17	-0.97	-1.48
주력기간산업	-0.68	-1.84	-1.25	-0.27	-0.21	-0.29	-0.08
자동차	-0.13	-3.62	2.16	2.36	-0.15	0.10	-0.54
조선	8.33	0.79	3.15	4.66	0.43	0.76	-0.08
일반기계	2.87	-2.84	1.19	2.19	-0.73	-0.72	-0.75
섬유류	-4.23	-5.08	-7.48	-4.82	-0.38	-1.39	1.25
철강	2.20	2.25	-2.78	-5.15	-0.72	-0.55	-0.98
석유화학	-5.23	-0.50	-1.58	-7.69	-2.47	-1.78	-3.56
전자	-2.30	4.61	-2.13	2.16	0.58	0.42	0.84
반도체	12.74	1.68	5.65	2.45	0.10	0.30	-0.2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00	-1.78	2.13	9.92	0.95	1.78	-0.37
건설업	7.28	-3.75	2.81	0.98	-0.96	-0.77	-1.25
서비스	5.79	2.99	2.84	2.42	1.63	1.56	1.74

자료: 최용재 외(2008), 136쪽

<표 3-8> OECD 기술수준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단위: %)

구 분	'91~'95	'96~'00	'01~'05	'06~'07	'08~'20	'08~'15	'16~'20
첨단기술산업	1.77	-4.33	0.75	-0.48	-3.80	-2.13	-6.41
ICT산업	5.23	3.00	1.92	2.51	0.05	-0.09	0.26
중고위기술산업	0.01	-2.32	0.90	0.96	-1.58	-1.24	-2.14
중저위기술산업	0.36	-2.01	0.93	-1.70	-1.51	-1.61	-1.37
저위기술산업	-3.22	-4.40	-4.85	-6.18	-0.73	-1.68	0.80

자료: 최용재 외(2008), 137쪽

한편 이상돈 외(2008)는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 결과를 <표 3-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9>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2007	2012p	2017p	비중차
고졸 이하	64.2	58.2	52.9	-11.3
전문학사	11.2	13.1	14.7	3.5
학 사	20.9	23.6	25.8	4.9
대 학 원	3.7	5.1	6.6	2.9
전 체	100.0	100.0	100.0	0.0

자료: 이상돈 외(2008), 113쪽

다.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기의 위축은 전 산업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 수출업종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 온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볼 때,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 이들 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경우 산업연관구조를 통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세계총산출이 0.1%p 감소하였을 때, 2008~202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기준성장률과 비교해 제조업 실질산출량 증가율은 0.45%p 낮아지고, 서비스업도 0.24%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로도 이러한 증가율 축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의 증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OECD 기술수준별로도 최근 수출비중이 높은 ICT 관련 산업의 증가율 축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2절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

본 절에서는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입각하여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1장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하에 있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으로 한정하여 노동시장에서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계고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전문계고 출신의 신규인력 공급은 2008~2016년 기간 동안 총 334.8천 명이 배출될 예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신규인력 수요 총 158.4천 명에 비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10>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

(단위: 천 명)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신규공급(A)	42.1	39.8	37.1	34.7	32.4
신규수요(B)	11.6	13.6	15.7	21.2	26.7
수급차(A-B)	30.5	26.2	21.4	13.5	5.7

자료: 박동열 외(2008),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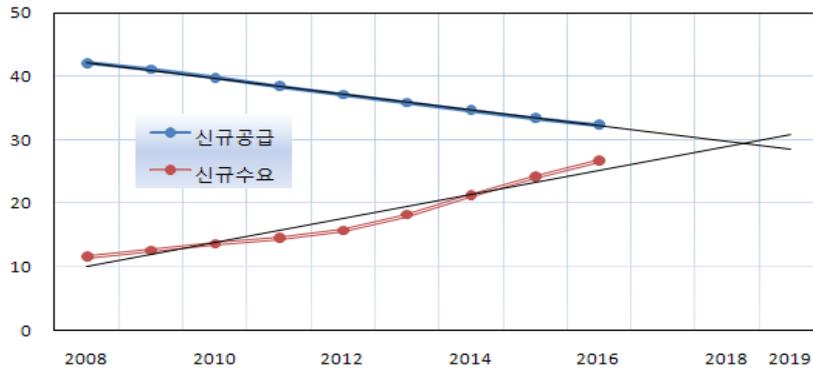
신규인력 공급 규모는 향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문계고 출신 인력에 대한 신규수요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향후 3D 업종을 중심으로 단순기능직 및 단순 생산직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공급에서 신규수요를 제한 전문

계고 출신에 대한 신규인력 수급차는 <표 3-10>에서와 같이 2008년의 3만 명대에서 2010년에는 2만 명대로, 2014년에는 1만 명대로, 그리고 2016년에는 5천 명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되는 등 향후에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과잉 공급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박동열 외, 2008 : 95)

<표 3-10>에서 살펴본 추세를 가정해 보면 2018년을 전후로 신규수요가 신규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에는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

(단위: 천 명)



주: — 는 추세선(trend line)

자료: 박동열 외(2008), 96쪽.

2. 전문대학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전문대 출신의 인력공급과 수요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이상돈 외, 2008 : 105-139)의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총량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학력별 수급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인력의 수요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수에 대한 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될 취업자 수는 결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07년 23,433천 명에서 2017년에는 25,152천 명으로 연평균 0.7%씩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1,726천 명에서 990천 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1,850천 명에서 1,990천 명으로 연평균 0.7%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2007	2012p	2017p	07-12	12-17	07-17	07-12	12-17	07-17
전 산업	23,433	24,290	25,152	857	862	1,719	0.7	0.7	0.7
농림어업	1,726	1,286	990	-440	-296	-736	-5.7	-5.1	-5.4
광업	18	12	9	-5	-3	-8	-7.0	-5.3	-6.2
제조업	4,119	4,001	3,925	-118	-76	-194	-0.6	-0.4	-0.5
전기가스수도	86	87	86	2	-1	0	0.3	-0.3	0.0
건설업	1,850	1,920	1,990	70	70	140	0.7	0.7	0.7
서비스업 소계	15,633	16,981	18,150	1,348	1,169	2,517	1.7	1.3	1.5
도소매업	3,677	3,771	3,863	94	92	186	0.5	0.5	0.5
음식숙박업	2,049	1,862	1,764	-187	-98	-285	-1.9	-1.1	-1.5
운수통신업	1,498	1,850	2,109	351	260	611	4.3	2.7	3.5
금융보험업	809	1,010	1,185	201	175	376	4.5	3.3	3.9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2,350	2,646	2,917	296	271	567	2.4	2.0	2.2
공공개인사회서비스	5,250	5,844	6,312	594	468	1,062	2.2	1.6	1.9

자료: 이상돈 외(2008), 106쪽.

<표 3-12>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12p	2017p	비중차
전 산업	100.0	100.0	100.0	0.0
농림어업	7.4	5.3	3.9	-3.4
광업	0.1	0.1	0.0	0.0
제조업	17.6	16.5	15.6	-2.0
전기가스수도	0.4	0.4	0.3	0.0
건설업	7.9	7.9	7.9	0.0
서비스업 소계	66.7	69.9	72.2	5.4
도소매업	15.7	15.5	15.4	-0.3
음식숙박업	8.7	7.7	7.0	-1.7
운수통신업	6.4	7.6	8.4	2.0
금융보험업	3.5	4.2	4.7	1.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0.0	10.9	11.6	1.6
공공개인사회서비스	22.4	24.1	25.1	2.7

자료: 이상돈 외(2008), 107쪽.

한편 제조업은 2007년 4,119천 명에서 연평균 0.5%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3,92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6%에서 15.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해 2007년 대비 2,517천 명이 증가한 18,150천 명으로,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6.7%에서 2017년 72.2%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금융보험업이 연평균 3.9%, 운수통신업이 3.5%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표 3-11>과 <표 3-12> 참조).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기술발전과 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 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된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특히 금융보험업과 운수통신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학력별 인력수요 전망

학력별로는 크게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의 4분류로 구분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학력별 취업자 전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학력 취업자 행렬이 도출되어야 한다. 산업 내 학력별 취업자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산업-학력행렬의 변화추세를 예측하고 이를 전망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산업별로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과거의 변화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다.(이상돈 외, 2008 : 111)

학력별 취업자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는 2007년 2,623천 명에서 2017년에는 3,706천 명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졸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2.8%씩 증가해 2017년에는 6,479천 명, 비중은 20.9%에서 25.8%로 증가될 전망이다. 대학원졸의 취업자 수는 다른 학력수준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연평균 6.8%씩 증가하여 2007년 860천 명에서 2017년에는 1,658천 명에 이르고, 비중도 3.7%에서 6.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듯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3-13〉 참조).

<표 3-13> 학력별 취업자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2007	2012p	2017p	07-12	12-17	07-17	07-12	12-17	07-17
고졸 이하	15,052	14,145	13,309	-908	-836	-1,744	-1.2	-1.2	-1.2
전문학사	2,623	3,183	3,706	560	523	1,083	3.9	3.1	3.5
학 사	4,898	5,724	6,479	826	755	1,582	3.2	2.5	2.8
대 학 원	860	1,238	1,658	378	420	798	7.6	6.0	6.8
전 체	23,433	24,290	25,152	857	862	1,719	0.7	0.7	0.7

자료: 이상돈 외(2008), 112쪽.

〈표 3-13〉에서 보듯이 비록 고졸 이하에 대한 인력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자 수 비중이 2017년에는 약 47%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인력의 토대가 되는 고학력 인력수요 증대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이상돈 외, 2008 : 112)

다. 수급차 전망

우선 산업별 수급차 전망(2007~2017)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4〉 참조).

<표 3-14> 산업별 수급차 전망(2007~2017)

(단위: 천 명)

구 분	성장수요	대체수요	신규공급	초과공급	연평균 초과공급
전 산업	3,638.4	944.2	4,996.2	413.6	41.4
농림어업	2.4	12.2	10.1	-4.5	-0.5
광업	0.1	0.3	7.5	7.1	0.7
제조업	418.6	96.0	1,045.8	531.2	53.1
전기가스수도	9.8	5.2	87.7	72.7	7.3
건설업	133.4	39.2	152.2	-20.4	-2.0
서비스업 소계	3,074.2	791.2	3,692.8	-172.5	-17.2
도소매업	546.4	134.3	429.3	-251.4	-25.1
음식숙박업	49.6	33.0	95.0	12.4	1.2
운수통신업	263.0	54.9	244.5	-73.4	-7.3
금융보험업	363.4	53.3	153.9	-262.9	-26.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557.0	146.0	947.7	244.6	24.5
공공개인사회서비스	1,294.8	369.7	1,822.6	158.1	15.8

자료: 이상돈 외(2008), 134쪽.

<표 3-15>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7~2017)

(단위: 천 명)

구 분		성장수요	대체수요	신규공급	초과공급	연평균 초과공급
전문대졸	전 산업	1,194.6	354.2	1,811.6	262.7	26.3
	농림어업	1.7	8.9	4.8	-5.7	-0.6
	광업	0.1	0.3	0.0	-0.4	0.0
	제조업	140.1	36.0	395.4	219.3	21.9
	전기가스수도	0.0	0.0	29.9	29.9	3.0
	건설업	12.8	8.9	71.8	50.1	5.0
	서비스업 소계	1,039.9	300.2	1,309.7	-30.4	-3.0
	도소매업	225.7	52.4	211.7	-66.3	-6.6
	음식숙박업	22.9	13.3	60.0	23.8	2.4
	운수통신업	175.4	24.0	87.2	-112.2	-11.2
	금융보험업	113.9	21.7	56.4	-79.3	-7.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44.9	60.8	311.9	106.2	10.6
공공개인사회서비스	357.1	128.0	582.5	97.4	9.7	
대 졸	전 산업	1,645.4	492.4	2,276.0	138.2	13.8
	농림어업	0.0	2.6	5.2	2.5	0.3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212.3	49.9	507.8	245.6	24.6
	전기가스수도	4.7	5.2	45.5	35.5	3.5
	건설업	104.7	25.0	77.4	-52.3	-5.2
	서비스업 소계	1,323.6	409.6	1,640.2	-93.0	-9.3
	도소매업	269.8	75.1	191.6	-153.3	-15.3
	음식숙박업	15.6	19.2	33.4	-1.4	-0.1
	운수통신업	63.1	23.0	135.1	49.0	4.9
	금융보험업	212.8	31.6	76.1	-168.3	-16.8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261.1	69.7	446.5	115.7	11.6
공공개인사회서비스	501.2	191.0	757.5	65.3	6.5	
대학원졸	전 산업	798.4	97.5	908.6	12.6	1.3
	농림어업	0.7	0.8	0.1	-1.4	-0.1
	광업	0.0	0.0	7.5	7.5	0.8
	제조업	66.2	10.1	142.6	66.4	6.6
	전기가스수도	5.0	0.0	12.3	7.3	0.7
	건설업	15.8	5.3	3.0	-18.1	-1.8
	서비스업 소계	710.7	81.4	743.0	-49.0	-4.9
	도소매업	50.9	6.8	26.0	-31.7	-3.2
	음식숙박업	11.1	0.5	1.6	-10.0	-1.0
	운수통신업	24.5	7.9	22.1	-10.2	-1.0
	금융보험업	36.7	0.0	21.4	-15.3	-1.5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51.0	15.5	189.3	22.8	2.3
공공개인사회서비스	436.5	50.7	482.6	-4.6	-0.5	

자료: 이상돈 외(2008), 135쪽.

신규인력 수요는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통해 산출되는데 각각의 결과를 합한 것이 신규인력 수요 전망이 된다. 2007~2017년 전망기간 중 산업에서 요구하는 신규수요는 총 4,583천 명이고 해당기간 중 신규공급은 총 4,996천 명으로 동 기간 중 단순히 신규공급인원에서 신규수요인원을 차감해서 도출되는 산업별 수급차 인원은 413천 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연평균 41.4천 명이 초과공급 될 전망이다.

산업대분류별로는 제조업에서 총 531천 명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 뒤를 이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연평균 25천 명씩 총 245천 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서비스업 전체로는 동 기간 중 연평균 17천 명씩 총 173천 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보험업이 동 기간 중 총 263천 명의 초과수요, 도소매업도 251천 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림어업에서는 전망기간 중 신규수요도 15천 명에 불과하지만, 신규공급도 10천 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5천 명의 초과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농림어업의 쇠퇴로 인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대분류의 수급차 전망결과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2007~2017기간에 전체 산업에서 전문대 출신은 263천 명, 대학출신 138천 명, 대학원출신 13천 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3-15〉 참조). 2017년까지의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전문대 및 대학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대학원출신이 노동시장에서 소규모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대분류별로 학력별 수급차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학력출신은 제조업에서 219천 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30천 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학 학력출신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246천 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93천 명이 초과수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 학력출신 또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초과공급이 전망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 초과수요가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 초과공급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전문대졸에서 운수통신업, 대졸에서는 금융보험업, 대학원졸에서는 도소매업으로 전망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3절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2020년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혁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추진한 외국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은 국가별 접근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발휘하는 데 시사점을 주는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간에 각국의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된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 또는 확대가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1. 국제기구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 접근

UNESCO(2001)에 따르면,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인문교육(general education) 이외에 다양한 직업생활과 관련된 지식, 이해력, 태도,

실무 능력의 습득, 과학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편 직업교육은 ① 인문교육의 필수 요소, ② 직업 세계로의 효과적인 이행 수단, ③ 평생학습의 중요 요소, ④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 ⑤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인(safe and sustainable) 발전의 촉진 도구, ⑥ 빈곤 완화 수단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생교육 이념 실현의 중요한 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협소한 의미를 극복하고 평생교육과의 상관성을 제고시켜 평생교육의 강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직업훈련 포함)시장은 광범위하므로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일은 평생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한 국민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강화는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상관성을 강화시키는 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Chapman & Aspin(1997: 1-3)은 UNESCO/ OECD/European Parliament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은 ① 지식경제와 학습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② 교육과 훈련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수립과 이에 기초한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제도, 전통적·대안적 교육제도, 공공부문·민간부문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 ③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산업체, 계속교육기관 간의 이동경로(pathways) 확대, ④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과 고용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OECD(1996: 3) 회원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은 1996년 1월에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현 대책'(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for All)에 관한 회합을 가진 후에, 21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 산업현장,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결집력을 확보해 주는 핵심적인 수단은 유아교육

에서부터 퇴직 후의 적극적인 학습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의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①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확장과 질 제고, ②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직업생활간의 상호 연계된 이동 경로 체제 확대, ③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있어서 정부, 사회기관, 교육기관, 가족,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재규정, ④ 정책결정과 실행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의 기반’(knowledge base)과 인적·물적 자원 확보, ⑤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이다.

이 같은 동향을 살펴볼 때, 직업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 사조는 인문주의적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기관·공급자·제도권 중심에서 학습자 또는 수요자중심으로 변해 왔고, 민주적 사회구현과 개인의 생애 학습권 보장으로 출발했던 평생교육의 이념이 인적자원개발로 그 강조점이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평생교육의 이념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관점(박성정, 2001; 손순중, 2000; 한승희, 2004)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경제의 저성장, 고용시장의 변화 등으로 OECD의 평생교육 이념이 강조되는 추세이다(김경희, 2003: 54-55).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의 위치와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일이 요청된다.

2. 중등직업교육 제도 혁신

박동열 외(2008 : 208-211)는 주요 국가의 중등직업교육제도를 분석한 후에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첫째, 고교단계 직업교육은 점차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를 선택한 '직업 고교'를 '전문 고교'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의 양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은 일생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학과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내용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의 목표는 점차 중국교육에서 계속교육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점차 보통교육화 되고 있는 점과,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학과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문학과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률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슈퍼 전문고교'(super vocational high school)의 육성과 일본판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슈퍼 전문고교는 문부과학성에서 2003년도부터 첨단적인 기술 등을 받아들인 교육이나 전통적인 산업에 관한 학습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전문고교를 스페셜리스트 육성 고교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듀얼시스템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고교 재학 기간 동안 기업의 실습훈련과 교육기관의 수업을 병행한 뒤 수료 시에는 능력평가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슈퍼 전문고교와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전문고교의 특성화 추진과 함께 산업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고교의 활성화와 졸업생의 취업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첫째, 직업교육이 중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산업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

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 능력이 필요한 직업의 인력까지 양성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도 지원하는 계속교육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이류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고도의 기술과 학문적인 지식을 동시에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선도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책무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학교 학생들에게도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차원에서 일반교과에 직업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능력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직업세계 이행을 돕기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들의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첫째, 최근 들어 자율학교와 학교선택제의 강조를 통한 학교교육에서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에 의해 보편성과 포괄성의 원리에 토대를 둔 교육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즉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따로 있음에도 의무교육 및 평등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이들의 인문학습 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새로운 교육철학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선택제가 보편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 계층구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철학은 신분이나 계급, 빈부의 격차 등에 따른 교육차별화를 지양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위가 낮아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존재한다. 모든 교육 체제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차원에서 ‘꼬뮌청소년프로그램’(KUP)은 직업소개소와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개인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이 될 경우 지자체를 통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셋째,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기반의 직업교육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직업교육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한 통합고등학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17개 분야의 프로그램은 직업중심 프로그램(13개)과 대학진학중심 프로그램(4개)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직업중심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을 대신하여 실제 기업체 및 산업현장에서 15주 이상의 ‘직업현장교육’(APU)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욱 강화된 형태의 직업 현장교육을 위해 ‘직장학습’(LIA)과 도제교육을 부활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

가. 고등교육기관 간의 경계 모호화(blurring)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4년제 대학이 2년제 대학처럼 직업준비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4년의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2년제 지역대학(communitry college)이 증가하고 있다. 후자의 한 사례로 패션과 디자인에 국한되었기는 하지만, 학사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위과정이 1970년대부터 뉴욕 주의 지역대학인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 개설·운영되어 왔다(Glennon, 2005; Grubb & Lazerson, 2005). 독일이나 핀란드 역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의 경우 Polytechnic에는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www.minedu.fi).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인문교육 이념에 기반한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엘리트층을 위한 대학(University)체제와 대중을 위한 공업·상업·예술 분야의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하던 '전문기술대학'(Polytechnic)체제로 이원화된 교육체제를 운영하면서 엘리트교육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이론적 인문교육의 이념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교육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1992년에 'University'라는 용어로 단일화하여 전문직업교육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고 고등교육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통합의 방향은 'University'가 아니라 'Polytechnic'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Stevens, 2005 : 53).

이와 같은 외국의 변화 과정 중에서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직업중심대학의 고유 목적과 기능¹⁾이 간과되거나 4년제 대학교와 기능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쟁점의 핵심적인 관점은 2년제 대학이 4년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고 애쓰다 보면 직업중심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개방적 고등교육 정책(open door policy)'으로 인해 지역대학이 4년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대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4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대학이 그에 걸맞은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여러 조건과 기준을 통해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발전시키다 보면 지역대학의

1) 미국 지역대학(communitiy college)의 주요 기능으로는 편입교육, 지역사회와 학습부진자를 위한 개선교육, 성인교육, 직업·기술 교육을 들 수 있다(정태화 외, 2007 : 64-65).

입학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가까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역대학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 없이 제공되는 2년제 대학의 4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기존의 4년제 대학교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를 넘어선 중복된 학위과정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주에서 2년제 지역대학에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승인하기보다는 기존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연계 방안 추진에 관심을 두고 있다(Glennon, 2005).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많은 일반대학들이 전통적으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영역으로 간주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2007년도에 관련 법이 통과되어 2008년부터는 전문대학이 4년제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전문대학 기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정태화 외, 2007 : 65).

나. 새로운 유형의 도전

1) 비대학(Non-university Tertiary Education)

곽재석(2004)은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재구조화 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비대학 고등교육은 교육체제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내용과 기회를 제공하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과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무엇보다도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고급기술의 급격한 수요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 때문이다. 사실 기존의 대학은 너무 경직

되어 실질적인 기술이나 직업교육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학문 중심적, 엘리트 중심적이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고등교육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의 대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은 더욱 광범위한 학습영역에 걸친 직업교육을 가능케 한다. 둘째, 제공되는 직업교육을 살펴보면, 기초부터 최고급 수준의 직업 기술까지 매우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접할 다양한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대학 고등교육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비대학 고등교육이 앞으로 그 역할과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비대학 고등교육 분야가 기존의 전체 국가 교육체제와 얼마나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재정 문제이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기존의 대학보다 학생 일인당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비고등교육 분야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재정투입의 수준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또 다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재정 부담률이다. 비대학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나라에 따라서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그러나 비대학 고등교육의 무조건적 확대는 오히려 국가재정이나 교육의 형평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대학 혹은 비대학에 대한 구분 없이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교수의 질 문제(quality of teaching)이다. 강의실 위주의 교수 방법에 치중하는 소위 '구조적 태만'(structural neglect)의 문제는 비대학 고등교육기관과 기존의 대학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비대학 고등교육에 있어 교수의 질 문제는 교육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오늘날 OECD국가들에서 비대학 고등교육 분야는 큰 성장을 거두며 기존의 고등교육 체제 안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비대학 고등교육의 정체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학 고등교육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OECD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비대학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 이슈가 담고 있는 의미를 숙고하여 바람직한 고등교육 재구조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① 대학, 비대학 등 여러 고등교육 유형 중 어떤 종류의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② 각기 다른 유형의 교육기관들에 따라 차별적인 재정을 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위계 서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③ 자격 제한을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교육체제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혹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 ④ 비대학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존의 대학 등과 연계를 하면서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을 다소 독립적인 성격으로 유지할 것인가?
- ⑤ 교육소외 계층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재정 등의 보조정책 등을 사용할 것인가?
- ⑥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현장 및 실무 중심적인

교수방법을 택할 것인가 혹은, 각 교육기관의 개별 정책과 선호에 따르도록 허용할 것인가?

- ⑦ 교육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택할 것인가?

2) 캐나다의 기술종합대학(University College)

이 대학은 캐나다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징을 합친 것과 같은 형태로 실용적인 과정과 학문적인 과정을 한 캠퍼스에서 동시에 제공한다. 즉 일반대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전문대학의 2~3년제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대학 형태이다.

이 대학은 종합대학의 장점인 학문 위주의 학사학위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대학의 장점인 강력한 학생지원서비스, 소규모 학급규모 그리고 우수한 캠퍼스 환경들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준학사 과정 이수 후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접목시킨 프로그램과 대학 편입학 프로그램(적어도 B 또는 B+이상) 등이 제공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http://en.wikipedia.org/wiki/University_college).

3) 핀란드의 폴리테크닉(Polytechnic)

선진국의 여러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인문교양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대학만이 고등교육으로 인정되고 직업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으로 인정되는 위계적 체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수준 높은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일반 교양교육, 전문교육, 직업교육, 현직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폴리테크닉 등 일반대학과 차별화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출현하여 고등교육체

제 내에서 일반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이 이원화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핀란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과 수요자가 확연하게 다른 기관인 일반대학과 전문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폴리테크닉을 위계적 차이보다는 공존의 형태로서 이원화체제로 운영하는 고등교육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차별화된 기관의 특성을 발현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유리한 구조로, OECD 평가단은 핀란드의 고등교육 이원화 정책의 목적은 “개인의 이동성(Mobility)을 최대화하고 기관의 이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간에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OECD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원적인 시스템은 단일한 시스템보다 더 개인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다(OECD 2009).

4.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제도 운영

가. 영국의 현대 도제제도

영국에서는 중세시대부터 ‘수공인 조합’(craft guilds)이 도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전통에 따라 과거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직업훈련은 기능인 직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도제제도였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하여(Payne, 1999: 479-480), 전통적인 도제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95년에 정부의 지원 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대 도제제도’를 도입하였다.

현대 도제제도는 ‘기초과정’(Foundation Modern Apprenticeship)과 ‘고급과정’(Advanced Modern Apprenticeship)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훈련

기간의 경우에는 각 산업체의 특성이 달라 특별히 일정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년,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도 훈련생의 역량과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급과정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술 습득과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과정은 산업체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체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현재 82개의 산업분야에 이 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공학, 건축업, 회계업, 보험, 소매업, 통신 등이다. 이 과정이 1995년에 도입된 이래로, 약 500,000명의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는 약 135,000명의 청년들이 훈련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의 훈련은 '현장내부 훈련'(on-the-job training)과 '현장외부 훈련'(off-the-job training)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생은 임금을 받는다. 한편 기초과정은 NVQs 2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급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 과정에도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52개의 직종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전일제 근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생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고급과정에 진입할 수도 있다. 1997년에 도입된 이래로, 약 250,000명의 청년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약 100,000명이 참여하고 있다(DfES, 2002).

현대 도제제도는 현장기반의 훈련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면서 네 가지의 기본 요소(① NVQs 자격의 취득, ② 팀워크, 문제해결, 의사소통, 새로운 기술 사용법 등과 같은 핵심 기술(key skills)의 교육, ③ NVQs 이외의 기술자격의 취득, ④ 특정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의 훈련)를 중시한다. 이들 요소 중에서 NVQs 이외의 기술자격이란 과거부터 운영되어 온 NVQs 이외의 자격을 의미하며 그 한 예로 공학 분야에서 운영되어 온 'Edexcel BTEC National Diploma'를 들 수 있

다(DfES, 200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제도 참여 허용 대상의 문제, 교육 내용의 문제, 그리고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독일의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미래에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적인 직업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창업 촉진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었고²⁾, 이에 따라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이들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역량의 개발을 고무시킴으로써 소기업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과거에 독일에서 창업교육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종 내에서 전문인력이 주로 참여하는 향상훈련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훈련생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독립사업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대 직업훈련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에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성훈련에서는 창업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문제점의 인식 하에 일반 학교 시기부터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경제연구소는 직업교육훈련과 연계시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JUNIOR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한 학생들은 8

2) 독일에서 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이득은 ① 고용 창출, ② 새로운 상품의 등장과 발명 및 기술의 발전, ③ 수출 증대, ④ 정부의 세입 증가, ⑤ 경제 구조의 다양화, ⑥ 부가가치의 증대, ⑦ 중산 계층의 확대와 사회적 이동의 향상, ⑧ 자영업 개시 기회의 확대, ⑨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⑩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 기회 제공 등으로 간주되어 이에 필요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Itao, 1995).

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 동안 학교에 작은 회사를 만들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창업과정을 제공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기업경제학 등의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222).

한편 1983년부터는 '도제생 회사'(Juniorenfirm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제생 회사는 양성훈련생 또는 학교 학생들이 건립한 회사로서 훈련을 주도하는 기업 또는 직업학교의 보호 아래 운영된다. 도제생 회사는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로 교육을 위한 연습용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기업의 목표와 양성훈련의 목표는 물론 일과 학습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 기업의 목표는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에서의 성공과 이윤의 획득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60여 개의 도제생 회사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전 단계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222-229).

다.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

이 기관은 지역의 고교 재학생, 그리고 지역의 성인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교생을 위한 기관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 등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제 기준으로 주로 2학년과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1~2년간 지속된다. 둘째, 이 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하루의 일과를 학교에서의 수업과 이 기관에서의 수업으로 구별하여 참여한다. 셋째, 이 기관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재학학교↔기관 간 이동 수단은 재학학교에서 제

공한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비는 참여 학생의 재학학교에서 부담하고, 일부 추가 비용은 학생 자신이 부담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관의 운영 실태는 <표 3-16>과 같다.

이 기관의 운영 형태는 개별 학교에서의 개별적인 직업교육보다는 특정 기관에 다수 학교 학생이 집합하여 직업교육을 받음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동실습의 운영 방식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표 3-16>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 운영 현황

센터명	Beck Area Career Center	Bloomington Area Career Center	Capital Area Career Center	Grundy Area Vocational Center	Livinston Area Career Center	Texarkana Vocational Center	Collinsville Area Vocational Center	Whiteside Area Career Center
지역	Red Bud, IL	Bloomington, IL	Springfield, IL	Morris, IL	Pontiac, IL	Texarkana, AR	Collinsville, IL	Sterling, IL
program	차체수리	컴퓨터 수리	농업&산업기계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농업중사자 과정	차체 수리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소규모 건축 판매	유아 보육	항공정비	자동차 정비	소규모 건축 판매
	유아보육	컴퓨터 네트워크	파손차량 수리업	컴퓨터 응용	컴퓨터 응용	파손차량 수리업	소규모 건축 판매	컴퓨터 설계
	정보처리	토목공학 & 건축	자동차 엔진 정차	컴퓨터 수리 I	컴퓨터 수리	컴퓨터 수리	유아 보육	치인업무
	전자공학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공학	소규모 건축 판매	컴퓨터 공학	컴퓨터 응용	전자 매체

<표 계속>

센터명	Beck Area Career Center	Bloomington Area Career Center	Capital Area Career Center	Grundy Area Vocational Center	Livinston Area Career Center	Texarkana Vocational Center	Collinsville Area Vocational Center	Whiteside Area Career Center
program	간광관리	소규모 건축 판매	방송매체	미용	미용	미용	조리업	유아교육
	경찰행정(경관)	미용	컴퓨터 운용	치안업무	컴퓨터 설계	치안업무	전자공학	조리업
	용접	경찰행정	건축업	유아교육	보건학	산업공학	건강보호	건강보호
		조리학	전자공학	전기/로봇	경찰행정	인쇄	원예	기계공학
		전자공학	용접	소방/방재		오라클 인터넷	경찰행정	용접&조립(부품)
		디지털 매체	미용	건강관리		자동차 장비	기계 판매	

<표 계속>

센터명	Beck Area Career Center	Bloomington Area Career Center	Capital Area Career Center	Grundy Area Vocational Center	Livinston Area Career Center	Texarkana Vocational Center	Collinsville Area Vocational Center	Whiteside Area Career Center
program		유아 보육&교육	조리학	용접		취업진 인턴십	네트워크 공학	
		취업진 인턴십	유아 보육&교육			용접	용접	
		건강관리	건강관리					
		금속가공	경찰행정(경관)					
프로그램 개수	8	15	15	12	9	13	13	10

자료: <http://www.schools.lh5.k12.il.us/beck/index.htm>, <http://www.district87.org/avc/index.htm>, <http://www.capital.tec.il.us/index.php>, <http://www.gavc-il.org>, <http://www.lacc-il.org/>, http://txk.k12.ar.us/info/texarkana_area_vocational_center.htm, <http://websites.kahoks.org/cavc/index.htm>, <http://www.wacc-online.org>.

5.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 일본의 단기대학 사례

일본의 단기대학은 생존을 위한 학생 유치 노력과 함께 학부 및 학과의 폐지·통합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노력해 왔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2001년 12월에 발표한 '2002년도 개설 예정 대학 등 일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신설 예정인 17개의 4년제 대학 중에서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단기대학이며, 실질적인 4년제 대학 신설은 3건에 불과하다. 단기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는 방식으로는 ① 단기대학 내의 일부학부가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 단기대학 학과가 4년제 대학 학부로 통합되는 경우, ③ 4년제 대학 신설에 따라 단기대학이 폐지되는 경우, ④ 4년제 대학 신설에 따라 단기대학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 4년제 대학 학부 신설은 단기대학의 폐지·통합·정원 삭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기대학의 폐지·통합·정원 삭감을 전제로 4년제 대학 학부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한 단기대학 수는 총 131개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기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일 학교법인이 단기대학과 4년제 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립행정법인화를 목표로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공립대학이 통합을 결정하였고, 통합을 위한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는 츠쿠바대학(筑波大學)과 도서관정보대학(圖書館情報大學)이 통합을 결정하였고, 야마나시대학(山梨大學)과 야마나시의과대학(山梨大學醫科大學)의 통합이 합의되었다. 2003년도에는 도쿄상선대학(東京商船大學)과 도쿄수산대학(東京水産大學), 고베대학(神戸大學)과 고베상선대학(神戸商船大學), 가가와대학(香川大學)과 가가와의학대학(香川醫科大學), 규수대학(九州大學)과 규수예

술공과대학(九州藝術工科大学), 오이타대학(大分大學)과 오이타의과대학(大分醫科大學), 미야자키대학(宮崎大學)과 미야자키의과대학(宮崎醫科大學) 등이 통합되었고, 2004년도에는 후지야마대학(富山大學)과 후지야마의과대학(富山醫科大學) 및 다가오까단기대학(高岡短期大學) 등 28개 대학이 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日本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 中央教育審議會, 2002年 4月 3日).

이와 같은 국·공립대학의 통합 추세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은 바 크다. 문부과학성은 교육연구체제의 충실화, 지역 봉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의 인재 양성 공헌,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사회인의 경력개발 지원 기능 수행 등은 물론, 경영기반의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통의 교육연구 조직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사무부문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의 합리성 추구 등을 목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日本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 2002年 1月).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단기대학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OECD의 한국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OECD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OECD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Ⅱ)'를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조은상, 2008 : 113-127).

첫째, 직업교육훈련에 산업계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이 대표가 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훈련(교육과정, 자격 조건, 작업 배치, 직업교육훈련 조항 규정 등을 포함)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예를 들면, 분야별/지역별/전국적 수준의 조직체)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덧붙여, 모든 관련 부처(교육부, 노동부 및 기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권고하였다.

둘째, 우수한 품질의 현장실습(workplace training)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현장실습으로 이끄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기업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장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학생 교육능력 향상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직업교육훈련 교원은 직업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임하기 전에 직업교육훈련 교사들에게서 특히 부족한 현장 연수와 근무 경력을 소유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원의 재교육(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과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능 습득)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국가자격체제와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일반학교 졸업 학위와 직업자격 시험 결과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인정 체제'(a single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 틀은 직업교육훈련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고용주들이 참여해 시행하는 능력 중심의 직업자격 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평가의 요건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4절 주변 환경 변화가 직업교육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

직업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가 직업교육의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의 변화 전망,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 그리고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의 증가 등 인력구조 전반의 변화는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과 성인대상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2020년경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수출은 둔화되면서 경제의 지식집약화 및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으로 전 산업 내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는 줄고,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업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직업교육기관의 인력양성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정책에서는 단순히 학교 수 및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학과의 재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지만 2006년에는 그 규모가 5천 명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되는 등 향후에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과잉공급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이 같은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전문계고교 중심으로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는 2007년 2,623천 명에서 2017년에는 3,706천 명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이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고학력 인력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년제 중심의 전문대학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학과)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여러 나라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경계 모호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는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여러 나라의 직업교육은 산학협력체제의 구축과 함께 직업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체제 및 제도의 운영 필요성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OECD가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해 자문해 준 내용인 산업계의 직업교육 분야 참여 확대, 우수한 품질의 현장실습(workplace training) 확대, 직업교육기관 교원의 학생 교육능력 향상, 국가자격체제와 직업교육의 연계 확대 등의 내용은 향후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제 4 장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논의

정태화 · 이길순 · 이병욱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경의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혁신 방향의 논의 준거를 ①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분석, ②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관련 시사점 도출, ③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② 직업교육체제 혁신, ③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④ 직업교육의 국제화, ⑤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⑥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관리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내용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은 왜 재정립하여야 하는가?

그간에 직업교육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에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을 말한다.

이 개념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가 관장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 교육을 의미하는 직업교육과 주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성인대상의 직무능력향상·재취업 훈련을 의미하는 직업훈련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개념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왔다. 이들 문제점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성인의 평생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특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확대·운영하고 있는 성인 대상의 직업능력개발교육(양성교육과 향상교육)은 직업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업훈련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주관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 제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의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교육 혹은 직무능력향상교육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가 무엇이지는 더욱 불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최근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학교↔노동시장 간의 연계(school↔ to work transition)’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 교육이 노동시장의 신호를 적기에 반영하여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능력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학생중심의 취업준비교육을 의미하는 직업교육과 근로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 직업훈련은 통합적인 틀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양자 간의 연계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직업교육은 교과부 관장, 직업훈련은 노동부 관장이라는 인식은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교과부가 직업훈련 개념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노동부가 직업교육 개념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관련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 설정과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일반 국민과 직업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의 관점에서는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학교↔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 교육과 훈련의 개념 모호성에 따른 부처 간 정책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 재정립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다.

제2절 직업교육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학제 혁신

‘학제’(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학교계통과 학교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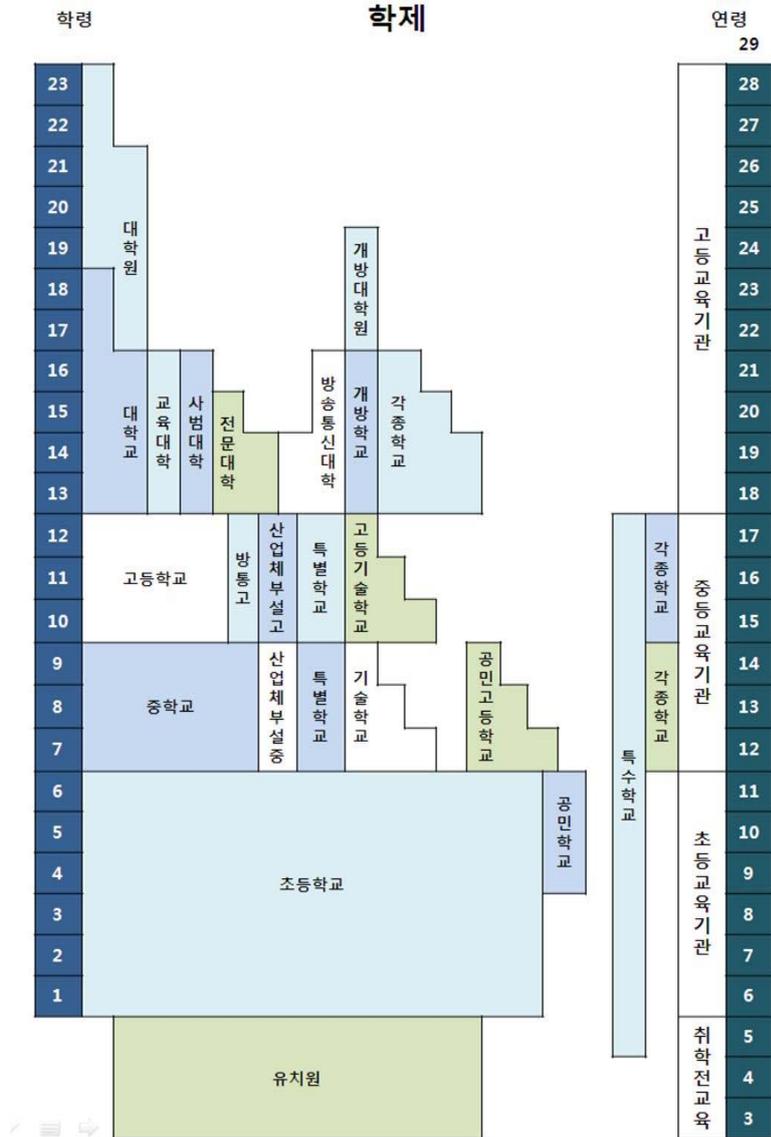
교육내용, 수업연한, 취학연령, 학교 간의 종적 연결(접속 또는 분화관계)과 계열 간의 횡적 연결(연계관계) 등을 위한 조직, 기관, 기구와 그 기능 및 운영 등을 법규로 제도화한 것"을 의미한다(노종희 외, 1996: 121-124). 간단히 말해 학제는 한 나라의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학교교육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학제는 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과 시기 및 방법(법령과 제도)을 규정한다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동시에 사회이념의 구현과 국민의 사회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제는 크게 학교 간의 접속관계가 단일하게 되어 있는 단선형 학제(ladder system)와 2개 이상의 계통으로 나누어지는 복선형 학제(dual system)로 구분되며, 각 학제들은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의 연결 관계를 가지는 기간학제와 그 주변에 위치하는 방계학제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국의 사례를 도입한 단선형의 6-3-3-4제로 이 학제는 1951년에 수립되어 6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그림 4-1] 참조). 초중등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주요 국가의 학제는 [부록-2] 참조). 지방분권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은 학제도 주(州)에 따라 다르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체연한은 모두 12년으로 동일하지만, 주에 따라 6-3-3제, 6-2-4제, 5-3-4제 등 다양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국, 영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4-6-3제를 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이 4년으로 짧은 반면, 중등학교 과정부터는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다. 일본은 6-3-3제로 한국의 학제와 유사하다.

[그림 4-1] 한국의 학제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9), 10쪽.

2006년도에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여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며 여론을 수렴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학제 개편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간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학제 혁신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단선형 학제를 미래 사회에서도 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선형 학제와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복선형 학제의 특성은 김도수(1996 : 64-66)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의 특징

학제 구분	특징
단선형 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형 · 단계성이 계통성보다 우선. 모든 계통을 동등하게 취급. · 개인의 능력, 적성에 따라 계통 간 이동이 가능. · 교육의 획일화 가능성: 모든 국민에게 각자의 적성, 흥미, 필요,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함이 없이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획일화나 균일화라는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말할 수 없음.
복선형 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형 · 단계성보다 계통성(사회 계급적 또는 계층적 계통성) 우선. · 기존의 사회체제를 고착시키는 폐쇄 체제적인 학제 · 교육의 다양화 가능성: 국민에게 각자의 적성, 흥미, 필요,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계통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표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는 복선형 학제보다는 단선형 학제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간의 학생 이동의 어려움과 동시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학생 이동의 어려움(전문대학의 편입학 기능 부재)과 교육내용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중복과 일반대학으로 편입한 학생의 학생생활 부적응 문제는 근본적으로 단선형 학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전문계 고교의 수업연한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 제기는 ① 전문계 고교의 수학 연한을 2년으로 단축시켜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 ② 현실적으로 전문계 고교생이 취업 후 산업체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대체적으로 단순 기능이므로 2년의 취업준비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③ 산업계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에서의 취업준비교육보다 취업 후 능력향상교육이 중요하므로 취업 전 교육보다는 취업 후의 재교육, 순환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보다 의미 있다는 주장 등과 함께 거론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 과거에 고교 1학년 시기에 운영하였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교과 교육을 그만두고 고교 1학년부터 전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혁신 방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교육 중심의 우수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도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계속 교육을 희망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학생 수는 115,005명이며 이 중 64.4%에 해당하는 74,033명이 전문대학으로 진학(일반대학으로는 115,005명 중에서 35.6%에 해당하는 40,972명 진학)하였고(〈표 4-2〉 참조), 전문대학생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으로 진학 및 편입학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4-3〉에 따르면 2007년 1학기 기준으로 일반대학 편입학생 24,352명 중에서 전문대학 출신자는 58.5%인 14,243명).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교육보다는 실무교육으로 일반대학 학사 혹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 후에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론교육 중심의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만, 학습 부적응 상황을 경험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직업계열 중심의 복선형 학제를 도입함으로써 실무교육에 국한하여 학사·석사·박사를 배출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복선형 학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의 학제에 이들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에 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산업대학(기존의 개방대학) 제도'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전문계 고교생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진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수: 158,408	진학자	74,033	40,972	115,005
	진학률	46.7(64.4)	25.9(35.6)	72.6(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2008에서 재구성.

<표 4-3> 일반대학 편입학생의 출신학교별 현황(2007년 1학기)

구분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방송대	각종 학교	외국 대학	독학사	학점 은행제	기타	계
편입자 수	8,276	14,243	773	126	98	156	4	522	154	24,352
비율	33.98	58.49	3.17	0.52	0.40	0.64	0.02	2.14	0.63	100.00

자료: 박병영 외(2008), 55쪽 재구성.

개방대학은 1981년에 도입되었으나 1996년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현재에는 <표 4-4>와 같이 전국에 13개의 산업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표 4-4> 전국의 산업대학 현황

(단위: 개교,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산업대학	13	1,561	161,87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산업대학의 전신인 개방대학은 80년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① 직업 기술인력 양성, ② 실업계 고교, 전문대 졸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부여, ③ 졸업정원제에 따른 중도탈락자 구제, ④ 저소득계층 및 산업체 근무자들에 대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즉 산업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근로 청소년·직장인·시민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학교이다. 또한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입학절차가 간소하다, ③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④ 학습 장소·방법이 다양하다, ⑤ 학사관리에 유연성이 있다.

이 제도는 단선형 학제 내에서 직업교육 중심의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① 산업대학의 정체성 불분명의 문제점, ② 산업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행·재정지원 차별의 문제점, ③ 교육 여건의 미흡 문제 등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신현석, 2000; 맹희영 외, 2003), 오히려 본래의 설립취지와 달리 일반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제 내에서 새로운 체제로 혁신시키는 정책 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의 수업연한과 관련된 쟁점을 들 수 있다. 이 주제는 최근에 전문대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들은 산업체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년간의 수학연한을 필요로 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정부는 전문대학 졸업(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 경력 소지 후에 다시 전문대학의 동일계열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당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9월에 40개 전문대 88개 학과(모집정원 2천40

명)에 대해 '2010학년도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신규 인가했다([부록-3] 참조).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 인가를 받은 317개 학과를 합쳐 전국 84개 전문대 405개 학과(모집정원 9천829명)에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연합뉴스, 2009. 10. 8).

이 제도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blurring)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업연한을 중심으로 볼 때, 기존의 2~3년제의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특성도 사라질 전망이다. 즉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단기간의 저비용 교육(〈표 4-5〉 참조)을 받은 후에 조기에 취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전통적인 전문대학의 장점 혹은 특징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생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방의 일반대학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개설을 통해 취업중심대학을 표방함으로써 전문대학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표 4-5>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비교

(단위: 개교, 천원)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학교 수	146	206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5,769	6,787

주: 1) 전문대학 학교 수는 2009년도 전문대학교육원담 기준.

2) 일반대학 학교 수는 본교와 캠퍼스를 분리하여 산출하였음.

3)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산식: 학교별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합계/전국 전문대학 수(146개교), 전국 일반대학 수(206개교).

자료: 대학알리미 공시자료(<http://www.academyinfo.go.kr>)에서 재구성.

이러한 고등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학제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제 혁신을 전제로

① 전문대학을 이전에 언급한 바 있는 산업대학으로 개편한 후 수업연한을 1~4년으로 자율화하는 방안, ②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고등교육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현행 체제 유지 시에는 고등교육법 개편을 통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철저한 차별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최근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단과 대학(University College)’의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학제를 직업교육 측면에서만 혁신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측면에서 제기되는 학제 혁신의 문제는 우리나라 학교교육 전반의 혁신 필요성에 따른 학제 혁신의 문제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계 고교 포함 고교 유형 재편과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가. 전문계 고교 포함 고교 유형 재편

학제 혁신과 관련하여 전문계 고교를 포함한 고교 전체의 유형을 정리하는 일도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형이 너무 다양하지만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부록-4] 참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①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전문계고등학교’, ② “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예·체능계고등학교’, ③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④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⑤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이들 학교 중에서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며 ①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②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③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④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⑤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⑥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⑦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⑧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⑨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된다.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한편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유사한 개념(『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인정)의 ‘자율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②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③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④ 특성화중학교, ⑤ 특성화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91조의2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학교는 ‘마이스터(Meister) 고등학교’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개괄해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계 고교를 포함한 고교의

유형 및 체제를 구별 짓는 원리로는 일반교육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여부(일반 고교 : 특수목적 고교), 학교운영의 특성화 여부(특성화 고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여부(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그리고 직업계열과 일반계열의 공동 운영 여부(종합 고교)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따른 학교의 유형 간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동시에 각 유형 및 체제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형의 복잡성은 유형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별성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과 현장에서의 교육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혁신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한편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문계 고교의 계열에 관한 법령 내용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7년 2월 28일에 개정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하고, 전문 교과는 ① 농생명 산업, ② 공업, ③ 상업 정보, ④ 수산·해운, ⑤ 가사·실업, ⑥ 과학, ⑦ 체육, ⑧ 예술, ⑨ 외국어, ⑩ 국제에 관한 교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교의 계열은 ① 농생명 산업고교, ② 공업고교, ③ 상업 정보고교, ④ 수산·해운고교, ⑤ 가사·실업고교, 그리고 ⑥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종합고교³⁾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는 외견상 다양성을 보여 주고

3)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공업, 농업, 상업 분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계열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 과정에서는 2009년 3월 10일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 13)가 건의한 '산업체 협약학교'의 도입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과 우리나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과 유사한 학교 유형이지만, 공립 전문계 고교를 중심으로 산업체 및 산업체 단체 등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을 일정 비율 보장한다는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대부분의 예산은 국가가, 산업체는 일부만 부담)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가 공립 자동차 고등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전문계 고교의 계열구조에 비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진입하는 산업·직종의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체계는 21개의 대분류 체계⁴⁾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 Draft)을 반영하여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하고, 제조업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산업 활동 즉, 컴퓨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였으며, 환경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하수·폐기물처리와 제조업에 분류되었던 원료재생업, 새롭게 대두된 토양정화 활동 등의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4) 이 체계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로서 하수·폐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본사(전 산업→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수의업(보건업→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여행사업(운수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산업영역이 이동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 및 산업별 전문화 및 포괄률을 검토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 및 설치업의 경우 국제분류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정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의 결합관계 등 산업활동의 특성상 설치 및 수리활동을 현행처럼 수리업은 서비스 부문에서, 설치업은 산업용기계장비 설치활동을 해당 기계장비 제조업에서 포함하여 각각 분류하고 있다. 또한 로봇,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산업 등 주요산업을 분류에 반영하고 제사 및 견방적업, 석탄화합물 제조업 등 쇠퇴산업은 통합하였다(통계청, 2007: 5-6). 이러한 변화는 1958년에 UN이 발표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1차 개정한 후에 2007년 12월 9차에 거쳐 개정한 결과(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전문계 고교 계열 구조와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표준산업분류 체계 간의 연관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계 고교의 계열을 구분하는 원리로 전통적 산업 분류 기준인 1차, 2차, 3차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현재의 ① 농생명 산업계열, ② 공업계열, ③ 상업정보계열, ④ 수산·해운계열, ⑤ 가사·실업계열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문계 고교 교육제도 운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산업계의 변화는 학과 운영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체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의 수요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전문계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계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학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은 산업계에서 현재의 전문계 고교 계열 분류 기준에 따른 산업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계 고교 계열 간의 특성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관점은 전문계 고교의 체제 개편을 필요로 하면서 관련 전공의 교원 수급 문제, 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문제점은 그간에 운영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의 운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산업계의 신수요를 반영하여 특성 있는 전공(원예, 정보, 디자인, 애니메이션, 조리과학, 인터넷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의 개발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전문계 고교의 계열 간 차별성 확보의 어려움은 농생명 산업계열 고교와 공업계 고교에서 기계, 토목, 환경 등에 관한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상업 정보계열 고교와 공업계열 고교에서 디자인, 전자 계산 등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는 현실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산업계에서 전통적인 산업분류 기준인 공업, 농업, 상업 분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분야의 능력은 모든 직종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특정 계열의 전문계 고교에서 이 분야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공급한다는 전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에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강기주, 1992: 64; 임천순 외, 1992: 162-165; 강무섭 외, 1999: 46)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에서 스웨덴과 같이 1971년에 기존의 인문계·상업계·공업계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하고, 1996년의 개혁 조치를 통해 대학진학 중심 계열으로는 자연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의 2개 계열을, 그리고 직업중심 계열로는 예술, 경영 및 행정, 건설, 아동 레크레이션, 전기 공학, 에너지, 음식, 신체장애아의 보육, 보건·간호, 호텔 및 식당, 기계 및 컴퓨터 산업, 미디어, 자연자원의 이용, 차량 공학 등 14개의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규환, 1997: 283-287)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이 볼 때, 산업계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용 가능성 확대 차원에서 학제 혁신을 전제로 전문계 고교 계열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직업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

가. 전문계 고교의 기능 재정립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직업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교육 조직인 동시에 사회적 조직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는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취업을 강조하면서 성인 직업교육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하는 등의 기능 재정립에 일조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추진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에 소홀히 한 점이 이들 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고교의 전통적인 기능이었던 기능인력 양성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은 주로 전문계 고교를 통해 양성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교는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물론 향후에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천연자원이 부족함에 비해 비교적 인적자원은 풍부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국경 없는 지구촌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이들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국가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을 전문계 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성·공급하는 정책은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실은 전문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인력 수급체제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능인력 양성 및 활용 대상의 다양화 차원에서 외국근로자를 포함하여 사회 내의 다양한 인력(주부인력, 고령인력 등)을 양성·활용하여야 하는가, 또한 기능인력 양성기관의 다변화 차원에서 전문계 고교 이외에 사회 내의 여러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체 연수원,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기술계 학원 등)에서 기능인력을 동시에 양성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 전문계 고교의 취업률은 19%임에 비해 졸업생의 72%는 취업이 아닌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현실(서울신문, 2009. 10. 7) 속에서 정책담당자나 전문계고교 관계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전문계 고교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전문계고교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표 4-6>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

(단위: 누적명)

구 분	'04	'05	'06	'07	'08	'09.7
계	7,095	67,568	146,767	291,333	492,311	595,116
일반고용허가제	3,167	34,826	63,802	97,489	172,513	208,617
특례고용허가제	3,928	32,742	82,965	193,844	319,798	386,499

주: 1) 연간은 12월 기준.

2) 특례허가제 취업현황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07.2월까지) 및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에서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등록을 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07.3월 이후 기준변경).
자료: 노동부(2009. 9. 21), 33쪽.

고학력화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률(7.7%)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3.3%)보다 2배 이상 높아(통계청, 2009)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

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3D 기피 현상'이 강해 중소기업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장실습에 나온 전문계 고교생들이 실습 중에 어려움을 경험한 후 대학진학으로 진로 목표를 변경하고, 취업 후에도 대학진학을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 전문계 고교생의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정태화, 2002 : 48).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계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이직률도 낮은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의 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고준기, 2005 : 209-233 ; 이경국, 2009 : 1-29)를 담보로 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요청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가 <표 4-6>과 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전문계 고교생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기능인력 수급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외국인근로자의 기능인력 대체 정책은 우리나라 기능인력 전반의 수급체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문계 고교의 기능 및 역할과 연관시켜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의 기능 재정립도 이와 연관시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완성교육의 성격을 갖는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 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를 3년간의 학습 결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 체제는 평생직업교육 단계의 시작 단계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문계 고교 입학생에게 졸업 후 즉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해 주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

은 전문계 고교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은 물론 평생에 걸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일이라는 점이다.

평생학습사회와 관련된 전문계 고교의 기능 재정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전문계 고교에서의 성인대상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안이다. 이 주장은 다소 생소하게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⁵⁾의 ①항과 ②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⁶⁾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일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기성 외(2008)의 ‘지역 인적 자원개발(RHRD)을 위한 전문계 고교 평생학습기관화 방안’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2008년 2월에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교 156개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 교사들은 전문

5)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6)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계 고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생교육으로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지적하였다.

<표 4-7> 전문계 고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성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

구분		예	아니오
학교 유형	공업계	89.9	10.1
	농업계	86.4	13.6
	상업계	80.0	20.0
	수산·해운계	75.0	25.0
	가사·실업계	88.9	11.1
	기타	75.0	25.0
학교 소재 지역	광역시	84.2	15.8
	시·군	80.0	20.0
	읍·면	89.3	10.7

자료: 이기성 외(2008), 69쪽.

<표 4-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

구분		학력 보완 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기타
학교 유형	공업계	7.2	15.9	89.9	5.8	31.9	2.9	8.7
	농업계	0.0	13.6	86.4	0.0	22.7	0.0	27.3
	상업계	6.0	20.0	96.0	10.0	36.0	0.0	2.0
	수산·해운계	0.0	0.0	50.0	0.0	25.0	0.0	25.0
	가사·실업계	0.0	0.0	88.9	0.0	22.2	0.0	0.0
	기타	0.0	0.0	75.0	0.0	75.0	0.0	0.0
학교 소재 지역	광역시	10.5	23.7	92.1	7.9	28.9	0.0	2.6
	시·군	6.0	16.0	92.0	8.0	38.0	0.0	12.0
	읍·면	1.8	12.5	89.3	3.6	30.4	3.6	10.7

자료: 이기성 외(2008), 68쪽.

이 같은 조사 결과(〈표 4-7〉, 〈표 4-8〉 참조)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포함)의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최근에 전문계 고교의 학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존 시설·설비의 유희화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전문계 고교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업교육 대상은 지역의 성인 주민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직업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의 주부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주부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당해 전문계 고교 재학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경국(2009 : 24)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기술·기능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는 다문화교육 강사, 외국어 교사 등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가 이 같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는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전문계 고교가 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가 있고 여건이 구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전통적으로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목적)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

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관련 내용을 주로 고교 졸업 후 입학한 학생에게 교육시켜 전문직업인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는 이러한 기능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에서의 교육만으로는 근로자가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학습’(Continuing Education)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노동시장 이동’(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transition)의 원활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여전히 고교졸업생을 위한 양성교육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성인을 포함하여 사회의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이에 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이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에 미래를 지향하는 전문대학의 기능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최근 2년간에 거쳐 진행된 정태화 외(2006)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정태화 외(2006)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전문대학의 현실진단,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동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방향을 크게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교육 기능과 평생직업교육 기능으로 대별하여 제시한 후,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① 산학협력 활성화, ②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③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운영, ④ 교육 대상의 다양화, ⑤ 학사제도의 다양화, ⑥ 졸업생의 취업지도 강화, ⑦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 및 학점 교류, ⑧ 성인학습자 유치를 위한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 도입 운영, ⑨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등

으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다음 연도에 정태화 외(2007)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운영 방안’에서 전년도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5대 기능으로 설정한 후 전국 전문대학의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총 450명 중 313명이 조사에 참여, 회수율 69.6%)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① 고졸입학생을 위한 실무중심 직업교육(91.3%), ②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75.4%), ③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지도(68.4%), ④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49.9%), ⑤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직업교육(48.3%)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전문대학 주요 보직자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의 전문대학 기능별 중요도

(단위: 명, %)

전문대학의 기능	중요한 정도					전체
	전혀 중요하지 않음	거의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고졸입학생을 위한 실무중심 직업교육	2 (0.6)	2 (0.6)	23 (7.3)	115 (36.7)	171 (54.6)	313 (100.0)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4 (1.3)	8 (2.6)	65 (20.8)	161 (51.4)	75 (24.0)	313 (100.0)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직업교육	5 (1.6)	39 (12.5)	118 (37.7)	122 (39.0)	29 (9.3)	313 (100.0)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지도	3 (1.0)	22 (7.0)	74 (23.6)	153 (48.9)	61 (19.5)	313 (100.0)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7 (2.2)	44 (14.1)	106 (33.9)	116 (37.1)	40 (12.8)	313 (100.0)

자료: 정태화 외(2007), 38쪽.

<표 4-9>의 조사 결과 중에서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타 기능에 비해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취약계층 대상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으로 인식하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요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능을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기능으로 정립함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들 기능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이었던 고졸자의 실무중심교육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과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대상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지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만약에 전문대학이 취약계층과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대상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학사관리 체제의 전반적인 혁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현재의 학사제도는 주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이 이러한 미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는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업연한의 자율화이고, 둘째는 전문대학이 일반대학 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는 현상([부록-5] 참조)과 전문대학에 적절한 학과를 일반대학이 운영하는 현상이다(<표 4-10> 참조).

<표 4-10> 전문대학에 적절한 학과에 대한 일반대학의 학과 운영 사례(2009)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학교 수	학과 수	학교 수	학과 수
미용·뷰티	88	121	21	28
귀금속 공예	18	21	7	10
애완동물	22	28	4	4
안경광학	28	28	11	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고등통계 DB에서 연구진이 분석.

전자의 사안은 앞부분의 학제 혁신 부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는 다소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학과를 신설·폐지·조정할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직업교육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직업교육 혁신의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교육의 초기단계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포함)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 그리고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 중심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가.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기초수학능력 제고

최근에 우리나라 직업교육기관의 최대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생 확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입학생의 수학능력(修學能力)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능력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공계의 경우)에 관한 최소한의 학업가능 능력으로서 전공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학능력은 일반시민의

로서의 생활 영위에는 물론 성인 시기에 필요한 계속교육에도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학생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능력과 관련하여 전문계 고교생에 관한 실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초에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08년 10월 시행)⁷⁾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4-11>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이 2008년을 포함하여 그간에 추진해 온 일반계 고교 대비 전문계 고교 1학년 생의 학업성취 평가 결과이다.

7)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는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수행하는 과제이다. 이 성취도 평가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을 표집하여 시행된다. 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4-11> 고1 학교의 목적 유형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

교과	성취수준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	진문																
국어	우수학력	-	-	18.5	0.8	27.3	17.9	1.0	42.2	23.6	1.7	13.6	19.1	1.3	5.8	25.2	1.5	18.4	
	보통학력	-	-	51.2	17.3	30.8	58.5	6.6	32.0	51.6	26.0	38.4	52.2	23.4	40.3	53.7	26.7	39.2	
	기초학력	-	-	28.5	63.8	35.2	21.6	60.5	24.4	22.9	60.0	42.1	25.3	61.9	45.8	19.4	60.9	37.6	
	기초미달	-	-	1.8	18.1	6.8	2.0	11.9	1.4	1.9	12.3	5.9	3.4	13.4	8.1	1.7	10.9	4.8	
사회	우수학력	12.1	1.2	31.6	6.0	0.1	14.3	5.0	0.0	16.4	6.4	0.1	1.6	5.8	0.1	1.5	6.6	0.0	4.4
	보통학력	39.5	10.1	34.0	45.2	3.8	23.0	41.8	5.7	47.4	37.9	3.8	21.5	37.7	3.3	16.7	41.3	3.0	27.2
	기초학력	45.1	66.8	28.6	45.6	63.6	46.0	58.2	25.6	49.8	60.8	57.3	50.3	59.7	64.7	47.8	64.8	53.1	53.1
	기초미달	3.4	21.9	5.8	3.1	32.5	16.7	6.1	36.0	10.6	5.9	35.2	19.6	6.2	36.8	17.1	4.4	32.1	15.4
수학	우수학력	18.4	1.4	45.2	16.8	0.3	24.4	15.7	0.8	47.6	18.8	0.3	9.4	22.1	0.7	5.2	20.3	0.4	10.7
	보통학력	46.2	15.7	29.2	48.3	4.3	16.0	7.4	28.7	45.2	6.1	33.3	44.5	6.8	24.2	46.1	7.2	33.0	
	기초학력	30.9	56.8	18.7	32.3	69.3	47.5	59.7	18.5	31.5	61.1	41.3	30.2	68.8	57.9	29.4	68.2	45.3	
	기초미달	4.5	26.1	6.8	2.5	26.1	12.1	4.3	32.1	5.2	4.6	32.5	15.9	3.2	23.7	4.2	24.2	10.9	

〈표 계속〉

교과	성취수준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	전문																
과학	우수학력	11.1	0.7	33.6	8.7	0.2	9.8	8.8	0.1	20.9	9.1	0.3	1.5	7.9	0.2	2.4	10.4	0.1	4.2
	보통학력	46.1	10.8	36.4	50.4	5.2	27.3	50.6	8.0	43.0	48.1	6.8	32.4	46.7	6.1	20.0	55.3	10.4	41.3
	기초학력	36.8	57.2	24.3	33.7	44.0	37.3	36.1	61.2	30.5	36.3	58.5	44.0	38.0	60.2	57.7	29.4	60.7	40.4
	기초미달	6.1	31.3	5.6	7.2	50.6	25.6	4.5	30.7	5.5	6.5	34.4	22.2	7.3	33.6	19.8	4.9	28.7	14.1
영어	우수학력	9.0	0.5	45.2	13.8	0.3	30.0	14.4	0.7	48.8	15.6	0.1	6.1	22.1	1.2	4.6	26.3	1.1	13.2
	보통학력	47.5	12.3	33.7	54.5	6.9	22.0	49.0	8.7	22.5	46.8	9.0	38.7	46.4	10.5	29.0	45.9	12.7	35.6
	기초학력	40.5	69.8	15.9	30.4	78.7	42.8	35.6	80.3	25.3	35.5	74.6	50.1	30.0	78.2	62.5	25.9	71.7	45.5
	기초미달	3.0	17.5	5.3	1.4	14.2	5.2	1.0	10.3	3.4	2.1	16.2	5.2	1.5	10.1	4.0	1.9	14.5	5.7

주: 우수학력 - 100점 기준 80점 이상.

보통학력 - 100점 기준 50점 이상 80점 미만.

기초학력 - 100점 기준 20점 이상 50점 미만.

기초미달 - 100점 기준 20점 미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내부자료.

〈표 4-11〉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대비 전문계 고교 1학년생의 학업성취 평가 결과 중 기초학력 이하(기초학력자와 기초미달학력자 포함)의 학업성취를 보인 집단의 비율은 전문계 고교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문계 고교와 같은 재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간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지를 개발하여 진단한 결과, 일부 계열을 제외하면 전문대학 입학생의 수학능력은 중2~중3 정도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 대학은 이 결과의 파급효과(입학생 확보의 어려움 등)를 염려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실상은 위에서 살펴본 전문계 고교 1학년의 실상과 전문계 고교 졸업생 중 고등교육 진학률(72.6%) 대비 전문대학 진학률(46.7%)이 64.4%에 이르고 있다는 점(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2008)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일한 문제 상황에 접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문대학생의 기초수학능력 부족 문제는 향후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유발시키는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강력한 개선 대책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교를 포함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2008년 10월에 시행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 부진 학생이 학교급별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440개 초·중·고교를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력 향상 중점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또래 학생들보다 기초학력이 2배 이상 떨어지는 초·중·고교생들은 원하는 곳에서 학습 보조 강사로부터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 학교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3

년 동안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첫째인 2009년에는 학교당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총 840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부터는 시·도의 대응 투자를 의무화해 지원 예산을 늘린다. 특히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 모두 4,793 명을 '학습 보조 강사'로 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한다. 이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교사를 도와 부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방과 후에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등을 하게 된다. 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지도받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생,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지도하는 '개인 교사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24008012>).

이 같은 지원 정책에 비해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편이다.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수학생력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뢰성, 적절성 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직까지 검사 도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업교육기관 입학생 및 재학생의 기초수학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수요자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직업교육기관의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이외에도 수준별 수업 실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칭 '연차별 전문대학 입학생 기초수학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평가도구(시험문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 4-12>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학습 개발센터가 학년별·교과별로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는 평가문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년별·교과별 평가문항 개발 현황

(2009년 현재)

과목	학년별	분석 내용
국어	중1~중3	1, 2학기로 나뉘어 개발됨
	고1	학기 구분 없음(전학기)
	고2	학기 구분 없이(전학기) 독서, 문법으로 나뉘어 개발됨
영어	중1~중3	1, 2학기(a, b)로 나뉘어 개발됨
	고1	1, 2학기(a, b)로 나뉘어 개발됨
	고2	학기구분 없이(전학기) 영어 I, 영어II, 영어독해로 나뉨
수학	중1~중3	1, 2학기(가, 나)로 나뉘어 개발됨
	고1	1, 2학기(가, 나)로 나뉘어 개발됨
	고2	수학 1(문과 수학), 수학 2(이과 수학)로 나뉘어 개발됨
과학	중1~중3	학기구분 없이(전학기) 에너지, 물질, 지구, 생명으로 나뉨
	고1	학기구분 없이(전학기) 탐구, 에너지, 물질, 지구, 생명, 환경으로 나뉨
	고2	학기구분 없이(전학기) 물리 I, 화학 I, 화학II, 지구과학 I, 생물 I, 생물II로 나뉨

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과목 공통으로 중1부터 고2까지 개발되어 있음.

또한 당해 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물론 전문계 고교생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수학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이 지역주민 대상의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생의 기초수학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 확대 문제이다. 현재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중에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의 학점이 증대되어야 하나, 이들 교과목이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 문제는 <표 4-13>에서와 같이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교과(66,913개) 중에서 교양과목(4,994개)의 비율은 7.5%에 이르고 있어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가 배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13> 전문대학의 설립주체별·계열별 개설교과 현황

(단위: 개, 학점)

계열 \ 주체	국공립			사립			합계		
	교과목	학점	강좌	교과목	학점	강좌	교과목	학점	강좌
교양	198	479	329	4,796	11,477	16,446	4,994	11,956	16,775
공학	1,586	3,830	3,008	17,371	41,706	37,129	18,957	45,536	40,137
인문사회	773	1,990	1,659	17,976	47,486	40,086	18,749	49,476	41,745
자연과학	301	698	349	14,642	37,939	31,279	14,943	38,637	31,628
예체능	406	882	705	8,864	20,793	17,512	9,270	21,675	18,217
합계	3,264	7,879	6,050	63,649	159,401	142,452	66,913	167,280	148,502

주: 2007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 기준임.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8), 95쪽.

한편 전공교과 수업시수를 중심으로 교수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 속에서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의 확대에 대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한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전문계 고교생에게 적합한 대학 진학 경로 지원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두 번째의 사안으로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 지원 정책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1월에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계 고교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대학 진학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동일계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의 선발을 허용하고, 2005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여 실업계 고교생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하면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7년도에 ‘희망을 실현하는 실업계고 육성 전략’을 통해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을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최근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능인력 수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76년부터 시작된 실업계 고교생의 동일계 진학 우대 시책은 1983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고등교육 진학열 확대(실업계 고교 내에 진학반 운영 등)로 인해 산업인력 공급이라는 실업계 고교의 기능 수행 미흡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이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정책이 과연 전문계 고교의 초기 단계 수요자인 전문계 고교생이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학점은행제, 회사 내에 설립된 기술대학과 사내대학, 방송통신대학, 독학사 제도,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제도 등을 통해 고졸자가 평생에 걸쳐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고등교육 진학기회 확대 정책은 ① 전문계 고교 기능의 약화로 인한 정체감 상실, ② 중소기업 중심의 기능인력난 심화, ③ 과잉교육(고교생의 대학진학 증가)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심화, ④ 가계 부담 증대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정책에 관한 근본적 검토가 요청된다.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 욕구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 확대 현상을 방치하는 일은 더욱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학 진학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전문계 고교 졸업 후 대학으로 즉시 입학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대체 수단의 마련이 요청된다. 한 예로 전문계 고교 졸업 후 현장에서 3~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학비를

보조해 주어 전문계 고교→산업체 근로와 현장경험 습득→대학교육→현장으로의 복귀로 이루어지는 ‘순환교육 제도’(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즉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숫자는 줄어들고 취업을 선택하여 정부의 지원 대책 하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대학에 진학한 후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는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전문계 고교생의 ‘학교↔노동시장 이동’(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transition)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중앙대학교가 2010학년도부터 전문계 고교 졸업 뒤 산업체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졸 산업인력’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기 위해 ‘산업정보학부(145명)’를 신설한 일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 대학은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파격적인 제도이니만큼 그동안 산업체에 근무하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진학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졸업 이수학점은 기존 학부생과 같은 132학점으로 하되, 전문분야 근무 경험을 고려해 별도의 사전 테스트를 거친 경우 수강과목을 일정 범위 내(약 15학점)에서 면제해 줄 방침이다(<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4717>).

위에서 살펴본 중앙대학교의 사례와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제도는 전문계 고교생과 전문대학 졸업생을 위한 대표적인 순환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학비는 여전히 학생 부담인 점을 개선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를 전액 혹은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교과부의 일반회계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과정은 지식과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철저하게 현장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직업교육기관의 교원 능력 제고

<표 4-14> 정부 방침에 따른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용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
평가 목적	▶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대상자	▶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포함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포함 - 유치원 교원 제외
평가참여자	▶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전체 ▶ 학생 : 소속학교 학생 전체 또는 일부 - 초등 1~3학년은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참여 ▶ 학부모 : 소속학교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
평가 주기	▶ 1년마다 1회
평가 내용	▶ 교사 :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교장·교감 :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평가 방법	▶ 교원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을 종합하여 동료교원 상호 평가 ▶ 학생 :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초등 1~3학년은 학부모가 답임의 학급경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 학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평가문항 및 조사문항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단위학교 자율 결정
평가 기구	▶ 단위학교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육청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11명으로 구성
결과 처리·활용	▶ 교원 : 평가결과에 따른 자율연수 등 자기능력개발계획 작성·이행 ▶ 학교장·교육감 :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지원, 연수부과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 교원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및 능력 개발지원 계획 수립·시행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5), ii 쪽.

직업교육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는 교원이다. 또한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에서도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기관 교사(수)의 교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에 정부는 초·중·고 교원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2009. 9. 2)에 의하면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의 일환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10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상세한 내용(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이전에 살펴본 정부 정책에 따라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향후에 운영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교육기관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혁신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된 정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기관 학교급별 가칭 '교원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과 직업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교과 담당 교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 교원과 전문대학 교원에게 적합한 교원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전문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직무 영역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 양성기관에서의 교사 양성과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양성기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산업체현장 실습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양성과정 이수 후 현직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전문계 고교 재학생에게 현장감 없는 지식과 이론 위주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비난을 받는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현장실습을 소홀히 하는 기관에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전문대학에서 일부 학과(유아교육, 간호 관련 학과 등) 이외의 학과에서 재직하는 교원은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채 임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전문계 고교에서의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9호)에 따라 소정의 학생 학습지도 관련 교과를 이수한 후에 임용된다. 이 점에서 학생의 학습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계 고교 교원의 능력이 전문대학 교원의 능력에 앞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3~6개월간의 학생 수업지도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는 혁신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인근의 일반대학의 교육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교과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기관 교직원의 현직연수를 적극 강화하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청(전문계 고교 교원의 경우)이나 타 교육기관보다는 산업체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에 언급하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같은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많은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사례 연구, 입직 교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직 교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기관 교원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교육과정 중심의 연계교육 강화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정책을 접근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직적 연계’(Vertical Link)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통해 중복성이 없고 연속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전문계 고교생이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수평적 연계’(Horizontal Link)는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재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특정 분야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제2장에서 살펴본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과 취업약정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첫째, 형식적인 교육과정 연계체제 하에서 전문계 고교생은 연속성이 없는 중복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다. 둘째,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전문대학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입학자원이 부족한 전문대학은 이 사업을 안정적 입학생 확보 수단으로의 활용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넷째, 두 번째 모형에 따른 졸업생의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명칭에 상관없이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직업교육 혁신정책의 주요 의제(Agenda)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첫째,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 집단 간에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선행 작업이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 교수와 전문계 고교 교사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활동을 강화시켜 기존의 연계교육 지원사업에서 전문계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

학은 이 사업을 안정적 입학생 확보 수단으로의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두 번째 모형에 따라 전문계 고교생이 전문대학 진학 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개별 산업체가 아닌 산업별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들 단체의 관계자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시켜 교육과정을 공동개발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평적 연계'(Horizontal Link) 강화 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정책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성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왔고, 노동부는 입직 후의 성인 근로자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담당하여 왔다.

직업교육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은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관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의 출현, 정보화 사회의 발전,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는 점차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기능 수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제의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활성화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그 필요성이 주장되었다(정택수 외, 1997; 주인중 외, 2000; 정태화, 2001).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 영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연계는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의 전문계 고교 연수에 제한되어 있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은 과감한 혁신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직업교육 혁신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일 학교급 수준에 있는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들이 다양한 연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계과정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학점(전문계 고교는 수업시수)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 간에 교수(사)의 교류활동을 촉진시켜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실험·실습 관련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전국에서 동일 학교급의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수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연계의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이상의 대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소요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추천채용제도 확대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세 번째의 사안으로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천채용제도를 확대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직업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록-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정 2008.11.7. 경기도교육훈령 제213호)을 제정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7호)하여 제26조의 4 개정을 통한 기능인재(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 16).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해당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 업무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 강화

직업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일은 전공에서 습득한 지식과 이론을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정태화, 2003 : 217).

첫째,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은 학생에게 고용주 밑에서 근로자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언젠가는 자신이 습득한 능력을 기반으로 소규모 기업의 창업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데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운영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언젠가는 기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비전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둘째,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가가 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취업 초기에 산업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윈윈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과 학교 관계자와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가의 배출에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례 분석 대상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은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청소년비즈쿨(Bizcool)’이 학교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비즈니스 스킬 함양을 위한 차세대 경영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2009년 현재, 초·중학교 20개교(초등 10, 중등 10)와 전문계 고교를 포함한 일반계 고교 및 특목고 115개교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 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5>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학교 운영 현황(초·중·고 포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학교현황	94개교	96개교	135개교
학생 수	53,594명	61,032명	85,017명
창업동아리 수	313개	423개	786개

자료: <http://www.bizcool.go.kr>.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어린이 경제·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생활과 연계한 실전적 비즈니스 체험 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학생에게는 청소년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중급 이론 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급 이론 교육 및 실전 창업체험 학습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창업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비즈니스 체험교육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은 중기청에서 추진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중기청의 창업 관련 지원제도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학생의 기술창업 저변 확충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지원사업'과 우수 신기술 아이템의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대학 및 연구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성공창업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실험실 연구 결과물의 상업화를 위한 회사 설립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이 있다.

2009년 현재 146개 전문대학 중 80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운영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 창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 가능한 한 학생의 전공과 창업과정을 연계시켜 운영하는 일, 창업 실패에 따르는 재정 부담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이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일 등은 이 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직업교육의 최종 단계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한 논의가 요청된다.

가.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의 제고

<표 4-16> 주요 국가에서 강조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요소

국가 영역	호주 (key competencies)	영국 (core skills)	미국 (generic workplace skills)	뉴질랜드 (essential skills)
정보 활용 기술	▪ 정보의 수집, 분석, 조직화	▪ 의사소통	▪ 정보 ▪ 근간 기술 : 기초 기술	▪ 정보 기술
의사 소통 기술	▪ 개인의 생각과 정보를 통한 의사소통	▪ 의사소통 ▪ 개인기술: 자발적 학습과 직무수행	▪ 정보 ▪ 근간 기술 : 기초 기술	▪ 의사소통 기술
기획 및 자기 관리 기술	▪ 행동의 기획 및 구조화	▪ 개인기술: 자발적 학습과 직무수행	▪ 자원 활용 ▪ 근간 기술: 개인적 자질	▪ 자기-관리 기술 ▪ 자발적 근로 및 학습 기술
대인 관계 기술	▪ 타인과의 업무수행 및 팀내에서의 업무수행	▪ 대인적 기술: 타인과의 원만한 직무수행	▪ 대인적 기술	▪ 대인적 기술 ▪ 자발적 근로 및 학습 기술
수리 적용 기술	▪ 수리적 아이디어와 기법의 활용	▪ 수리: 수치의 응용	▪ 근간 기술 : 기초 기술	▪ 수리 적용 기술
문제 해결 기술	▪ 문제 해결	▪ 문제 해결	▪ 근간 기술: 사고력	▪ 문제해결 및 의사 결정 기술
공학 활용 기술	▪ 기술공학의 활용	▪ 정보 공학	▪ 기술 공학 ▪ 체제 공학	▪ 정보 기술 ▪ 의사소통 기술
기타	▪ 타 국가 문화 이해	▪ 근대 외국어		▪ 신체적 능력

자료: Werner(1995), p.38.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산업체는 ‘직업인으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소유자’(Generalist)와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 소유자’(Specialist)를 동시에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 23). 이 중에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전자로서 이 능력은 ‘직업기초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직업인이 기초적·공통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능력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명(究明)하고 고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에게 이 능력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여 오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의 구성 요소를 연구한 Werner(1995 : 38)의 연구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7>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고
전체	182 5.2	2,229 64.0	1,059 30.4	13 0.4	3,483 100.0	$\chi^2=0.914$, $p=0.822$
전문대학	27 4.9	346 62.7	177 32.1	2 0.4	552 100.0	
4년제 대학	155 5.3	1,883 64.2	882 30.1	11 0.4	2,931 100.0	

주: 상단은 응답자 수, 하단은 %.
자료: 채창균·육준필(2006), 55쪽.

이러한 서구의 노력에 비해 한국에서도 2000년도 즈음부터 이에 관한 연구(정철영 외, 1998 ; 박동열 외, 2006 ; 김성호, 2007 ; 박영민, 2007 ; 임언 외, 2008)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채창균·옥준필(2006 : 55)의 연구 결과(〈표 4-17〉 참조)에 따르면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에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기초능력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주는 요소는 의사소통 기술, 기획 및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정보활용 기술과 공학활용 기술은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리적용 기술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능력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부 차원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개발하여 직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교과 등을 통해 비교적 운영이 용이한 편이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전의 기초수학능력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의 확대에 대한 교수 집단의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 확대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

는 일반인들에게 SC(Sector Council)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영국의 사례를 원용한 결과이다.

그간에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서 산업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조직은 운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서는 정책 및 제도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산학협력 활동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기관인 직업교육기관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는 산업계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04년도에 「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을 신설하여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은 ①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②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③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 39조에서는 ① 해당 업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②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③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⑤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발전법」의 내용은 [부록-7] 참조).

이에 따라 2008년 9월 현재 총 13개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09년 9월에 6개의 단체(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의료산업재단, 한국 RIFD·USN협회)를 추가로 인가하고 총 19개 기관에 매년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09. 9. 14).

<표 4-18>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현황

연번	협의체명	사업주단체명	선정시기
1	디스플레이산업협의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05. 9월
2	반도체산업협의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3	섬유산업협의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4	자동차산업협의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5	조선산업협의체	한국조선공업협회	"
6	철강산업협의체	한국철강협회	"
7	기계산업협의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8	전자산업협의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9	전자상거래산업협의체	한국전자거래협회	"
10	이러닝산업협의체	한국이러닝산업협회	'08. 9월
11	전기공사산업협의체	한국전기공사협회	"
12	정보통신산업협의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13	물류산업협의체	한국물류협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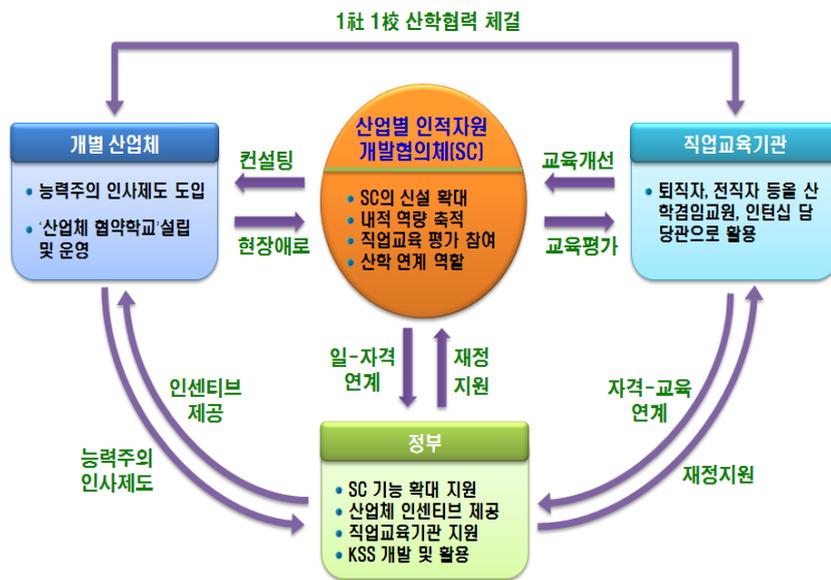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9). 내부 자료.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첫째, 산업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산업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확립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급자(정부·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셋째,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산학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역사적으로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이들 단체에게 이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같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는 2009년 3월 20일에 제6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의제1호 안건으로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에서 직업교육 훈련에서의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 Sector Council) 지원 확대 방안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그림 4-2]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자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3. 20), 17쪽.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적극 지원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단체들의 현행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일이 요청된다. 그간 이들 단체들의 문제점은 최영섭 외(2007 : 49-109)의 연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간 이들 단체는 전담직원 부족, 직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 확보 미흡, 정부의 장기적 적극적 재정 지원 미

흡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 문제 이외에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2009)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 내의 업무전담 조직 미설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차별화 미흡, 경영진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산업발전법」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사업전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의 부처 및 전담기관 간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부가 2009년 9월 15일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 2009-215호 : [부록-8] 참조)하면서 법령 제14조에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산업부문별 직업훈련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격기준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향후 관련 정책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매개체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업 활동을 포함하여 협의체 종사자의 규모 확대와 전문역량 강화, 각급 학교별 인력수급 분석, 일반대학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평가, 각급 학교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결과의 ‘환류’(Feedback),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관련 사업 추진, 각급 학교와의 산·관·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뿐 아니라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고, 학교↔노동시장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기존의 산학협력체제를 적극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 산학협력체제 활성화는 오랜 기간 동안 강조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박종무 외, 2000 : 141-150 ; 김환식·나승일, 2001 : 65-92 ; 박준경 외, 2001 : 23-27, 194-202 ; 손병호·이기중, 2005 : 8-42)를 중심으로 살펴본 산학협력 참여 주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체의 경우, ① 산학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 ② 학계에 대한 불신, ③ 산학협력담당 전문요원의 부족, ④ 교육기관을 위한 자사 인적자원 파견 및 협력활동 참여에 대한 협력 부족, ⑤ 기업 혁신을 위한 대학과의 혁신 추구 역량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기관의 경우에는 ① 교육과정의 산업체 요구 부응 미흡, ② 현장실습의 형식적 운영, ③ 조직과 전담 인력의 부족, ④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부족(전문대학의 경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경우에는 ① 정부주도적 정책 및 사업 운영, ②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 부족, ③ 예산 지원 부족, ④ 기술개발 중심의 편향적인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의 운영, ⑤ 유사 정책 및 사업 간의 통합적 조정 능력 부재, ⑥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의 평가제도 부재, ⑦ 전국 단위의 정보유통체제의 확립 부재, ⑧ 지역기반의 산학협력 체제 지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산학협력체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여 왔다. 이상의 문제점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혁신 방향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학협력의 개념 재정립과 이에 따른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산학협력은 정부, 학자, 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한편 법령에서도 유사 용어의 개념을 달리 정의

함으로써 혼동을 주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①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②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③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편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

산학협력 개념의 다양한 접근은 획일성을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참여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혼동을 유발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통일된 산학협력의 개념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함께 각 학교급에 따른 강조점을 설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산학협력에 관한 혁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은 ‘산업계, 정부, 교육기관, 연구소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① 산학협력교육, ②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③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④ 정보의 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접근은 기존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통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급 학교에 따른 산학협력의 강조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학협력의 개념 재정립에 따른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일반대학은 물론 직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활동을 종합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과 전문계 고교 대상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는 각급 학교

에서의 산학협력 운영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학협력 활동의 운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나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종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19> 산학협력 지원 사항과 관련 법령의 관계

구분	산학협력 촉진 및 체계 구축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계획수립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시설·장비 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공동연구 개발 및 사업운영	DB구축 및 공개	학교 내 창업 (학교기업 포함)	전담 조직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제12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35조 제39조 제40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22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9조	제37조		제36조	제14조 제25조 제38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제7-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3조	제1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5조 제11조	제4조	제6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7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제3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1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4 제20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4	제18조의 3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		제4-5조	제8조		제8조 제1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7조		

지금까지 논의한 산학협력 개념의 재정립과 이에 따른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 정립과 함께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은 이전에 언급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간의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통해 발견된다. 즉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법률 중에서 어떤 법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에서와 같이 산학협력 관련 사항은 각 부처 소관의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고, 일부 법령 간에는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상호 위계적인 관계가 부족하며,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일관된 법적 체계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법령마다 산학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천 명하는 ‘산학협력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종합적인 정비 과정에서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문계 고교에 관한 특성을 차별화하여 반영한 법령 조문을 추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혁신

산학협력 혁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은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일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직업교육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

점을 유발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9년 3월에 교육부령으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다(관련 내용은 [부록-9] 참조). 이 규칙은 일정기간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기존 법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실습 기간을 최소화하고(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최저 32시간), 학칙에 따라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조치는 그간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의 입장이 후퇴하였음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조치 때문에 당해 학교는 법적 의무감의 완화로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현장지향성이 부족한 직업교육의 현실에서 볼 때는 그나마 현장지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약화로 인해 직업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실습 추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그간에는 전문계 고교생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의 인권침해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청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6: 1-5)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5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마련 중(2006년 5월 17일에 최종안 발표)이었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의 현장실습업체 선정 기준(법 제8조)에 따라 이 방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습 여건이 확실하게 갖추어진 기업'은

실제로 찾기가 어렵다. 둘째, 동법의 제20조에 따라 전문계 고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절한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셋째, 이 방안에서 제안한 체험학습을 당해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기간만 단축된 현장실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 내용을 위반한 산업체에 대한 사후 조치 방안이 불분명하여 실습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이 단체는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보완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계 고교의 현장실습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체의 주장은 기존에 지적되어 온 전문계 고교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재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지적은 비단 전문계 고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전문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직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제도를 혁신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이전에 언급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강화(현장실습 산업체 지원, 산업체의 협조체제 구축 등), 교과부 관장의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개정, 학생의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동부 관장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부록-9] 참조) 개정,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이 특히 어려운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실습소를 산업체 현장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는 전문계고 학생 첨단기술교육, 전문계고 교사 직무연수, 일반

계고 및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 일반계고 및 중학교 교사 직무연수, 지역주민 및 산업체 종사자 대상 기술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공동실습소는 다양한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을 ① 전문계 고교생의 준(準)산업체 현장실습 교육과정 제공, ② 지역주민 및 산업체 종사자 대상 취업준비 교육과정 제공, ③ 일반계 고교 및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과정 제공으로 그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능을 통해 공동실습소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제공의 경우에는 시설과 기자재를 거의 산업체 현장에 준할 정도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므로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산업체로부터의 관련 시설 및 기자재 기증과 지원예산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되,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실험·실습비 등의 지원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이동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동향 분석에서 살펴본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산업체의 맞춤형 교육 적극 참여와 운영

그간에 산업계는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 공급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간헐적인 산업계 유입 인력에 대한 불만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매스컴에 발표하는 정도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공급을 강조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산업계는 계속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원하는 인력은 산업체가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는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현황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현재 32개의 일반대학, 2개의 산업대학, 14개의 전문대학에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한편 산업체가 직접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에 관한 법령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55조에 따른 기술대학(법인과 학교 운영)으로 1988년도에 대한항공의 정석대학(학사, 전문학사 과정 동시 운영)이 개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법인 없이 학교만 운영)으로 1989년도에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학사과정 운영)와 삼성중공업의 삼성중공업 공과대학(학사과정 운영)이 개교하였고, 2009년도에는 화진화장품의 단하대학(학사과정 운영)이 인가만 받은 상황에 있다(정태화, 2008b: 3-4).

이 같은 산업계의 직·간접적인 인력양성제도 참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입장에서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제도 운영이 가능한 동시에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학교법인 설립 등의 법령에 따른 규제 없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재직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에 전문가로 다시

일하는(Work→Study→Work)' 계속 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통한 '노동시장 ↔교육 간의 연계체제'(School↔Work Transition)를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교육기관의 한계점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이 제도를 통해 교육 받은 근로자는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이 제도는 향후 직업교육의 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재직근로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국가 및 산업체의 학습비용지원, 산업체의 학습시간 제공, 직업교육기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및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계 고교도 제도 운영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그 예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09년 3월 10일에 제안한 산업체협약 고등학교 안(산업체 및 산업체 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립 전문계 고교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특약학과 운영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바.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습득한 직업능력개발의 결과나 학생 및 성인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획득한 직업능력개발의 결과는 고용주에게 일관된 정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각자의 교육 목표나 목표 달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획득한 직업능력개발의 결과는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간에 정부의 노력으로 자격의 취득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자격과 학력 간의 호환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이전에 언급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격과 직업교육과정의 통일된 기준은 통용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표준직무기준’(NSS : National Skill Standard)의 개발·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정부의 지원 하에 산업계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직업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산업계의 업종별로 직무수행의 수준(5~7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틀(Framework)이다. 이들 국가가 이 체제의 개발·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목표, 직업훈련 기준, 그리고 자격검정기준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결과의 통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준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에 입직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신호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동시에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줌으로써 고용주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KSS(Korean Skill Standard)를 개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통용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그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혁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산업계 관계자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면서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1960~1980년에 이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직업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는 이 과정에서의 직업교육제도의 우수함을 세계 개발도상 국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직업교육을 참고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가로서 국가경제 규모가 2008년도에 15위(<http://news.jknews.co.kr/today/news/20090706/2966627.htm>)인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구촌 국제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지원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7년 9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설립하고, 1991년 4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하였다.

또한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인 국제화·세계화 추세 속에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이 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동이 직업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향후 직업교육 혁신정책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해외유학생 문제,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사

업의 문제,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윤여송 외(2006: 119-16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해외유학생 문제는 일부대학 중심의 비현실적 비용 제공을 통한 유학생 확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취약의 문제, 취업·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의 문제, 유학생 국가의 편중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간 과도한 경쟁으로 유학생 사업의 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재정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은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대학의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는 2009년 6월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50% 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증(VISA)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 및 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를 위반한 17개 대학에 대해선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것을 밝혔다. 이어서 1단계 제재 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오는 2010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하고,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http://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95>).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09. 4. 29)는 해외인턴 파견 시 무비자로 출국하여 조기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 발생의 문제와 현지에서 인턴의 업무수행 및 생활점검이 부실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사업의 취지인 해외 취업의 실적이 저조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최영렬(2007: 65)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분야별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대외원조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EDCF 및 KOICA 사업에서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등에 대한 사업발굴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방식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프로젝트 지원은 그 효과가 단편적이고 단기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와 함께 유학생 확보, 연수생 확보,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국가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용부담 주체 중 우리나라 정부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제기구자금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외원조 지원기관들과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음식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전문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로 취업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로 부상하고 있는 에드워드 권(두바이 7성급 호텔 주방장 역임)이 전문대학 졸업자라는 점은 전문대학이 정부의 한국음식 세계화 전략 추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직업교육 혁신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계고 출신의 신규인력 공급은 2008~

2016년 기간 동안 총 334.8천 명이 배출될 예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신규인력 수요 총 158.4천 명에 비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2007~2017년 전망기간 중에 연평균 41.4천 명이 초과공급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통계청(2009. 3. 30)의 학령인구변화 전망 결과(2007~2050)도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은 ①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 ② 직업교육기관 교육의 질 제고, ③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제고, ④ 부실 직업교육기관의 퇴출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구자균 외, 1998 ; 장세진, 2002)에서의 정의를 참조하면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가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내부적 구조조정과 외부적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내부적 구조조정'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당해 직업교육기관이 내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특성화와 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외부적 구조조정'은 '내부적 구조조정'에 의한 자구노력이 실패하는 경우에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 및 인수·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적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혁신정책에 관한 논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외부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외부적 구조혁신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① 직업교육기관 간의 학과 교환, ②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③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기관 선정, ④ 학교 폐지 등의 관점에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직업교육기관 간의 계열 및 학과 교환

이 방안은 그간에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권장한 방안이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방안이다. 주요 원인은 협약 당해 대학 관계자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 당해 교수의 신분 보장의 불확실함, 대학 간 윈윈(Win-Win) 전략의 부재, 재학생 처리의 문제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기관이 지역 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계열 및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동시에 반대의 상황에 있는 계열 및 학과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기존의 난점을 해결하여 당해 직업교육기관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당해 직업교육기관의 재정적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직업교육기관 간의 계열 및 학과 교환으로 인해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타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원의 감소는 당해 기관의 재정 부족을 수반하고, 이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를 유발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확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방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협력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

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협력체제 내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활동은 ① 공동의 충원 시행 등을 통한 학생모집(해외 유학생 포함), ②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서관, 진로상담서비스 등)의 공동 운영, ③ 원격교육체제나 가상교육매체 또는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④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훈련이나 교원 간 공동연구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기관 간의 계열 및 학과 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방안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 선정

퇴출 대상의 직업교육기관을 고려함에 있어서 단순히 입학생 충원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지나치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수도권 직업교육기관은 인구동태학적 현상에 따라 입학생을 충원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당해 기관의 경쟁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도구에는 학생중심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의 자구적 노력, 기관장의 리더십,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사립 직업교육기관 폐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당해 사립 직업교육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폐교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령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수요 감소, 학생 수 격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교육기관의 구조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이 부실한 직업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위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 또한 합병·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 직업교육기관의 폐지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사립대학 폐지 근거 마련 및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② 한계 사립대학의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③ 교직원 처리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④ 한계 사립대학법인의 지정기준 마련과 한계 사립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기관의 구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해당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자문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직업교육기관 경영진단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각 직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위원회는 사회변화에 맞춰 학부나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의 성공 사례를 알려 주고, 학과 개편이나 통·폐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협의회에 위임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논의한 직업교육 혁신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 및 관리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 방향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정부가 바뀔에 따라 타 정부와의 차별화를 피하기 위하여 기본 틀을 바꾸거나 해당 정책의 성과를 해당 정부 내에 단기적으로 가시화시키려는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주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직업교육 혁신 정책에 관한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역사적 교훈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 정책만으로는 직업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문제 이외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임금 구조 문제, 근로 여건 문제, 근로자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그 혁신대책도 사회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이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범부처적 접근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는 부처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업교육 정책 총괄 및 직업교육기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노동부는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및 감독, 근로감독, 산재보험 지원, 고용보험 지원(졸업생의 향상교육훈련 지원 포함)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은 산업체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및 인사관리 정책 유도과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역교육청은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 추천채용제도 확대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직업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제도와 우리나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한국음식 세계화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조리 관련 학과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산업과 연관을 맺는 직업교육기관 관련 학과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전문계 고교육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다양한 중앙부처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부 외에 특별법에 따라 타 부처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은 <표 4-20>과 같다.

<표 4-20>에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을 교과부 이외의 중앙정부 부처가 설립·운영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의 소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당해 대학은 백화점식의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소규모 특성화 된 대학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립된 후에는 지역의 지방자치기관 및 지역 교육청과의 정책 협력체제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0> 교과부 외 특별법에 따른 타 부처의 설립·운영 고등교육기관 현황

학교명	유형	학교급별	소관부처	설치근거
한국종합예술학교	개별설치령국립	각종 (대학)	문화관광부 (설립, 운영위탁)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	개별설치령국립	각종 (대학)	문화재청 (설립, 운영위탁)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한국농업대학	개별설치령국립학교	각종 (전문)	농촌진흥청 (설립, 운영위탁)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경찰대학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대학교	경찰청	경찰대학 설치법
육해공군사관학교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대학교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제3사관학교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전문대학	육군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국방대학교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대학원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가정보대학원	특별법 국립교육기관	대학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한국임업전문학교	개별설치령 국립	-	산림청 (설립, 운영위탁)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개별설치령 국립	-	해양수산부 (설립, 운영위탁)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한국폴리텍 I 대학 - 서울강서캠퍼스 - 성남캠퍼스 한국폴리텍 II 대학 - 남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 III 대학 - 강릉캠퍼스 한국폴리텍 IV 대학 - 아산캠퍼스 - 제천캠퍼스 - 청주캠퍼스 - 홍성캠퍼스 한국폴리텍 V 대학 - 고창캠퍼스 - 김제캠퍼스 - 목포캠퍼스 -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 VI 대학 - 구미캠퍼스 한국폴리텍 VII 대학 - 거창캠퍼스 - 부산캠퍼스 - 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능대학	기능대학 (전문대 2년 과정)	노동부	기능대학법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09)를 연구진이 재구성.

셋째, 국가차원의 능력인정 체제를 구축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 및 승진과 사회적 인정 및 가치부여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전문계 고교는 인문계 고교에 비해, 그리고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2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들 기관에 입학하는 일을 자랑스러운 산업역군으로서의 길이 아닌 실패의 인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들 기관을 졸업한 근로자는 직업능력이나 직업자격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세계 최고의 학력중시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미래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임금 격차, 승진상의 불리함,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고학력·학벌사회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자격제도를 활성화시켜 많은 국민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자격 취득에 대해 학력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능력인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형성과정에 직업교육 현장의 담당 및 관련자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선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직업교육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담당 중앙부처에서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학교에 일방적으로 '탑다운 방식'(Top Down Approach)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의 진단 및 이를 해결하기 정책 방안의 마련에 일선 교원들과 산업체 인사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직업교육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 직업교육 담당자들과 산업체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선 교직원들과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시키며, 정책 담당자와 직업교육 담당 및 관련자와는 물론 그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 직업교육 현장의 담당 및 관련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 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은 수립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해당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가를 관찰·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은 향후에 정책 수립에 가장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에 직업교육 관련 학회, 연구소, 대학기관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시키고 관련 자료를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교육 혁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관에 자율성을 과감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체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담당 교원의 양성과 임용, 지원금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되, 학교 단위의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과감히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통하여 직업교육기관의 다양성, 창의성,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직업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혁신정책을 적극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정부는 특수한 목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 현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사업을 포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한 예로 정부가 2008년도에 중단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대체되자, 후자의 사업에 참여한 60개 대학 중에서 전자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26개교, 그리고 특성화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대학은 34개교에 이르고 있다(정태화 외, 2009b). 따라서 현행의 성과

포뮬러(Formula)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특성화, 직업교육의 현실 문제 해결, 직업교육기관의 미래지향적 기능 수행 등을 직업교육 혁신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가칭' 직업교육 혁신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직업교육 혁신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정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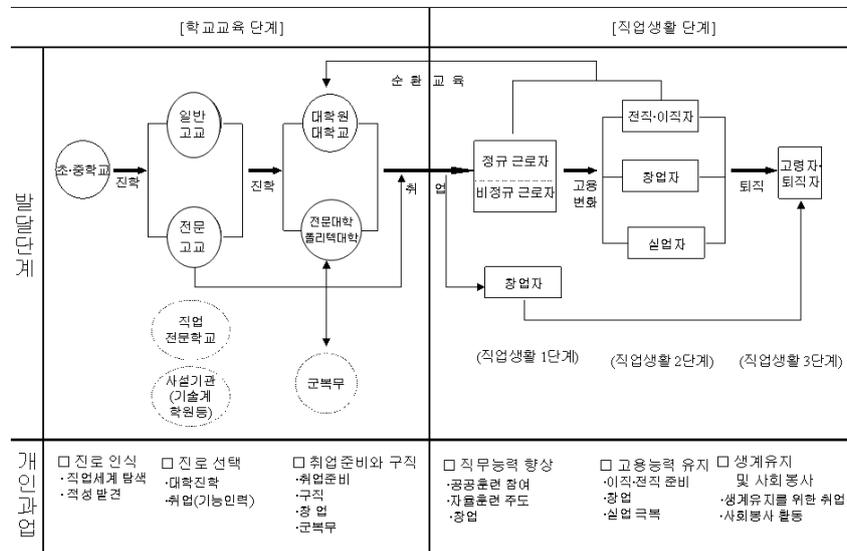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추진한 하위 연구 주제별 연구 결과와 이에 따라 제4장에서 논의한 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에 기초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혁신 실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1.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직업교육훈련’ 개념을 ‘평생직업능력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교육’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 단계에서 평생에 걸쳐 국민이 ‘취업능력’을 유지 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2. 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교과부의 직업교육 관련 법령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학교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위의 개념 재정립 후에 정부는 가칭 '직업교육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이 대책에서는 다음의 그림에 따라 국민의 생애 경력발달 단계에서 각 집단의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하위 정책을 포함시킨다.

[그림 5-1] 생애 경력발달 단계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교육 지원 정책 접근도



제2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1. 학제 개편

가. 학제 개편 시에 다음의 경로를 구별하도록 한다.

- ① 일반교육 경로(고급 기술자 양성, 학자 양성) : 일반계 고교 → 일반 대학 → 대학원
- ② 직업교육 경로(중견기술인 양성, 재직근로자 계속교육<대학원 과정>) : 전문계 고교 → 전문대학(1-4년제) → 산업대학(대학원 과정)

나. 고등교육 체제 개편 시에 다음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한 후 수업연한을 1~4년으로 자율화 하는 방안
- ②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고등교육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방안 추진 시에는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단과 대학(University College)'의 모델 참조)
- ③ 현행 체제 유지 시에는 고등교육법 개편을 통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철저한 차별화 방안

다. 전문계 고교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 ① 전문계 고교의 수학 연한을 2년으로 단축시켜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매력도를 높이되, 취업 후 전문대

학 및 산업대학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전문계 고교 2.5년 과정과 전문대학 1.5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한 학교 내에서 전문계 고교 졸업장과 전문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명칭은 '취업사관학교' 등의 대안을 검토)의 신설을 추진한다.

2. 전문계 포함 고교 유형 정리와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가.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전문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을 최대한 단순화시킨다.

나. 전문계 고교의 계열을 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재편한다.

3.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가.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 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기능인력 전반의 양성 및 활용 관련 다양화·다변화 정책을 통해 전문계 고교의 인력 공급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일정량의 기능인력 공급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 단기적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활용인력의 다양화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사회 내의 유휴 인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양성기관의 다원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연수원, 컨소시엄 형식의 중소기업 훈련단체, 직업 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을 통해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②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에 따라 전문계 고교가 다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주민 대상의 직업교육(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포함)
 -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의 주부 대상 직업교육과 언어·문화적응 교육
 - 다문화 가정의 주부 중 외국어 능력 소유자를 당해 전문계 고교 재학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에서 활용
 - 탈북가족 대상의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나.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 ① 평생학습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시켜 주는 평생직업능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개정(안)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47조).	전문대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을 전수하고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여 국민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47조).

- ②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 고졸입학생을 위한 실무중심 직업교육, ㉡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지도, ㉣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직업교육으로 설정한다.
- ③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학과 신

설·폐지·조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전문대학에 적합한 전공학과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 조정한다. 전문대학에 적합한 실무중심교육의 전공일 경우, 일반 대학에서의 설치·운영을 제한한다.
- 전문대학 간 전공학과의 중복 운영에 따른 소모적 경쟁을 막기 위하여 인근 지역 내 전문대학 간 전공학과의 중복 개설을 제한한다.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개설·운영에 따른 심의 평가 및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나간다.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1. 학교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가.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계속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수학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①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이외에 수준별 수업 실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②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교육과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칭 ‘연차별 전문대학 입학생 기초수학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재학생은 물론 전문계 고교생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수학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 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한 기초수학능력 관련 교과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나. 전문계 고교생에게 적합한 대학 진학 경로를 지원한다.

- ① 전문계 고교 졸업 후 현장에서 3~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학비를 보조해 주어 전문계 고교→산업체 근로와 현장경험 습득→대학교육→현장으로의 복귀로 이루어지는 '순환교육 제도'(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위의 정책 추진 시에는 근로자의 학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교과부의 일반회계를 통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다. 직업교육기관의 교원 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 ① 직업교육기관 학교급별 가칭 '교원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 ② 전문계 고교의 전문교과 담당 양성기관에서의 교사 양성과정을 혁신한다.
 -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한다.
 - 정부는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현장실습을 소홀히 하는 기관에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③ 전문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 당해 대학을 중심으로 3~6개월간의 학생 수업지도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는 혁신적 방안을 검토한다.
 - 위의 방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인근의 일반대학의 교육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교과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④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같은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기관 교직원의 현직연수를 적극 강화한다.
- ⑤ 직업교육기관 교원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라. 교육과정 중심의 연계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① 수직적 연계차원에서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 정책을 강화한다.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집단 간에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선행 작업이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전문대학 교수와 전문계 고교 교사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활동을 강화시킨다.
 - 전문대학이 이 사업을 안정적 입학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취업약정제에 따라 전문계 고교생이 전문대학 진학 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개별 산업체가 아닌 산업별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 ② 수평적 연계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과 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는 다음과 같

은 정책을 추진한다.

- 다양한 연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시켜 준다. 이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에 따라 연계과정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학점(전문계 고교는 수업시수)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 기관 간에 교수(사)의 교류활동을 촉진시켜 준다.
- 실험·실습 관련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준다.
- 정부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 수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연계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 정부는 이상의 대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소요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마.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추천채용제도를 확대한다.

- ①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타 교육청에서도 추진하도록 한다.
- ②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기능인재(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추천채용제가 확대되도록 한다.

바.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①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 ②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과제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 창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창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 학생의 전공과 창업과정 연계 방안
- 창업 실패에 따르는 재정 부담 해소
- 프로그램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가.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① 직업기초능력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기획 및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②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교과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 ③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교수의 학생지도, 산학협력활동 등을 수업시수로 대체하는 법령 제정 등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를 확대하도록 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한다.

- ① 다음의 관점에서 이 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산업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산업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 공급자(정부·교육훈련기관)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산학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역사적으로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이들 단체의 기능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 ② 기존에 이 협의회가 갖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기관 내부적 문제: 전담직원 부족, 직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 확보 미흡, 정부의 장기적 적극적 재정 지원 미흡, 기관 내의 업무전담 조직 미설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차별화 미흡, 경영진의 인식 부족
 - 정부 차원의 전담 부처 및 기관 역할 불분명 : 「산업발전법」은 지식경제부가 관장, 노동부는 사업전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
- ③ 이 협의체가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업 활동 이외에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각급 학교별 인력수급 분석
 - 일반대학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평가
 - 각급 학교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결과의 '환류' (Feedback),
 -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관련 사업 추진
 - 각급 학교와의 산·관·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다.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 ① 기존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산학협력’은 ‘산업계, 정부, 교육기관, 연구소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 산학협력교육, ㉡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 정보의 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에 반영한다.
- ② 각급 학교에 따른 산학협력의 강조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학협력의 개념 재정립에 따른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를 <표 5-1>과 같이 정립한다.

<표 5-1>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안)

산학협력 영역 (대분류)	산학협력 영역 (소분류)	주요 내용
산학협력교육	위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의 학교 위탁교육: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향상훈련과정(비학위 과정), 단기 연수, 자격 취득과정 ○ 학교의 산업체 직원교육: 산업체 연수원, 기술대학(고등교육법) 및 사내대학(평생교육법)에서의 위탁 강의 ○ 정부지원 위탁교육: 장단기 연수과정, 각종 향상훈련과정
	현장실습 및 인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 실습 ○ 전공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현장실습 ○ 인턴제도 과정
	주문식 교육(특약학과, 협약학과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의 주문에 따라 운영되는 재학생, 미취업 성인, 재직근로자 대상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훈련과정, 전직자 훈련과정, 창업교육

<표 계속>

산학협력 영역 (대분류)	산학협력 영역 (소분류)	주요 내용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공동 연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와의 공동기술 개발 ○ 공동기술 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 ○ 산업체의 애로 기술 지원
	공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전문가를 전담요원으로 초빙 - 산업체 전문가의 기술 지원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 파크(techno park)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regional renovation cluste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산업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체 구성 - 신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인적자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인사의 학교 운영 참여 ○ 산업체 현장 전문가를 정규 교원, 시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원, 현장실습지도교사 등 학교 교원으로 초빙 ○ 학교 교원을 산업체 연수, 기업 진단 및 경영자문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로 초빙
	물적자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는 학교에 최신 실습 기자재 제공 ○ 학교는 산업체 직원에게 최신 시설·설비에 대한 실습 및 교육 기회 제공
정보의 교류	산업체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변화 정보 ○ 노동시장 변화 정보 ○ 고용 정보 등
	학교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보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 학생 개인의 능력개발 결과 정보 등

- ③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간의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과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법령과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산학협력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한다.

라.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혁신한다.

- ① 정부의 정책은 다음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둔다.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강화(현장실습 산업체 지원, 산업체의 협조체제 구축 등)
 - 교과부 관장의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개정
 - 학생의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노동부 관장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 개정
 -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②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이 특히 어려운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실습소를 산업체 현장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동실습소의 기능을 ① 전문계 고교생의 준(準)산업체 현장실습 교육과정 제공, ② 지역주민 및 산업체 종사자 대상 취업준비 교육과정 제공, ③ 일반계 고교 및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과정 제공으로 재정비한다.
 - 새로운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는 일차적으로는 산업체로부터의 기증 받고,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실험·실습비 등의 지원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역의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이동 수단을 강구한다. 이 경우에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의 사례를 참조한다.

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체의 맞춤형 교육제도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① 다음의 관점에서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제도 운영이 가능한 동시에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 학교법인 설립 등의 법령에 따른 규제 없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재직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에 전문가로 다시 일하는(Work→Study→Work)’ 계속 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통한 ‘노동시장↔교육 간의 연계체제’(School↔Work Transition)를 강화할 수 있다.
- 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교육기관의 한계점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강구한다.

- 성인학습자를 위한 국가 및 산업체의 학습비용지원
- 산업체의 학습시간 제공
- 직업교육기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및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 전문계 고교도 제도 운영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 : 국가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09년 3월 10일에 제안한 산업체협약 고등학교 안(산업체 및 산업체 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립

전문계 고교 운영)

-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특약학과 운영

바. 자격제도와 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① 현재 운영 중인 KSS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켜 다음 단계에 따른 KSS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 1단계 : 『산업발전법』에 따라 선정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협의체는 'KSS 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근로자, 경영주, 인사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사(수)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이 조직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2단계 : 산업구조, 기술구조, 취업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해 직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한다.
- 3단계 : 직종별·직업군별로 직무요소를 추출하도록 한다.
- 4단계 : 정부는 그 결과를 '국가표준직무기준'으로 공포하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자격제도의 검정기준, 사내훈련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도한다.

② KSS 체제를 통해 다음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사회 내에서 일관되고 상호 연계된 틀에 따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자격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자격제도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 산업계의 관계자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정부는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재정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중·장기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KSS 체제를 우리나라와 타 국가 간 인력이동 시 이동대상 인력에 대한 상호 인정의 기본 틀로 준비하도록 한다.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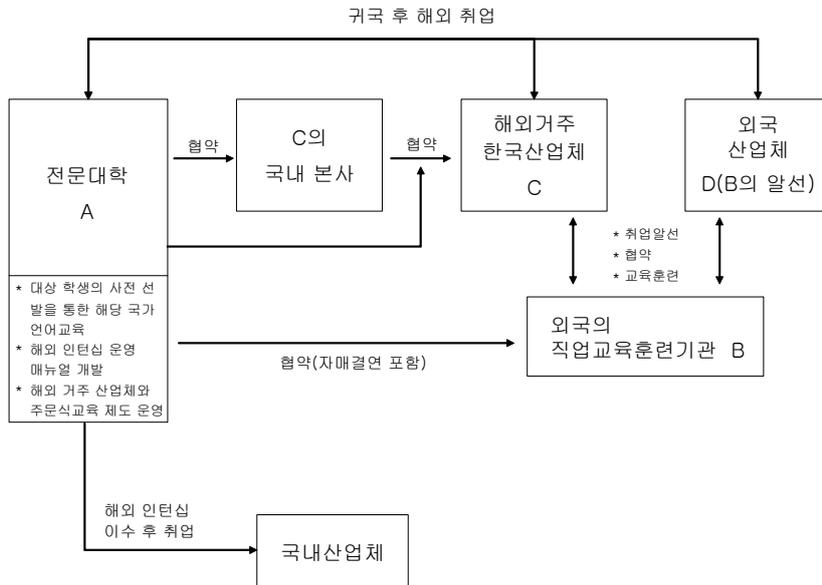
가.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부족한 학생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국가의 다원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 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 환경 개선
-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침
- ③ 유학생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지도·관리 방안

다. 해외인턴십사업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해외 취업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그림 5-2] 전문대학의 해외 인턴십 제도 운영 모형(안)



라. 전문대학이 다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 해외소재 한국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주문식 방식에 따라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 ② 해외소재 한국기업에서 필요한 해당국가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 ③ ODA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발굴과 이들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과 외국어 교육
- ④ World Bank, ADB, IBRD 등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사업
- ⑤ 2008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음식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전문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마. 타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확대에 따른 국가 간 인력이동에 대비하여 국가 간에 통용시킬 수 있는 국제직업자격을 개발한다.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가.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의 개념과 정책 목적을 설정한다.

- ①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의 개념은 '직업교육기관이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가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내부적 구조조정과 외부적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 ②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목적은 ㉠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 ㉡ 직업교육기관 교육의 질 제고, ㉢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제고, ㉣ 부실 직업교육기관의 퇴출 등으로 설정한다.
- ③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추진 시에는 학교 수 및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학과로의 재편도 적극 추진한다.

나.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정책에서는 다음 사안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 ① 직업교육기관 간의 학과 교환 지원
 - 당해 직업교육기관의 재정적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

- 계열 및 학과 교환으로 인해 과원 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들에
 계 타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
 -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②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지원
- 공동의 충원 시행 등을 통한 학생모집(해외 유학생 포함)
 -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서관, 진로상담서비스
 등)의 공동 운영
 - 원격교육체제나 가상교육매체 또는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훈련이나 교원 간 공동연구
- ③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과 적용. 평가도구에는 다음 내용 포함
- 학생중심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교원의 자구적 노력
 - 기관장의 리더십
 - 지역주민의 의견
- ④ 사립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폐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 시
 포함 내용
- 사립대학 폐지 근거 마련 및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의 재산처분 허가에 관한 사항
 - 교직원 처리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한계 사립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사항
- ⑤ 사립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폐지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발족
 과 운영
- 정부가 '직업교육기관 경영진단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각 직

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자문 제공

- 이 위원회는 사회변화에 맞춰 학부나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의 성공 사례를 알려 주고, 학과 개편이나 통·폐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
-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협의회에 위임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관리

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나.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만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그 혁신대책도 사회정책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범부처적 접근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 : 직업교육 정책 총괄 및 직업교육기관 재정지원
- ② 노동부 :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현장실습 지원 및 감독, 근로감독, 산재보험 지원, 고용보험 지원(졸업생의 향상교육훈련 지원 포함)
- ③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 산업체의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및 인사관리 정책 유도과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 ④ 국방부 :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원, 군 특성화 고교 사업 지원
- ⑤ 행정안전부와 지역교육청 :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

추천채용제도 확대

- ⑥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 직업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제도와 우리나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정책 지원
- ⑦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음식 세계화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조리 관련 학과 지원
- ⑧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산업과 연관을 맺는 직업교육기관 관련 학과 지원
- ⑨ 중앙 정부 정책 수립 후 지역의 지방자치기관 및 지역 교육청과의 정책 협력체제 구축

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전문계 고교육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다양한 중앙부처가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당해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라. 국가차원의 능력인정 체제를 구축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 및 승진과 사회적 인정 및 가치부여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마. 정책의 형성과정에 직업교육 현장의 담당 및 관련자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체제를 구축한다.

바. 직업교육 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관리 틀을 구축한다.

<표 5-2>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

영역	성과평가 준거	성과평가 준거 내용
방향 및 목표	① 미래 지향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산업수요에 부합할 만큼 미래 지향적이었는가?
	② 실현 가능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였는가?
기반 체제	③ 다양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만큼 직업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는가?
	④ 특수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직업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시스템 및 기관의 특성화 및 특수화를 추구하였는가?
	⑤ 연계성 (수평/수직)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수직적 연계 강화와 산업체·학교·정부·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수평적 연계 강화를 추구하였는가?
운영 체제	⑥ 유연성/자율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수요자 요구에 즉시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유연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였는가?
	⑦ 현장 기반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산업현장에 밀착하여 학습-일 연계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현장 기반화를 추구하였는가?
행/재정적 지원	⑧ 지원 확보성	◦ 직업교육 혁신 정책은 일련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하였는가?

사. 직업교육 혁신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에 자율성을 과감히 부여한다.

아. 직업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혁신 정책을 적극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성과 포물러(Formula)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특성화, 직업교육의 현실문제 해결, 직업교육기관의 미래 지향적 기능 수행 등을 직업교육 혁신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가칭' 직업교육 혁신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SUMMARY

Vocational Education Reform 2020

Tae-Hwa Jung, Jong-Ho Jeon, Kwang-Pyo Hong
Kil-Soon Lee, Byung-Wook Lee

A. Purpose of Study

Korea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the outstanding development of the economy by meeting the needs of manpower from industries. However it does not now actively respond to the various needs from knowledge-based society, changing labor market,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adv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exploring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that the govern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need to follow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and needs from society.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be fulfilled in the year of 2020.

B. Methods and Procedure

This study adopts several research methods.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is carried ou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 series of conferences were held with government authorities, vocational educators, and authorities from industries with a view to developing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for the reform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Finally, a seminar was held to present the outcomes of this study and discuss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initiatives and tasks.

C. Major Finding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ajor problems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clude rigidity of the school system(single ladder system), students' preference to general education and to university entrance, low level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suppliers-driven education, insufficient quality of vocational educators, weak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industry, and insufficient supports of the government.

Secondly, changes of the society strongly suggest the reform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Due to the continuing decline in natural population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school-age population has also been experiencing a downward curve. This situation has been assum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rease in investments, the decline of diversified curriculum and facilities, lagging innovation in administration,

and the reduction-in-force of educators. Accordingly,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need to reduce the size of student admission quota. The change of national economy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implies that courses in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need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industries. The forecasting of manpower projections for the graduates of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implies that labor market will require highly-educated persons beyond high school. This result raise the need of reduction of the size of student enrollment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he ne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school years system(2~3 years) in vocational colleges.

Thirdly,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while pursuing the reform policies for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everal strategies including suggestions for future oriented visions and goals, sufficient review of feasibilities of policies, emphasis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linkages i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flexibility and autonomy of management authorities including schools and provincial boards of education, and suffici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his experience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systematic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of reform policies to gain more fruitful outcomes in the future.

D. Policy Recommendations

A set of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are suggested to cope with the needs of the reform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Firstly, the concept of vocational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to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needs to amend the article No. 2, which stipulate the defini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Law' to include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and to emphasize the linkage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econdly, vocational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he government's reformative initiatives needs to include reform of the whole school system, types of high schools including types of major track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redefinition of the identities of vocational college and vocational high school.

Thirdly, the government's reformative initiatives needs to be focused on the customers-oriented approaches.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needs to perform various policies to meet the needs not only from students but from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s and industries.

Fourthly, the globaliz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off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o help them recruit overseas students into Korea and send graduates to get jobs in foreign countries.

Fifthly, restructuring of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needs to be performed. The government needs to forecast the proper size of student enrollment according to the continuing decline in natural population and to the demands from the labor market. Following by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promulgate 'the Special Law for School Closing' to help those school facing serious difficulties close their school system.

〈부 록〉

- [부록-1] 1990년대 이후 추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
- [부록-2] 주요 국가의 학제
- [부록-3]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가 현황
- [부록-4] 한국의 고교 유형에 관한 법령 내용
- [부록-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대·소 계열별 학과 수 및 학교 수
현황
- [부록-6]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천채용 제도
확대 관련 법령 내용
- [부록-7]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법령 내용
- [부록-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부록-9]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법령 내용

[부록-1] 1990년대 이후 추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

1. 직업교육 관련 국가정책

이하의 내용은 정철영(2000. 5. 19).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 포럼』, pp.17-31. 자료와 정철영(2009. 8). “직업교육정책과 방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 자료』, pp.7-15.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한 내용임.

1)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방안(1996. 2)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개혁위원회(1996)는 5·31 교육개혁안의 연장선에서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영역에 걸쳐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 ①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 ②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 ③ 신대학의 도입
- ④ 전문 직업분야의 학위제도 도입
- ⑤ 평생직업교육 기반의 구축
- ⑥ 자격제도의 개편
- ⑦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

이들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방안	내용
①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계속교육기회의 부여/교육과정의 현장적응성 제고/우수한 교사 확보/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설비 현대화/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②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강화/특성화 전문대학의 설치/개방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전형방법 개선/전문대학과 개방대학 교원의 전문성 제고/기능대학의 역할 강화
③ 신대학의 도입	신대학의 설립·운영 지원/전문직업인력 양성 신대학원 대학 설립
④ 전문 직업분야의 학위제도 도입	전문석사 및 전문박사 제도 도입/다양한 전문대학원 확충/전문학위 소지자의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 신대학의 교원으로 활용
⑤ 평생직업교육 기반의 구축	생애에 걸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제공/여성의 직업교육 기회 지원/영세 중소기업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기회의 확대/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훈련원의 성인 직업교육 확충/병역기간을 통한 직업교육의 강화/문하생 제도를 통한 교육의 학력 인정/교육훈련 산업의 육성/직업능력인증제도의 도입/교육구좌제의 도입 검토
⑥ 자격제도의 개편	자격제도 운영의 민간참여 증대/국가기술허격 종별 및 단계의 단순화/직업교육과 자격과정의 연계 강화
⑦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국·공립 직업교육기관의 법인화 추진/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제도화/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직업능력개발원(가칭) 설립/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제 정비/직업교육 재원확충 및 금융, 세제지원/현장실습생과 현장연수 교원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2)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9. 3)

교육부(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가운데 다섯 번째 영역으로 제시한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이 직업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 ②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 ③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연성 제고
- ④ 생애에 걸친 직업 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체제 확립
- ⑤ 근로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 ⑥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 ⑦ 평생학습 정보 교류망 확립
- ⑧ 평생학습 지원 강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영역	내용
①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수립·추진/통합형 고교체제 도입 추진/특성화 고교 및 특별 교육과정 설치 확대/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산업체의 사내대학 양성화와 기술대학 설립 기준 완화/직업교육훈련산업의 육성
②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에위한촉진법」 제정/산업인력 양성체계의 종합화 및 조정력 강화/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기술 개발 능력 제고/고교 및 대학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전·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 교원 활용 지원

영역	내용
③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연성 제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및 다양화·특성화 유도/ 전문대학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실험·실습여건의 개선/ 전문대학의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 창출/ 산업대학 특성화 지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④ 생애에 걸친 직업 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진체제 확립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의 제공/ 종합적인 고용·학습 서비스 체제 구축/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실시/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의 활성화
⑤ 근로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성인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교육과정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장애아 등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21세기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 교육 활성화
⑥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평생교육법 제정/ 성인교육정책 개발 및 사회교육단체 지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중앙평생교육원 및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의 위상 재정립
⑦ 평생학습 정보 교류망 확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사정보은행제 운영/ 평생학습 정보 시스템 구축
⑧ 평생학습 지원 강화	방송통신대학 운영 활성화/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통신 학습자료 개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지원·육성/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문하생 학력인정제 도입/ 독학사제도 운영개선/ 교육구좌제 도입

3) 교육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1)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 ① 실업계 고교의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 ② 직업기초교육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제고하여 내실화·전문화
- ③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
- ④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표 3>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구분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고교의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 직업기초교육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제고하여 내실화·전문화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 •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분 야 별 대 책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조조정 : 학교수 조정 / 학급당 학급수 조정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② 운영체제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 소규모 특성화 고교 확대 / 실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 / 공고 「2·1 체제」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운영 /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과정 : 직업기초교육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적응력 제고 /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 ② 교원 : 복수/부전공 자격 연수 지원 /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제고 ③ 시설·설비 :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④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 지정 운영 /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 도입·운영 / 학교기업 제도 도입 검토
	행·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경진대회 개최 추진 ②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강화 : 취업 지원 체제 강화 /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 평생학습차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4) 교육부·노동부의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1999. 12)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은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육성하고, 사회 차원에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조성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는 비전하에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학습경로를 형성하며,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개 영역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 ②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 ③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 ④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⑤ 대상 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 ⑥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 ⑦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정책과제	내용
①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기초직업교육훈련 및 진로지도 강화/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②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③ 직업교육훈련의 현장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현

정책과제	내용
성 제고	장직무능력 제고/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④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직무능력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⑤ 대상 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여성 기술인력개발의 활성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보훈 대상자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⑥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⑦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국제협력의 활성화

5)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1. 11)

「실업교육 육성방안」은 ‘실업계고교 육성대책(2000.1)’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실고교원, 직업교육전문가,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실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중점추진 과제는 <표 5>와 같다.

- 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7차 실업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현행 대입제도를 개선하여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대학입학 문호를 확대
- ②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실고생 학비 지원 확대, 제7차 실업고 교교육과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투자를 확대하여 획기적인 실업교육 여건 조성
- ③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실고생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표 5>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교육 육성방안

하위 영역	세부 개혁 방안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문호 확대	①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실업고교생에게 정원의 입학 허용 ② 대학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검토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② 실업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③ 실업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체제 마련	① 산학협동 참여업체에 범정부적인 지원대책 마련 ② 실고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③ 현장적응력 높은 실고교원의 전문 직무능력 개발·활용

6)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혁신방안」 (2005.5)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5)을 발표하였으며 직업교육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고등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준비하도록 도와 줌
- ② 학생/산업체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
- ③ 모든 교원은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

분야별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대통령 자문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분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중등단계 직업교육 의 혁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각 정부부처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농어촌 실업고를 “지역종합문화센터”로 육성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실업고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 • 통합형고 제도의 본격 도입 • 일반 실업고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 • 실업고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및 희망하는 실업고의 자율학교 지정 • 학교 컨설팅 활성화 •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및 운영 지원 •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희망하는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 수요예측과 지역사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고 전환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각 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체험주간 운영 • 교원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진로지도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실업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고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업고 학생 사장되기 창업대회(Be the CEOs)
	각 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체험주간 운영 • 교원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다양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이수시기의 분산(1학년, 2학년, 3학년 등으로) • 청소년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센터 등과 협의 대상선정
	직능단체 등의 통한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단체 산하에 실업고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고용보험기금에서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우수 실업고 학생 해외 직업교육연수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대회입상자, 학업성취 우수학생 1~2개월 해외연수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지원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취업지원실의 설치, 실업고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기능 수행
학교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현장체험기회 제공, 산업체와 협력 강화 	

분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계속교육 활성화	직능인의 대학입학 문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입학 및 편입학 문호의 확대 • 실업고 졸업생에 대한 동일계 특별전형
	협약학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학과를 운영하는 실업고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로 지정 • 협약학과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추진
직업교육 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실업고 장학금 지급 단계적 확대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고 졸업 후 기술직/기능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도의 활용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고 특수학급 설치 확대로 장애 학생에게 통합된 환경에서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

자료: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7) 교육인적자원부의 희망실현 실업계고 육성전략 (2007, 2)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2007)은 실무를 겸비한 핵심기술 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전문계고 특성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2020년까지 산업 분야별로 500개의 전문계고를 특성화함으로써, 전문계고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고교 졸업생의 직업세계로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여, 능력과 실무를 겸비한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 ②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 ③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 ④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 ⑤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음.

<표 7> 희망을 실현하는 실업계고 육성 전략의 주요내용

추진과제	관련대책
정부부처/지자체/ 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요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가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 지원·육성에 참여 • 2007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 특성화고를 육성 • 2009년부터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고 100개교를 신규로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 전문계고 졸업생의 우선 취업기회 확대 • 조기입직자에 대한 전문대학 입학 문호 확대 • 전문계고 졸업자의 계속직업교육 완성과정으로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 수여) 도입 •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 일터학습 강화 • 직장에서 학위 취득하는 사내대학 활성화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산업체 현장적응연수 의무화 • 공동실습소의 교원직무연수 기능 강화 • 직업교육 혁신 연수를 통한 교원의 변화 촉진
직업교육과정 혁신및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고 교육과정 혁신 • 직업·진로교육 강화 •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전략에서 재구성.

8) 교육과학기술부의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2008)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2008년 2월 5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新발전체제 전략과 5대 국정지표를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로 분류·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5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와 관련된 것은 인재대국이며, 이는 3대 전략, 18개 국정과제(5개 핵심과제, 5개 중점과제, 8개 일반과제)로 분류·제시되어 있다.

이 중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은 5개 중점과제 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새 정부는 학교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고 보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도입 취지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창의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운영,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책무성을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묻는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설립,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여 해당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의 특성과 기회를 살리는 직업분야 마이스터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표 8〉 참조).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일찍부터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로(교육과학기술부, 2008),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체제로, 2011년까지 50개교의 마이스터고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졸업 후 우량기업 등 안정적인 취업과 중단 없는 경력개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진로시스템을 구축하며, 취업 시 ①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②4년제 대학진학 시에 준하는 기간 입대연기, ③관련분야 군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확립하려 하고 있으며, 군 복무 또는 취업 후에도 U-military, 사내대학·계약학과 등 일과 학위취득을 병행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자격증 취득, 해외진출 등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인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숙형 공립고 150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공립고교로서 지역 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 기숙사 설립·확충을 지원하고, 기타 도서실·어학실·다목적실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율형 사립고 100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이념이 뚜렷하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서 학교 교육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 건실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 운영 보장 교육감과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운영을 자율화 학교에서 다양한 선발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지필고사를 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후 검토하도록 함
마이스터고 50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 혹은 지자체 등이 학교 설립 절차에 따라 신설하거나 기존 특성화고 중 50개교를 인증을 거쳐 마이스터고로 전환 교육감과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운영을 자율화 하며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가 공모교장,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자격과 보수체계를 유연함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재구성

마이스터고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업적성중심 학생을 선발. 중학교 내신 외에도 소질과 적성검사, 자격증, 대회입상경력 등 학교별로 다양한 전형요소 활용하고, 학교장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도록 계획

- ② 산업계 맞춤형 학교운영. 이를 위해 산업체·직능단체 등의 위탁운영 또는 학교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을 추진함.
- ③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전면 자율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교과 교재(유인물, 전자파일 포함)는 상시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 ④ 교장은 교원자격 없는 현장 마이스터를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즉,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임용하고 책임경영을 보장하며, 기존 교원은 학교장의 인사(추천)권 보장, 역량제고 연수를 강화하며, 마이스터 교원은 5년 이상 현장 경력자 중 우수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⑤ 실습동·기숙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기능 숙련을 위한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기업·대학 등과 공동 활용, 연계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에 마이스터고 선정과정을 거쳐 2009년에 10개교, 2010년에 20개교, 2011년에 35개교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부터 50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표 9> 참조).

<표 9> 마이스터고 확대 계획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정	도입	분석	정착	확대
마이스터고 수	10개교	20개교	35개교	50개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에서 재구성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2008년 9개교를 1차 선정하였으며, 2009년에 12개교를 2차 선정하여 총 21개교 선정 완료되었으며, 한국형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21개교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업

이하의 내용은 정철영 외(2008b)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자료의 pp. 7-15. 부분을 인용하였고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부분은 정훈(2009) 『영역별 특성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1)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2)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3)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4)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교 지원사업, 5)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6)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7) 학교기업 지원사업, 8)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9) 첨단학과 개편 지원사업, 10) 청소년 비즈쿨 운영사업 등 12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정부는 1998년부터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재정지원방식을 평가를 통한 지원으로 본격화하여 특성화지원예산을 전년도 80억 원 규모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01년까지 총 1,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개별 전문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보다 비교우위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감축, 행정조직 개선 등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한 대학에 대하여 115억의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하였다.

2002년부터는 대학의 특성화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일반 지원을 오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2001년 700억 원)와 구조조정 사업비를 특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규모를 확대(2002년 1,370억 원)하고, 평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4년 2월에 '2004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정원감축,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으로 대학 규모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사업」과 대학별 비교우위 부분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내용 영역은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영역별 특성화'(수도권, 비수도권) 사업과 비정규 교육과정 포함의 '주문식 교육'과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특성화' 사업은 교육과정을 자연 계열(I 영역), 공학 계열(II 영역), 인문사회·예체능계열(III 영역)로 구분하여 당해 전문대학이 비교 우위가 있는 1개 영역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하여 지원하였다.

2004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 기본방향,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목적

- ① 인구·산업·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 조정 및 특성화 촉진
- ② 전문대학과 지역경제·산업·문화 등 지역 발전 간의 연계 강화
- ③ 교육 여건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활성화

□ 기본방향

- 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②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년 간 지원
- ③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배려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도를 높임.

□ 주요사업내용

- ①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으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촉진
- ② 산업체, 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향토산업의 육성, 산업기술교육단지의 구축,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기초학 습능력 제고와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③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실습 환경의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충 및 교양·전공과정의 개선, 보수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학생 전공 동아리 활동의 지원

2004년도부터 실시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있는 전문산업인력의 양성을 유도함으로써 졸업생의 취업률은 물론 신입생 충원율 제고에 기여하였음(제1기 기준취업률은 3년간 8.0% 증가, 신입생 충원율은 3년간 10.9% 증가).

둘째,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였고, 교원 충원을 통한 교원확보율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였다(제1기 기준 입학정원은 3년간 39,000명 감축, 전임교원확보율은 3년간 6.1% 증가).

셋째, 2004~2005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특성화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전문대학은 그렇지 못한 전문대학에 비해 ① 전체학생취업률, ② 전공분야 학생취업률, ③ 학과 통폐합의 실적, ④ 학과정원 조정 실적(특히 특성화 계열의 우수 학생 증가) 등의 영역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6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중간 평가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전문대학의 특성화 계열은 ① 전임교원확보율, ② 전체교원확보율, ③ 학생보유율, ④ 학생취업률, ⑤ 전공분야 학생취업률에 있어서 전국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임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성과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2007~2008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연차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전문대학의 특성화 계열은 ① 전임교원확보율, ② 학생충원율, ③ 전체취업률 및 정규직취업률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보다 모두 우위를 보임으로써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2)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기관(특히 산업체, 전문대학, 전문계고)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 교원들을 산업체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산업체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단 규모는 20~40명으로 전문대학 1개 학과와 전문계고는 교육과정 운영상 조편성이 가능한 5~40명을 참여단위로 함으로 전문대학 1개 학과와 하나 또는 다수의 전문계고가 참여 가능하다. 전문대와 전문계고간의 협약학과는 동일학과로 구성하며, 동일성 여부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학과 명칭이 일치할 필요

는 없다.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은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는 이렇게 양성된 인력에 대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06년 현재 44개의 사업단 (제1모형<취업-진학 병렬형>은 18개, 제2모형<진학-취업 순차형>은 26개)에 40개교의 전문대학교, 150개교의 전문계고등학교, 326개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표 10> 참조), 2006년에는 9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10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현행사업(2006-2008)을 평가 및 분석하여 60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10>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현황

사업단수	대학 수 (개교)	전문계고		기업체 수	지자체 수	사업비(만 원)	
		학교 수 (개교)	학생 (명)			2006년	2007년
44개 제1모형: 18개 제2모형: 26개	40	150	1,573	326업체	15개 교육청	991,500	1,060,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7). 희망을 실현하는 실업계고 육성전략. .

협약학과 모형은 전문계고 학생이 졸업한 후에 진학을 먼저 하고 취업을 이후에 하느냐, 취업을 한 이후에 전문대학 진학을 병행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표 11>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취업-진학 병렬형(제1모형)	취업-진학 순차형(제2모형)
학생진학	•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에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야간, 주말과정 등)	•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
전문계고-전문대학	• 교육과정 운영 협력	•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전문대학	• 근로자 위탁교육	• 취업 협약 • 교육과정 운영 참여
지원규모	• 사업단별 2.7~3.5억 원	• 사업단별 1.7~2.5억 원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의 50%이상 전문계고 지원	•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전문계고 지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협약학과 운영 매뉴얼. 재구성

첫째, 제1모형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에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야간, 주말과정 등)하는 유형으로 전문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 전문계고 졸업 후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취업, 산업체는 근로자를 협약 전문대학에 위탁 교육(야간, 주말, e-러닝 등), 현장실습학기제 등을 포함한다. 제1모형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선호하는 모형이며 교육인적자원부 협약학과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2모형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둘째, 제2모형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하는 유형으로 전문계고 3학년 또는 2, 3학년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무시험 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산업체 취업, 산업체는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 장학금을 지급, 전문대학 협약학과 졸업자 채용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 성공사례는 현대제철-신성대학-논산공고(8명)/경기기계공고(8명)/합덕산업고(1명)간의 협약학과로 연봉은 3,500만 원 대우이며,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데 2007년 수시모집 경쟁률이 30대 1이었으며, 2006년 12월에 실시한 협약학과 만족도 조사결과 85.7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실업고 육성계획

이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관 중앙부처가 국가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및 육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계부처가 직접 국가차원에서 책무성(취업/진로)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세부적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교운영의 유연화를 통해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체제로 체질을 개선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셋째, 산학협력, 교육과 훈련의 연계 등 개방적 운영을 통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추진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 선정학교수를 전문계 고등학교 100개교 정도로 한다. 둘째, 위탁지원 방법은 일관위탁운영, 공동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의 3개 유형으로 한다. 셋째, 예산지원 부처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으로 하며, 기타 협조 부처로는 국방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병무청으로 한다.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추진단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추진 단계

연도	목표	주요 추진 내용
1단계 (2007년)	<input type="checkbox"/>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 MOU체결로 시행 - 특성화고 지정 - 선정학교 기반조성 (교육과정 수립, 교원연수)	<input type="checkbox"/> 관련부처 대상 위탁·지원 육성 - 육성 목표 : 100개교 - 관련부처 대상교 심사·선정, 예산 확보 - 관련부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약
2단계 (2008년)	<input type="checkbox"/> 1단계 운영 및 3단계 준비	<input type="checkbox"/> 관련부처 요구 특성화 교육과정 적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체, 경제단체 위탁·지원 운영 계획 수립
3단계 (2009년)	<input type="checkbox"/> 산업체, 경제단체 위탁·지원 운영 시행	<input type="checkbox"/> 관련 산업체, 경제단체 위탁·지원 육성 - 육성 목표 : 100개교 이상 - 1단계 적용학교 평가 후 확대 적용 - 산업체, 경제단체 수요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과정 위탁 운영 - 교육청과 관련 산업체, 경제단체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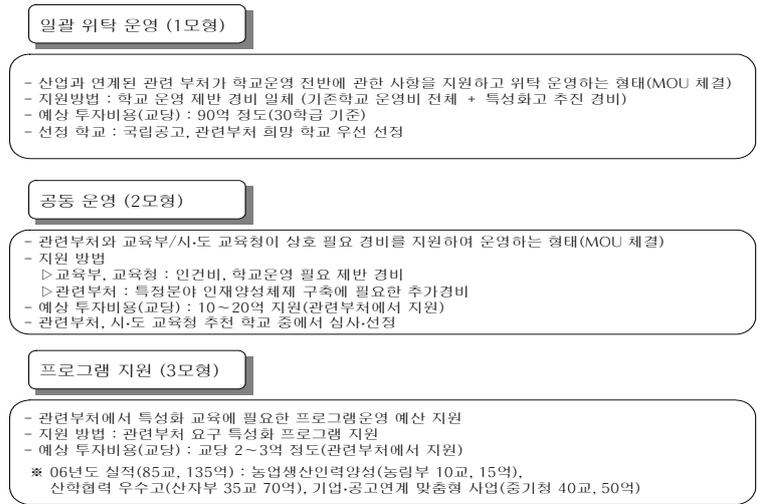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12), 6쪽.

첫째, 1단계(2007년)의 목표는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을 위한 MOU 체결 및 특성화고 지정,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관련 부처 대상학교 심사 및 선정, 예산 확보, 관련 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하게 된다. 둘째, 2단계(2008년)의 목표는 1단계 운영 및 3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관련 부처요구에 따른 특성화 교육과정의 적용, 산업체, 경제단체 위탁지원 운영 계획 수립 등이다. 셋째, 3단계(2009년)의 목표는 산업체, 경제단체 위탁·지원의 운영을 하는 것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100개 이상을 육성하고, 1단계 적용학교 평가 후, 확대 적용하고, 산업체 경제단체 수요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과정 위탁 운영을 하고, 교육청과 관련 산업체, 경제단체와 협약을 하게 된다.

위탁지원 운영 모형은 (1) 일괄 위탁 운영(1모형), (2) 공동 운영(2모형),

(3) 프로그램 지원(3모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
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운영 모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1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은 중앙부처가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및 육성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위탁·지원 방법은 일괄위탁운영(1모형), 공동운영(2모형), 프로그램 지원(3모형) 등 3개 유형으로 하며, 2008년도 대상 전문계 고등학교는 106개교이다. 예산지원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모형 2개교), 농림수산식품부(2모형 13개교, 3모형 6개교), 중소기업청·노동부(1모형 2개교, 3모형 64개교), 지식경제부(3모형 5개교), 특허청(3모형 4개교), 국방부(3모형 10개교) 등이다(〈표 12〉 참조).

<표 1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대상 학교수

관련부처	현부처	학교수	위탁·지원 방법			특성화 분야
			부처 일괄위탁	공동 운영 후 일괄위탁	프로 그램 지원	
문화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2			2	• 문화산업
농림부	농림수산 식품부	10		10		• 농업 및 식품산업
해양수산부		9		3	6	• 자영 수산경영 및 수산 해양산업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노동부	36	1		35	• 기계 등 중공업
중소기업청		30	1		29	• 중소기업계 수요반영(제 조업 혹은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5			5	• SW 및 웹개발, 정보통 신, 정보처리, 인터넷, 네 트워크 등
특허청	특허청	4			4	• 발명을 통한 창업 및 특허 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
국방부	국방부	10			10	• 군 특성화 전문병 육성 분야
계		106	2	13	9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현황. 재구성.

위탁지원 운영 모형별 특징을 운영형태, 예산지원, 관련 부처 투자예산액, 학교선정방법, 장점 및 단점의 측면에서 종합·비교하면 <표 13>과 같다(나승일, 2007: 137~138).

첫째, 운영형태 측면에서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은 관련 부처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운영하고, 공동운영모형(2모형)은 관련 부처, 교육부 및 교육청이 상호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은 관련 부처에서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둘째, 예산지원 측면에서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의 경우 관련 부처가

학교운영 제반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공동운영모형(2모형)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 필요제반경비를, 관련 부처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체제구축에 필요한 추가경비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의 경우 관련 부처가 필요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한다.

셋째, 관련 부처 투자예산액 측면에서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의 경우 36~90억 원, 공동운영모형(2모형)의 경우 10~20억 원,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의 경우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학교 선정방법 측면에서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추천학교 중에서 관련 부처가 적격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공동운영모형(2모형)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추천학교 중에서 교육청과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하며,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의 경우 관련 부처가 직접 사업을 공모하여 시·도교육청의 추천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다섯째,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은 관련 부처가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자율학교 지정시 교장임용 추천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련 부처가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정이 불가피하다. 공동운영모형(2모형)은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하며 자율학교 지정시 교장임용 추천권 및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운영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은 관련 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의 사업과 동일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적으며 관련 부처의 단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2~3억 원으로 관련 부처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표 13>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모형 비교

구분	일괄 위탁운영모형(1모형)	공동운영모형(2모형)	프로그램 지원모형(3모형)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상호 경비를 지원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에서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가 학교 운영 제반경비 일체(기존학교 운영비 + 특성화고 추진 경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 필요제반 경비를 지원 • 관련 부처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필요한 추가경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가 필요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 지원
관련 부처 투자예산액 (교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9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억 원
학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추천학교 중에서 관련 부처가 적격성을 판단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추천학교 중에서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원사업, 기업·공고 맞춤형 사업 등과 동일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가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함 • 자율학교 지정시 관련 부처가 교장임용 추천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획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능함 • 기존의 법, 제도내에서 신속한 시행이 가능함 • 자율학교 지정시 관련 부처가 교장임용 추천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획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적음 • 기존의 전문계고 재정지원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없음 • 관련 부처의 단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정이 불가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운영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음 (MOU 체결을 통한 해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억 원으로 관련 부처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자료: 나승일(2007), 139쪽.

4)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교 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등과 관련하여 특성화 고교로 전환을 유도하고 해당분야 산업체와 인력양성 및 취업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6년 기준으로 지원규모는 총 175억 원이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기준(취업률, 학교종합발전계획, 교원현장연수 정도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하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 특교로 지정하여 교당 7억 원씩 총 1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표 14〉참조), 공모에 의해 전문계고 31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2억 원 내외씩 총 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15〉참조).

<표 14>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교 지원사업 특교선정에 의한 지원대상 학교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서울특별시	혜성여자상업고등학교	강원도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공업고등학교	전라북도	진안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라남도	목포공업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경상북도	김천농공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제공업고등학교
경기도	팔달공업고등학교	제주도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자료: 김기홍(2006).

<표 15>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교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

지역	학교명	사업명	비고 (특성화여부)
서울	동구여성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서울관광고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관광 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부산	부산 기계공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고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선정학교 (국립)
	부산 정보관광고	산학협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업 활성화	기선정학교
대구	대구 서부공고	지역 4대 전략 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대구제일 여자정보고	산업체 협약을 통한 금융·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 양 성	전환희망학교
	대구공고	지역 전략 산업에 부응하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현장 전 문인력 양성	전환희망학교
인천	영종국제 물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학협력으로 물류 특성화 고교 내실화	기선정학교
	인천여성	인천경제특구중심의 산업인력 양성 위한 국제 비즈니스 특성화고 추진 전략	전환희망학교
	계산공고	지역산업 장기 전략과 연계한 첨단금형 및 자동차 설비 의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전환희망학교
광주	전남여성	지역 성장 동력산업 밀착형 디자인·영상 실무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대전	대전여성	성장동력 특성화 실현을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인 력 양성	기선정학교
	충남기계 공고	기계 및 전자기계 분야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 성	전환희망학교
	대성여자 정보과학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인력 양 성	전환희망학교
울산	현대 정보과학고	자동차·조선/해양 분야의 산업체와의 협동 교육	기선정학교
경기	파주공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전문인력양성 체제 구축	기선정학교
	양영 디지털고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 고교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 및 적용	기선정학교
	산본공고	직능·지방자치단체·산업체와 연계한 금형디자인과 특성 화 사업	전환희망학교
강원	원주 정보공고	의료기기 산업체 필요한 전문기능인력 양성	전환희망학교

지역	학교명	사업명	비고 (특성화여부)
충북	금왕공고	산학연계교육을 통한 반도체 장비 분야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환희망학교
충남	운산공고	지역통합적 파트너십을 통한 자동차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전북	한국경마축산고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선도적인 마필관리사 양성	기선정학교
	학산고	Web -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전환희망학교
전남	호남원예고	산·학 체험 학습을 통한 농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선정학교
	전남미용고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 습득 및 취업률 제고	기선정학교
경북	구미전자공고	모바일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체제 구축	기선정학교 (국립)
	경북항공고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항공 특성화고 운영	전환희망학교
	한국생명과학고	바이오 생명산업 계획서	전환희망학교 (영농경진대회)
경남	대동기계공고	특성화-산학협력 연계 직업교육 극대화	전환희망학교 (기능대회)
	진주기계공고	지역 컴퓨터응용가공 산업에 필요한 산업 인재 양성	전환희망학교 (기능대회)
제주	제주공고	EMS산업의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환희망학교
계	31개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5)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원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외부 교육전문기관과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 실시 및 외부 교육전문기관의 학습을 학교수업으로 인정, 기업체 CEO,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 실업고생 대상 계절학기 수업비, 산학협력 동아리 활동비 등의 지원, 산학협력확산사업 참여대학과 연계하여 참여 교원의 기술재교육 연수 실시, 실업고 재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표 16>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사업 참여 학교

지역	학교명	사업명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 학교특성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인재육성
	이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	• 미디어 분야 특성화고 산학협력 촉진 사업
	염광여자정보고등학교	• 지능형 홈네트워크 IT 여성인력 양성
	서울공업고등학교	•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생산인력 양성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산학협력을 통한 국제통상 및 금융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한양공업고등학교	• 산학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인력 양성사업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 산, 학, 대학 컨소시엄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차세대 기술인력 양성사업
	부산영상고등학교	•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통한영상 전문 인력 양성
	부산자동차고등학교	• 산학 연계 협력을 통한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전문기능인력 양성
	동아공업고등학교	• 산학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세대 지능형 로봇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 반도체/PCB 관련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신산학협력체제 구축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 지능형 로봇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구공업고등학교	• 대구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카트로닉스(지능형 로봇) 현장 기능인력 양성
	대구여자상업정보고등학교	• 디지털영상콘텐츠 전문생산인력양성사업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 산학관 컨소시엄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기초인력양성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산학연계교육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IT 여성 중간 전문 인력의 양성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 지역전략 산업 밀착형 디자인·영상 실무 인력 양성
	광주공업고등학교	• 지역 중점 육성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다차원 기능인력 양성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자동차, 가전, 광, 디자인, 첨단금형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학교명	사업명
대전	대전여자상업 고등학교	• 디지털 콘텐츠 영상제작 S/W 인력 양성
	대전여자정보 과학고등학교	•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교육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SW 솔루션 운용인력양성
울산	울산공업 고등학교	• 지역 성장동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지능형 로봇)
경기	양평고등학교	• 산학협력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강원	삼척전자공업 고등학교	• 진로선택형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충북	금왕공업 고등학교	• 반도체 장비 분야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충북공업 고등학교	• 산학협력 cluster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문기능 인력 양성
충남	공주공업 고등학교	• 크리스벨리 중심 디스플레이 전문생산인력 육성사업
	논산공업 고등학교	•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기능 인력 양성 사업
전북	전주여자상업 고등학교	• 지역문화영상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남	목포기계 공업고등학교	• 전남 조선메카트로닉스 산업 기능인력 양성
	화순실업 고등학교	• 전남·광주권 자동차 산업 전문기능인력 양성
경북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	• 디스플레이산업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	• 지역 성장동력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남	창업기계 공업고등학교	• 산학협력을 통한 로봇·지능형 홈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제주	제주관광산업 고등학교	• 바이오 식품 및 미래형 산업응용 설비 분야의 인력양성
계	35개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내부자료.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원사업은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교육인적자원
부·산업자원부·노동부, 200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1만 여명의 차세대 성장동력 현장생산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간기술인력 양성,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활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주체의 다원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2005년 20개 학교, 2006년 15개 학교를 선정하여 총 35개 학교에 학교당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며, 이는 2005년 40억 원(1개교당 2억 원 내외), 2006년 70억 원(기존 40억 원 신규 30억 원 증액)의 규모이다(〈표 16〉 참조)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은 산자부, 교육부, 노동부 공동 제 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6)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중소기업청, 병무청,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있는 관련 부처 협약에 의한 명문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고 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고생 취업보장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고간 취업협약을 체결하며, 시범공고를 지정·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전국 공고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중소기업청, 2006).

공고는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정된 공고는 자율학교 및 연구학교로 지정되며, 공고생은 재학 중(3학년)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을 받고 졸업 후 2년간 해당기업에 협약에 따라 취업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학자금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졸업시 2년간 협약에 따라 채용하며, 지급된 훈련비 및 수당은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졸업시 2년간 협약에 따라 채용하며, 지급된 훈련비 및 수당은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환급된다. 병무청은 학생이 기업체에 협약

근무기간(2년)동안 입영기일을 연기 조치한다. 채용학생이 협약에 의한 취업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 등록금은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표 17>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구분	학교수	참여학교	비고
서울	4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은곡공업고등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기존 1 신규 3
부산 /울산	6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대전정보통신고등학교, 대양전자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기존 4 신규 2
대구 /경북	8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아포공업고등학교, 조일공업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기존 8
광주 /전남	4	전남공업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 동일전자공업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기존 3 신규 1
경기	6	부천공업고등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성남공업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기존 6
인천	2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기존 1 신규 1
강원	3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기존 2 신규 1
충북	2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제천디지털고등학교	기존 1 신규 1
전북	4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기존 2 신규 2
경남	5	김해건설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기존 3 신규 2
대전 /충남	6	대전공업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예산공업고등학교	기존 6
계	50		

자료: 중소기업청(2007). 2007년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및 기업선정 결과.

현재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50개교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로 17개교, 2006년도에 시·도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로 23개교, 2007년에 신규로 13개교가 선정되었다(〈표 17〉 참조).

한편, 일정기간 지원 후 학교자율의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존 참여학교의 선정을 우대하되, 2006년 실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신규 신청학교의 경우에도 2007년 사업계획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교는 제외하고,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로 지정(2년)된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참여학교로 선정하였다.

향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1,26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표 18〉 참조).

<표 18>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향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국고	지방비	계
2007년	20,000	30,000	23,000
2008년	30,000	4,500	34,500
2009년	30,000	4,500	34,500
2010년	30,000	4,500	34,500
계	110,000	16,500	126,500

자료: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내부자료.

7)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지원사업은 학교의 장이 기업주가 되어 교원과 학생들을 고용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재학생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기업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맞추어 학교와 학교기업간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기업의 설립취지는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 운영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통해 현장 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기업 운영에 학생을 참여시켜서 학생의 기업 설립 및 운영 능력을 길러주고, 학교 기업에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교육활동에 재투자하여 학교발전을 도모하여 학교기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표 19>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대상학교

학교명	학교기업명	운영 내용
인천기계 공고	스쿨모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정비: 엔진 및 새시부분 점검 수리, 브레이크 관련 수리 (브레이크 미션 액 교환), 경정비 수리일체, 휠 얼라인먼트 교정, 엔진 수리, 오토 미션 관련 수리, 에어컨 수리 및 가스주입, LPG 차량 점검 및 수리 인천시 교직원으로 대상으로 자동차 수리 및 점검
대구서부 공고	대구서부 공고 학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 유연 생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가공 제품가공 공장, 운영 제어실, 공구실을 설치하여 전자기계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장소로 활용
충북공고	충북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금형부품, 치공구, 절삭가공 및 자동화 kit 조립 교육과정 운영 중에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선정 청주 지역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와 연계운영
학산 정보고	학산제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과제빵과 호텔조리학과가 연계하여 제과, 제빵 생산 및 판매 과거 3~4년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 및 노하우 확보
경남 거제고	거공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 조선업체와 취업을 연계한 현장 실무 능력 배양 산업안전교육과 배전반 생산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구례농고	섬지뜰 친환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무농약 채소와 우리밀 기능성 제과, 제빵 제도 판매 학생들에게 영농 창업 의지력 배양
충남 기계공고	충기 학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 가공, 판매 귀금속 디자인, 제품 제작 및 마케팅에 종사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

현재 학교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학교에서 직접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형태, 외부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을 유치하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형태 등이 있다. 2004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전문계 고등학교 5개교가 선정되었고, 2005년도에 구례농업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추가 선정되어 총 7개교가 제1기 학교기업 실험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7개교를 대상으로 총 1,09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표 19> 참조).

제2기는 거제공고 외에 12개교가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총 1,906백만 원이다.

8)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의 취지는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6.5%)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자의 실업률(9.5%)이 훨씬 높아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투자가 저해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실업계 고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기인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직업진로상담, 취업행사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직업진로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약 47억 원으로 지원자격을 갖춘 실업계고교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학교별로 기본 2천만 원에 재학생수에 따라 추가지원하되, 최대 지원액은 4천만 원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당해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표 20>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지원가능 사업

분야	세부사업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자아 이해, 자기관리, 문제해결·의사소통 능력 제고 등 직업 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 상담, 학년 또는 진로성숙 단계에 따른 진로지도 등 진로개발 지원프로그램, 전학년 각종 진로활동 및 경험을 지도 관리하는 이력관리 프로그램, 직업탐색·진로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지도 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및 산학연계·직장체험 구인처 개발 등 직업체험 활성화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학년·전공별 학생 특성에 맞춘 직업특강(기업 CEO초청 특강, 전문상담가 등 포함) 및 단기강좌 운영, 모의 면접교육·취업캠프 등 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산업체 등 연계 취업박람회 실시, 졸업생관리프로그램 등

분야	세부사업
사업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학교 내 직업진로정보센터 설립, 취업 관련 홈페이지 구축, 학생 진로경 로 및 취업 관련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 노동부(2007.1).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지침. 4쪽.

9) 첨단학과 개편 지원사업

첨단학과 개편사업은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첨단학과로의 개편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었다(<표 21> 참조).

<표 21> 첨단학과 개편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수	26개교 41개학과	118개교 243개학과	119개교 247개학과	118개교 242개학과	118개교 242개학과	-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지원액	6,413	8,550	8,663	8,663	6,936	

자료: 김기홍(2004), 42쪽

10) 청소년 비즈쿨 운영 사업

2002년 도입 후, 청소년 기업가 마인드 함양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양적인 팽창(05년 4만 명, 예산 10억 원)은 이루어졌으나, 정규 직업교육은 취업 중심으로 창업교육은 정규과정에서 소외되어 창업교육은 단순 창업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이 아닌 기업가로서의 자질(attitude), 기술(skill), 지식(knowledge)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업가양성 시스템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도 경제활력 제고와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활성화를 추진, 창업활성화의 전제 요건인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사회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린 시절부터 기업가 교육을 통해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청소년 비즈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비즈쿨의 방향 및 목표는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사업화 능력의 조기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및 자기직업 개척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2005년에 40,000명을 2006년에는 30,000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50,000명의 학생을 교육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 22> 청소년 비즈쿨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연도	'05년 현황	'06년	'10년
	교육학생(명)		40,000	30,000

청소년 비즈쿨의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쿨 학교의 다각화 및 교육내용의 전문화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비즈쿨 운영학교를 시범 실시하고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 교사용 표준운영 모델개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검토하며, 비즈쿨 학교 창업동아리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실질적인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CEO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문계 등 비즈쿨에 참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셋째, 청소년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창업교육 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해 중·고교에 교육과정에 창업교육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비즈쿨 참여 졸업생의 취업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록-2] 주요 국가의 학제

이하의 자료는 김영철 외(2006)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용하였음.

1) 미국의 학제

연령			박사후 과정		
			박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22			대학교		
21					고등교육
20	초급대학		기술대학		
19					
18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XII
17	4년제 고등학교				XI
16		종합중등학교			X
15			중학교		IX
14					VIII
13					VII
12					VI
11					V
10			초등학교		IV
9					III
8					II
7					I
6			유치원		취학 전 교육
5					
4			유아원		

[그림 IV-1] 미국의 현행 학제

자료: 김영철 외(2006), 74쪽.

2) 영국의 학제

21-22				Further Education	고등교육
20-21					
19-20					
18-19					
17-18					
16-17		6 th from			
15-16	KS 4	V11	중등교육		
14-15		V10			
13-14	KS 3	V9			
12-13		V8			
11-12		V7			
10-11	KS 2	V6		초등교육	
9-10		V5			
8-9		V4			
7-8		V3			
6-7	KS 1	V2			
5-6		V1			
4-5		Reception	취학전 교육		
3-4		Nursery			
2-3					

자료: 김영철 외(2006), 83쪽.

3) 프랑스의 학제

고등 교육 (만 18세 이후)	대학교(UNIVERSITES) 박사과정 (DOCTORAT)3년	그랑제콜 (GRANDES ECOLE)3년	기타 고등 교육 기관들				사립전문학 교(ECOLE) : 바칼로레 아 미취득자	
	석사과정 (MAITRISE)2년	그랑제콜 준비반 (PREPA)2년		전문기술 대학 (IUT)	고등기술자 과정 (STS)			
<p>바칼로레아(Baccalauréat) :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p>								
후기 중등 교육 (만15- 17세)	일반고등학교 (Lycée Général)	기술고등학교 (Lycée Technologique)	기술 자격증 (BT)	직업 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직업계박과정2년 직업과정 이수증 (BEP)2년	직업훈련원 (CFA) 전문직업증과정2년 직업적성증과정 (CAP)2년	고3년 (베르미날) 고2년 (프르미에르) 고1년 (서프르트)	최종 사이클 결정 사이클	
	일반/기술계고등학교 (Lycée Général et Technologique)							
전기 중등 교육 (만11- 14세)	중학교 (Collège)					중4년(3e)	전로지도 사이클	
						중3년(4e)	중심 사이클	
의무 교육 (만 6세-만 16세)	초등 교육 (만6- 10세)	초등학교 (Ecole Primaire)					중2년(5e)	적용 사이클
							중1년(6e)	
							중급과정2 (CM2)	심화 사이클
							중급과정1 (CM1)	
초급과정2 (CE2)	기본학습 사이클							
초급과정1 (CE1)								
취학 전 교육 (만2세 또는 3-5세)	유치원 (Ecole Maternelle)					준비과정 (CP)		
						상급반 (GS)	전-학습 사이클	
						중급반 (MS)		
						하급반 (PS)		

[그림 IV-3] 프랑스의 현행 학제

자료: 김영철 외(2006), 93쪽.

4) 독일의 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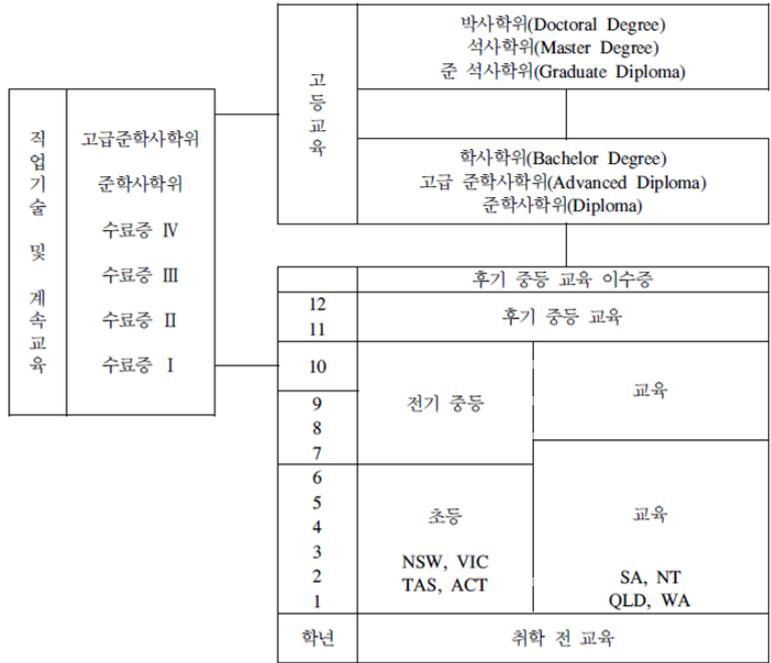
20 ~	종합대학교, 단과대학교, 전문대학, 통합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원격대학 등			고등 단계		
19	13	김나지움 상급반	전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	중등 2 단계	
18	12					
17	11				중등 1 단계	
16	10	김나지움 초급반 Gymnasium	종합학교 Gesamtschule	실업학교 Realschule		주요학교 Hauptschule
15	9					
14	8					
13	7					
12	6	진학을 위한 방향제시 단계 (5 - 6학년) (Orientierungsstufe)				
11	5	초 등 학 교 (Grundschule) - Berlin과 Brandenburg주에서는 6학년제 실시			초등 단계	
10	4					
9	3					
8	2					
7	1	유 치 원 (Kindergarten)			취학 전	
6 - 3						
연령	학년					

자료 : BMBF(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Grund-und Datenstruktur 1995/1996

[그림 IV-4] 독일의 현행 학제

자료: 김영철 외(2006),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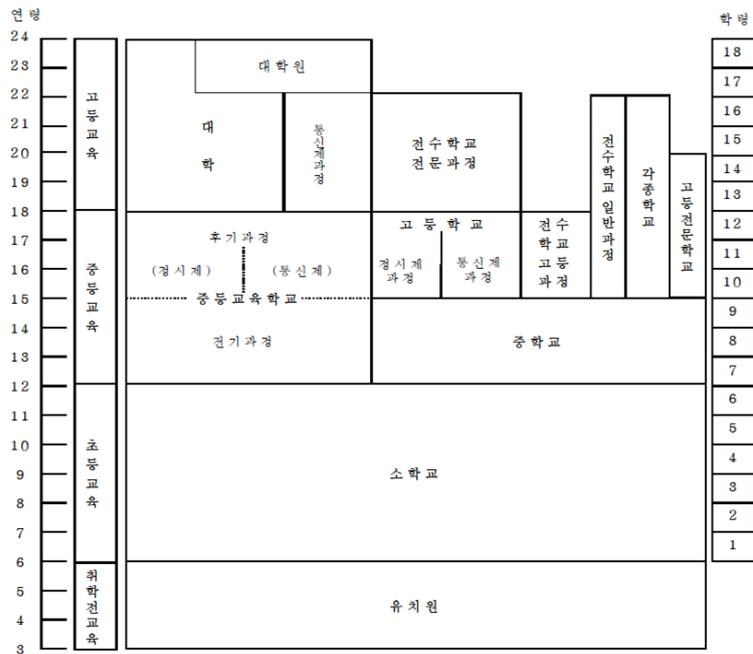
5) 호주의 학제



[그림 IV-5] 호주의 현행 학제

자료: 김영철 외(2006), 110쪽.

6) 일본의 학제



[그림 IV-6] 일본의 현행 학제

자료: 김영철 외(2006), 115쪽.

[부록-3]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가 현황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가톨릭상지대학	경영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0
강릉영동대학				유아교육과	1	20
거제대학				기계공학과	2	20
경기공업대학	전자통신학과	2	25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20
				자동화로봇공학과	1	20
				정밀기계공학과	1	20
				전기제어공학과	1	20
				산업경영학과	2	40
경남정보대학	국제비즈니스외국어계열	2	20			
	경영학과	2	20			
	호텔관광경영학과	2	20			
	사회복지학과	2	30			
	전자정보공학과	2	20			
	컴퓨터정보공학과	2	20			
	기계자동차공학과	2	20			
	토목공학과	2	20			
	신소재응용화학공학과	2	20			
	인테리어디자인학과	2	20			
	디지털디자인학과	2	20			
	물리치료학과	1	20			
	치위생학과	1	20			
	작업치료학과	1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경민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2	20	건축공학과	2	20
	사회복지학과	2	30	e-비즈니스경영학과	2	20
	소방방재학과	2	40	독서문화컨텐츠학과	2	20
	가구인테리어디자인학과	2	15	태권도외교학과	1	20
	자치행정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0			
	호텔조리학과	2	20			
	컴퓨터정보통신학과	2	30			
	생활체육학과	2	20			
	시각디자인학과	2	20			
경북전문대학	철도전기공학과	2	25			
	토목공학과	2	25			
	법행정학과	2	20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1	25			
	관광레저학과	2	25			
	사회복지상담학과	2	25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	20			
	식품영양조리학과	2	20			
	생활체육과	2	20			
공주영상대학	유아교육과	2	40			
	영상연출학과	1	60			
	이벤트연출학과	2	40			
광양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	20			
	임상병리학과	1	20			
	치기공학과	1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광주보건대학	임상병리학과	1	20	치기공학과	1	20
	물리치료학과	1	20	안경광학과	1	20
	방사선학과	1	20	유아교육학과	1	20
	간호학과	1	20			
	치위생학과	1	20			
	응급구조학과	1	20			
구미1대학	정보통신학과	2	20			
	자동차기계학과	2	20			
기독교간호대학	간호학과	1	24			
농협대학	협동조합경영과	2	13			
대경대학	관광호텔학과	2	20	생활체육학과	2	10
	호텔조리학과	2	55			
	모델학과	2	15			
	경호행정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2	20			
	뷰티디자인학과	2	30			
대구과학대학				측지정보학과	2	20
대구미래대학				토지정보학과	2	20
대덕대학				경영학과	2	20
				복지학과	2	25
				유아교육과	1	20
대림대학	경영학과	2	35	전기공학과	2	30
	디지털전자통신공학과	1	35	토목환경공학과	2	30
	기계공학과	2	35	문헌정보학과	2	35
	건축공학과	1	35	자동차공학과	2	35
				사회체육학과	2	4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대원대학	철도건설공학과	2	20	전기전자공학과	2	20
	건축학과	2	20	응급구조학과	1	20
	물리치료학과	1	20			
	유아교육학과(1년)	1	20			
	유아교육학과(2년)	2	20			
대전보건대학	유아교육학과	1	30	임상병리학과	1	30
	치기공학과	1	30	간호학과	1	30
	물리치료학과	1	30			
	방사선학과	1	30			
	치위생학과	1	30			
동강대학	토지정보관리학과	2	20	안경광학과	1	20
	관광경영학과	2	20	사회체육학과	2	20
	인터넷정보학과	2	20	글로벌경영학과	2	20
	건축학과	2	20			
동남보건대학	방사선학과	1	40	치위생학과	1	30
	임상병리학과	1	40			
동서울대학	전기정보제어학과	2	23			
	산업디자인학과	2	23			
	실내디자인학과	1	23			
	시계주얼리학과	2	20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미디어학과	1	30	미디어기술학과	1	20
	영화예술학과	2	20	영상음악학과	2	15
동아인재대학				사회복지과	2	4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과	2	25			
	전기시스템공학과	2	25			
	정보전자공학과	2	25			
	소프트웨어정보학과	1	25			
	기계공학과	2	25			
	기계설계공학과	2	25			
	자동화시스템공학과	1	25			
동원대학	아동보육복지학과	2	20	경영학과	2	20
	뷰티디자인학과	2	30			
	휘트니스건강관리학과	2	20			
동의과학대학	건축공학과	1	20			
	토목공학과	2	20			
	컴퓨터공학과	2	20			
	산업디자인학과	2	20			
두원공과대학	경영학과	2	20			
	디스플레이전자공학과	2	20			
	정보통신학과	1	20			
	기계공학과	2	20			
	건축디자인과	1	23			
마산대학	임상병리학과	1	40	보건행정과	2	30
	방사선학과	1	40			
	치위생학과	1	40			
	간호학과	1	40			
	물리치료학과	1	40			
	뷰티케어학과	2	4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명지전문대학	영어학과	2	30	일본어학과	2	30
	경영학과	2	30	실용음악학과	2	30
	세무회계학과	2	30			
	전기공학과	2	25			
	토목공학과	2	25			
	문예창작과	2	25			
	산업시스템경영학과	2	25			
	지적학과	2	25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	25			
문경대학				간호학과	1	20
배화여자대학	컴퓨터정보학과	1	20	전통의상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5			
	전통조리학과	2	20			
백석문화대학	유아교육과	2	20			
	영어학과	2	20			
	경영학과	2	25			
	사회복지학과	2	25			
	컴퓨터정보학과	2	20			
	일본어학과	2	20			
부산여자대학	항공관광학과	2	20			
	사회복지학과	2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1	30			
	부동산금융정보학과	2	30			
	경영학과	2	40			
	관광경영학과	2	25			
	세무회계학과	2	32			
	식품영양학과	2	25			
	전자공학과	2	25			
	컴퓨터제어공학과	2	25			
	e-비즈니스학과	2	30			
	건축공학과	2	30			
	토목공학과	2	27			
	실내건축학과	1	30			
	의상디자인학과	2	25			
	생활스포츠학과	2	30			
	삼육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	20		
간호학과		1	20			
서강정보대학	유아교육학과	1	20	사회복지학과	2	30
	경영학과	2	20	응급구조학과	1	20
	임상병리학과	1	20			
	치위생학과	1	20			
	소방안전관리학과	2	20			
	관광학과	2	20			
	간호학과	1	20			
	건설토목공학과	2	20			
	산업디자인학과	2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학과	1	40			
서울예술대학	공연창작학부	2	77			
	미디어창작학부	2	58			
서일대학	정보통신학과	1	15	토목공학과	2	20
	자동차공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0
				부동산학과	2	15
				사회복지학과	2	20
				문예창작학과	2	20
선린대학	호텔외식경영학과	2	20			
	물리치료학과	1	15			
	피부미용학과	2	20			
	간호학과	1	80			
	보건행정학과	2	20			
	응급구조학과	1	20			
성화대학	안경광학과	1	30	태권도학과	2	40
	전기공학과	2	15			
	건축학과	2	25			
세경대학	사회복지학과	2	40			
	토목공학과	2	40			
송원대학	유아교육학과	1	20	자동차공학과	2	20
	마케팅정보학과	2	20	U-건설토목공학과	2	30
수원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1	30			
	미용예술학과	2	21			
	사회복지학과	2	30			
	간호학과	1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순천청암대학	세무회계과	2	20			
	응급구조과	1	20			
	간호과	1	25			
	컴퓨터정보과	2	20			
	인테리어디자인과	2	15			
	레저스포츠과	2	20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2	30	물리치료학과	1	20
	아동보육복지과	2	20	방사선학과	1	20
	컴퓨터정보처리학과	2	20	치위생학과	1	20
	미디어콘텐츠학과	2	10	건설정보학과	2	20
	실내건축과	1	10			
	그래픽아트미디어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0			
	경영학과	2	30			
	색채산업디자인학과	2	20			
신성대학	물리치료학과	1	20			
	치위생학과	1	20			
	미용예술학과	2	20			
	전기공학과	2	20			
	자동차공학과	2	20			
	유아교육학과	1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신흥대학	행정학과	2	20	경영학과	2	20
	임상병리학과	1	30	세무회계학과	2	20
	방사선학과	1	30	지적부동산학과	2	20
	치기공학과	1	30	영어통역학과	2	20
	안경광학과	2	15	산업디자인학과	2	20
	치위생학과	1	30	자동차공학과	2	20
	보건행정학과	2	20			
	뷰티아트디자인학과	2	20			
	호텔외식경영학과	2	30			
	실내디자인학과	1	20			
	안경광학과	1	15			
	간호학과	1	30			
	호텔조리학과	2	20			
	무역학과	2	20			
	관광경영학과	2	20			
	사회복지학과	2	20			
	생활체육학과	2	20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2	20		
안동과학대학	간호학과	1	20			
	건설정보학과	2	20			
안산1대학	관광영어학과	2	15			
	국제비서사무학과	2	20			
안양과학대학	유아교육학과	1	30			
	경영학과	2	30			
	호텔조리학과	2	30			
	건축과	2	3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영남이공대학	기계공학과	2	20			
	토목공학과	2	20			
	간호학과	1	40			
	물리치료학과	1	20			
	건축공학과	2	20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1)	1	25
				컴퓨터정보공학과(2)	2	25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2	25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	25
				디지털경영학과	2	30
				국제관광학과	2	25
				사회복지학과	2	30
				유아교육과	1	30
오산대학	호텔외식사업학과	2	30	경찰경호행정학과	2	20
	호텔조리학과	2	30			
	기계설계학과	2	30			
	전기시스템제어공학과	2	20			
	디지털전자공학과	2	20			
울산과학대학	기계시스템학과	2	40	치위생학과	1	20
				물리치료학과	1	20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	2	4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유한대학	산업일본어학과	2	20	컴퓨터정보학과	2	20
	경영정보학과	2	20	중국비즈니스학과	2	20
	유통물류학과	2	20			
	의무행정학과	2	20			
	식품영양학과	2	20			
	전기공학과	2	30			
	전자정보공학과	2	30			
	컴퓨터제어공학과	2	20			
	정보통신공학과	2	20			
	산업경영공학과	2	30			
	e-비즈니스학과	2	20			
	기계공학과	2	20			
	금형설계학과	2	30			
	건축설비공학과	2	20			
	시각정보디자인학과	2	20			
	패션디자인학과	2	20			
	기계설계학과	2	30			
	애니메이션학과	2	20			
	인덕대학	토목환경설계공학과	2	25	건축학과	1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2	25	디자인·멀티미디어학과	2	25
영어학과		2	25	만화·영상 애니메이션학과	2	25
테크노경영학과		2	25			
건설정보학과		2	25			
비서학과		2	25			
관광레저경영학과		2	25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천전문대학	토목공학과	2	25			
	세무회계학과	2	25			
장안대학	유아교육학과	1	20	유통경영학과	2	20
	관광중국어통역학과	2	30	세무회계학과	2	20
	관광일어통역과	2	30	패션디자인학과	2	20
	관광레저경영학과	2	15			
	디지털문예창작과	2	20			
	사회복지학과	2	20			
	영어통역학과	2	20			
	외식산업학과	2	20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1	40			
전남과학대학	화훼원예학과	2	20			
	태권도체육학과	2	30			
전남도립대학	토목환경과	2	20			
전주비전대학	건축공학과	2	20			
	컴퓨터공학과	2	20			
	태권도학과	2	20			
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2	30			
	컨벤션카지노경영학과	2	30			
제주한라대학	보건학과	1	30	유아교육학과	1	20
	간호학과	1	30			
	관광학과	2	20			
	통신컴퓨터공학과	2	20			
조선이공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2	30			
	건축학과	2	30			
	사회복지학과	2	3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천안연암대학	축산학과	2	40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과	1	30			
	만화창작과	2	30			
청양대학	자치행정학과	2	20			
춘해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	20			
충청대학	부동산지적학과	2	20	건축공학과	2	20
	토목공학과	2	20			
	사회복지상담학과	2	30			
포항1대학	경영서비스학과	2	20			
	토목도시공학과	2	20			
한국관광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2	40			
	제과제빵학과	2	30			
한국재활복지대학	의료보장구과	1	10			
한림성심대학	관광일어통역학과	2	20	디자인학과	2	20
	정보통신네트워크학과	2	20			
	레저스포츠학과	2	20			
	관광영어학과	2	20			
	행정학과	2	20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2	20			
	영상콘텐츠학과	2	20			
한양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1	25	조형일러스트레이션학과	2	20
	영어학과	2	20			
	치위생학과	1	25			
	섬유디자인학과	2	20			

학교명	2008-2009 학년도 인가 학과			2010학년도 인가 학과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인가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한영대학	공학계열	2	55			
혜천대학	제과제빵학과	2	30	치위생학과	1	15
	유아교육학과	1	25			
	간호학과	1	25			
혜천대학	유아교육학과	1	30			
	간호학과	1	40			
합계	317개 모집단위(학과)	7,789		88개 모집단위(학과)	2,04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b). 내부 자료

[부록-4] 한국의 고교 유형에 관한 법령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

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7>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

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10.20>

②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사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각각 지정·고시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2.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기간 중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8.11.5]

- 제105조 (자율학교의 지정 등 <개정 2009.3.27>)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8.2.29, 2009.3.2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09.3.27>
- ⑤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점입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 ⑥ 삭제 <2004.2.17>
- ⑦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

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7]

[부록-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대·소 계열별 학과 수 및 학교 수 현황

대계열	소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수	학교수	학과수	학교수
공학계열	건설·건축	215	102	159	142
	건축·설비공학	201	95	35	26
	광학·에너지공학	71	53	36	35
	교양공학	54	40	0	0
	금속공학	17	13	5	5
	기계공학	233	80	114	58
	기전공학	25	37	41	29
	도시공학	45	36	0	0
	반도체·세라믹공학	33	23	4	4
	산업공학	129	66	5	5
	섬유공학	28	14	7	4
	신소재공학	134	70	10	6
	응용공학	105	53	46	34
	응용소프트웨어공학	91	53	69	45
	자동차공학	36	25	74	52
	재료공학	64	37	5	5
	전기공학	76	53	67	45
	전산·컴퓨터공학	402	145	137	75
	전자공학	234	110	96	51
	정보·통신공학	476	151	406	122
	제어계측공학	37	26	15	11
	조경(학)	38	27	10	7
	지상교통공학	13	10	14	8
	토목공학	255	100	70	49
	항공학	39	13	10	7
	해양공학	81	24	28	19

대계열	소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수	학교수	학과수	학교수
	화학공학	162	66	8	7
교육계열	사회·자연교육	0	0	2	2
	공학교육	46	25	0	0
	교육학	115	87	0	0
	사회교육	93	34	0	0
	언어교육	126	53	0	0
	예체능교육	67	39	0	0
	유아교육학	89	74	180	120
	인문교육	37	30	0	0
	자연계교육	165	49	0	0
	초등교육학	86	14	0	0
	특수교육	86	45	12	12
	사회계열	가족·사회·복지학	365	162	271
경영·경제학		1,031	272	507	133
관광학		95	58	171	83
광고·홍보학		89	61	0	0
교양경상학		34	27	0	0
교양사회과학		86	58	0	0
국제학		71	44	0	0
금융·회계·세무학		175	82	88	60
도시·지역학		42	24	0	0
무역·유통학		240	104	51	37
법학		231	110	6	5
사회학		51	42	0	0
비서		0	0	25	20
언론·방송·매체학		170	99	59	35
정치외교학		85	53	0	0

대계열	소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수	학교수	학과수	학교수
	행정학	334	134	221	100
예체능계열	공예	60	26	23	20
	디자인일반	65	56	0	0
	기타디자인	254	98	302	109
	국악	23	16	0	0
	기악	82	33	0	0
	성악	31	26	0	0
	작곡	31	23	0	0
	기타음악	52	37	1	1
	무용	61	40	8	7
	미술	0	0	17	14
	뷰티아트	0	0	206	101
	사진·만화	65	40	54	36
	산업디자인	86	65	71	54
	시각디자인	99	68	53	39
	연극·영화	118	51	38	22
	영상·예술	168	85	105	49
	음악	86	62	70	46
	음향	0	0	4	4
	조형	64	39	3	3
	체육	454	129	229	99
	순수미술	170	74	0	0
	응용미술	25	18	0	0
	패션디자인	73	49	50	33
의약계열	간호	99	85	81	65
	보건	90	46	210	89
	의료장비	0	0	42	34
	의료공학	39	32	0	0
	의무행정	0	0	34	29
	의학	84	42	0	0
	한의학	22	11	0	0
	치의학	33	26	0	0
	약학	46	20	0	0

대계열	소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수	학교수	학과수	학교수	
	재활	84	49	88	58	
인문계열	교양어	87	64	14	13	
	언어학	9	8	0	0	
	문예창작	0	0	17	16	
	문헌정보	44	32	8	8	
	문화	0	0	10	9	
	영미어·문학	273	144	70	49	
	독일어·문학	68	53	0	0	
	러시아어·문학	29	23	0	0	
	스페인어·문학	16	13	0	0	
	프랑스어·문학	61	46	0	0	
	유럽·기타어	44	21	7	5	
	기타아시아어·문학	40	18	0	0	
	인문일반	0	0	11	11	
	일본어	120	77	53	41	
	문화민속미술사학	83	48	0	0	
	종교학	0	0	2	2	
	국어국문학	196	115	0	0	
	심리학	58	49	0	0	
	역사고고학	105	68	0	0	
	종교학	128	66	0	0	
	국제지역학	152	70	0	0	
	철학윤리학	100	59	0	0	
	교양인·문학	230	131	0	0	
	중국어·문학	161	96	57	42	
	자연계열	가정관리학	50	31	5	5
		교양생활과학	40	38	0	0
교양자연과학		107	67	0	0	
농수산		67	22	9	6	
동물·수의학		31	17	0	0	
물리·과학		138	69	0	0	

대계열	소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수	학교수	학과수	학교수
	생물학	178	54	49	32
	식품영양·조리학	288	106	265	112
	산림·원예학	94	34	12	8
	생명과학	425	104	0	0
	수학	137	82	0	0
	의류·의상	72	50	4	4
	지구지리학	39	22	0	0
	천문기상학	23	10	0	0
	자원	198	55	17	16
	통계	93	57	0	0
	지적	0	0	9	7
	화학	133	76	0	0
	환경	221	91	47	34
	계	14,205	6,834	5,419	2,9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b). 내부자료.

[부록-6]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천채용 제도
확대 관련 법령 내용

1.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1.7. 경기도교육훈령 제21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호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내 전문계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법 제2조제2항제3호가 정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 전문계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무 10급 : 상업계열학과
2. 조무 10급 : 공업계열학과, 농업계열학과
3. 기계 10급 : 기계계열학과
4. 농림 10급 : 농업계열학과

제4조 (임용인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당시 해당 직렬별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응시대상은 경기도 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 직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 시 별도 시행한다.

② 학교장 추천대상은 조무직렬을 제외하고는 최종학년 내신 성적 평균 4등급 이내인자로 한다.

③ 거주지 제한은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
5. 성적증명서(최종학년) 1부.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2009년 1월)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0 (제 회)	

국 가 공 무 원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 세 훈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2. 제안이유

.....한편,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다.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

- (1)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하위계급 위주로 신규채용되고 상위계급에 충원이 거의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채용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왔음.

- (2)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3)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4(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 -----뛰어난 고등학교----- ----- ----- -----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 ----- ----- ----- ② -----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p>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연락처	(02) 2100 - 1709

[부록-7]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법령 내용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사업)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당 업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록-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 2009-215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5.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마.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4조)

- (1) 그간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인해 훈련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하여 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산업부문별 직업훈련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격기준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부록-9]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법령 내용

I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부담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에는 당해 지역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현장실습계약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 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 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 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업무가 직업 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월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2.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 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
4.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자

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6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료의 확보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5.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이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 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II. 각 급 학교 현장 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

1999. 2. 6.
교육부훈령 제58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업교육기관인 각 급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운영) ① 현장실습은 각 급 학교장의 책임하에 사전 안전교육 등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자율편성 교과 또는 관련 전공교과에 추가된 통합교과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실습 운영의 경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고등학교 교원배치, 제42조 산학겸임교사 규정과 대학·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등의 규정 범위내에서 현장실습 전담교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학습인정 기준) ① 제2조에 의거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단위수 또는 학점으로 학습인정을 한다.

1. 10개월이상 12개월이하의 현장실습은 2학기 학습인정
2. 5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현장실습은 1학기 학습인정
3. 30일이상 40일이하 현장실습은 1학기 분량의 학점 또는 단위의 1/4 이내 학습인정
4. 34시간(전문대학 및 대학의 경우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 현장실습은 2단위 또는 2학점이내 학습인정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학습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수를 인정하며, 고등학교

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수를 정한다.

제4조 (학습인정 방법)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학습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 급 학교장은 일정방법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인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각 급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항목에 대한 가감 및 항목별 점수비율은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현장학습 과제 수행
2. 현장실습 과제 수행
3. 담당교원 방문 관찰결과
4.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결과
5.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자체평가 항목

③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 각 급 학교장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제5조 (실습업체 선정방법) 제2조에 의한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 실습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급 학교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업체를 사전 시찰·방문을 통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 실습여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제6조 (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및 관리 등) ① 산업체별 실습대상자는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당산업체가 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

② 각 급 학교장은 현장실습 대상학생의 선발, 실습산업체 선정 및 실습 학생평가등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 급 학교가 부속시설로서 산학협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실습운영 평가·지원) ① 교과 및 학기단위로 시행하는 학습인정 현장실습 운영을 촉진키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에 대하여서

는 시·도교육감에게 평가를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운영 평가기준) 제7조에 의한 현장실습 운영평가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현장실습대상자 선발 및 산업체 모집관리
-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개발·운영 및 학습인정 과정
- ③ 현장실습 과정중 관리 운영실태
- ④ 기타 학교장 및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9조 (현장실습운영 평가방법) 제7조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서면평가, 현장평가, 관계자 면담 및 설문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제10조 (시범학교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을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하여서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현장실습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별도의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칙(1999. 2. 6. 교육부훈령 제583호)

이 규칙은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I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노동부고시 제19997-62호(1998. 1. 3)]

표준협약서현장실습 (예시)

제1조 (목적) 이 현장 실습협약서는 회사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학교 학생(또는 훈련생)(이하 “을”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병”이라 한다.)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 ① 현장실습기간은 20 . . . ~ 20 . . .으로 한다.
- ② 현장실습은 “갑”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② (공고 「2·1체제」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직업훈련 전용 시설에서 3월 이상의 지배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 집체훈련은 다른 직업훈련 실시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1월에 1일상 “을”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간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갑”은 “병”과 협력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이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부서에 배치하고,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병”이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 ① “을”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을”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 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현장실습기간과 휴식)

- ① 현장실습기간은 1일에 기간(현장실습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이내로 한다.
- ② (“을”이 여자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을”이 여자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한다.

제8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 현장실습 기간(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과 야간 현장실습 또는 휴일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갑”은 “을”이 현장실습을 중단 포기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②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매월(일) 원

③ 중식의 제공 여부는 “갑”이 “을”이 현장실습을 중단 포기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④ “갑”은 현장실습기간 중 “을”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9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을”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해보상) “을”이 현장실습 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여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 (상벌)

① “갑”은 “을”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 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을”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 결과를 “을”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간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갑”이 취업규칙을 준용 하거나 “갑”이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4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갑”은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해지의 고시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갑”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제17조 (취업) “갑”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료증명서)

①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19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갑) 회사명
대 표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병) 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문헌

- 강기주(1992).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체계」, 『교육월보』, 1월호, 교육부.
- 강무섭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고준기(2005).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
구』, 제15권 제1호, 209-233쪽, 한국법정책학회.
- 곽재석(2004).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재구조화 정책』, 한국교육
개발원.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2월
9일.
- 교육과학기술부(2007).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안)』.
- _____ (2008).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연차평가 설명회
자료」.
- _____ (2008). 11월 20일자, 보도자료.
- _____ (2008). 11월 29일자, 보도자료.
- _____ (2009). 『2009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초등·중등·교
육청』.
- _____ (2009). 9월 2일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관한 보도자료.
- _____ (2009a). 내부자료.
- _____ (2009b).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1985-2009). 『교육통계연보』.
- _____ (1985-2009). 『취업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문대학 발전 방안』.

- _____ (2006).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계획 방안』 .
- _____ (2007). 내부자료.
- _____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
- _____ (2007). 『희망을 실현하는 실업계고 육성 전략』 .
-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
- 구자균 외(1998). 『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3월 20일자,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대통령 보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9). 4월 29일자, 보도자료.
- 김경희(2003). 『한국의 평생직업교육』, 원미사.
- 김도수(1996). 『평생교육사회의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 김성규(2004). 「한국 전문대학의 변화 요인과 과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호(2007). 「관광과 조리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교육향상에 관한 연구: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철 외(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우(2009). 「직업훈련기관의 직업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실태와 향후 지원 방향」, 미발간 자료.
- 김진모(2008). 『공동실습소 지원 및 개선 방안 도출』, 교육인적자원부.
- 김창곤(1987). 「교육정책 평가모형개발과 실험대학정책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국(2008).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경남』, 제 174호, 경상남도교육청.
- 김환식·나승일(2001).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나승일(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나승일 외(2008).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1호, 83-117쪽, 한국농업교육학회.
- 노동부(2007).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 지침.
- _____ (2009). 내부자료.
- _____ (2009). 9월 21일자, 금주에 변경·추가된 정보 요약.
- 노종희 외(1996).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 네이버(naver) 국어사전(2009). www.naver.com.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1996). 『직업교육 관련 개혁 및 개편 방안』.
- _____ (2005).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 대한상공회의소(2003).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 동아참국어사전(2009). 동아출판사(2009). 『동아참국어사전』.
- 동아일보. 2006. 11. 23.
- 류지성 외(2007). 「전문대학의 성공조건」, 『CEO Information』, 제593호, 삼성경제연구소.
- 맹희영 외(2003).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 수립』, 산업자원부.
- 매일신문. 2008. 12. 24.
-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2009). 민중서림(2009).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 문태선(2005).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 현 외(2000).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별 통합·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박동열·윤영한(2007). 『「2+5전략」 구현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 인력 산·학·군 협력 육성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외(2006). 『생애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 (2008). 『전문계고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박병영 외(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 -편입학 원인과 이동 구조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정(2001). 「평생교육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체제」,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2호, 159-175쪽, 한국평생교육학회.

박세종(2005). 「연계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영민(2007). 「농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담당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종무 외(2000). 『한국 산학협동의 실태와 전망』, 대구광역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박준경 외(2001).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변호걸 외(2001).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따른 2+2 연계교육 발전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손병호·이기종(2005). 『산학협력의 허와 실: 현황 진단과 정책 과제』, 한국산업기술재단.

손순종(2000). 「평생학습 논리의 의미와 한계 검토」, 『교육학연구』, 제38권 제1호, 289-308쪽, 한국교육학회.

신현석(2000). 「산업대학 개혁정책의 공과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제3호, 333-357쪽,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울신문. 2009. 10. 7.

세계일보. 2007. 02. 27.

- 안치민(2006).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현황 및 발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옥준필(2008). 『2008년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윤여송 외(2005).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_____ (2006).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경국(2009).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5권, 1-29쪽, 대한경영교육학회.
- 이규환(1997).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 이기성 외(2008). 『지역 인적 자원개발(RHRD)을 위한 전문계 고교 평생학습기관화 방안』, 충청남도교육청.
- 이기호(2004). 「전문대학의 현안 과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교수 워크숍 자료.
- 이길순 외(2008). 『2009년 전문대학 포물러 펀딩 사업 설계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이상돈 외(200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환 외(2007). 「교사가 인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4호, 59-81쪽,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임언 외(2008).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천순 외(1992).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연합뉴스. 2009. 9. 14. / 2009. 10. 8.
- 장기원(2001). 「직업교육정책의 평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세진(2002).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 장재원(1992). 「교육정책 평가모형 개발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조(2003).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발전방향 탐색」,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2000).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 방향」, 『좋은교사』, www.goodteacher.org/technot2.
- _____ (2000).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 포럼, 17-31쪽, 5월 19일.
- _____ (2009). 「직업교육정책과 방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 자료, 8월.
- 정철영 외(199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7). 『경상북도 직업교육 종합 발전 방안 연구(2008~2010)』, 경상북도 교육청.
- _____ (2008a).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3호, 137-171쪽.
- _____ (2008b).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 정태화(2002). 「실업계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쟁점 논의와 발전 방향 탐색」,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정치동학』, 제9차 연차학술대회, 한국교육정치학회.
- _____ (2003). 「주요 국가의 현장지향적 직업교육 제도와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3-232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_____ (2005). 「직업교육」, 『한국의 인적자원-도전과 패러다임』, 범문사.
- _____ (2006).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직업교육

- 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006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직업교육학회.
- _____ (2008a).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2008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교육학회.
- _____ (2008b). 『사내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최지희(2007). 「전문계 고교를 회생시키자」, 『21세기 국가전략-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외(2000a).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0b).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3). 『전문대학 구조조정 지원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_____ (2006).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7).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9a).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정책현안과제 200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9b).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발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간보고자료.
- 정훈(2009). 『영역별 특성화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조선일보. 2009. 01. 28.
- 조상일(2006).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대학의 만족 및 필요도를 중심으로-』
- 조은상 외(2008). 『OECD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광신 외(2003). 『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주인중 외(2000).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소기업청(2006). 내부자료.
- _____ (2007). 2007년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및 기업선정 결과.
- _____ (2008). 『2008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채창관·옥준필(2006).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6).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의견서.
- 최도홍(2000).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 최영렬(2007).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수출 통합관리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영섭 외(2007). 『산업별 협의체의 제도적 정착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용재 외(2008).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
- 통계청(1986-200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_____ (1995-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2006). 『장래인구추계(2005-2050)』.
- _____ (2007).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http://www.nso.go.kr>.
- _____ (2009). 3월 30일자,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_____ (2007). 『2007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 _____ (2007).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보고서: 6차년도 자료 분석』.
- _____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보고서: 7차년도 자료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2008). 「간추린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index.jsp>.
- _____ (2009). 고등통계 DB.

- _____ (2009). 내부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내부자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09). 내부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09). 내부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0-2009). 『전문대학 교육지표』.
- _____ (2005-2009).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직업교육 촉진방안: BIBB 아젠다 2000 플러스』.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평생학습 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Chapman, J. & Aspin, D.(1997). *Schools as Centers of Lifelong Learning for All*. [On-line]. Available: <http://www.lifelong-learning.org.chapman-aspin.htm>
- DfES(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2). *It's your choice: 2002*. <http://www.dfes.gov.uk/iyc/learning.shtml>.
- Glennon, K. (2005). *Community College Baccalaureate Degrees. A review of issues policies and other states' programs*. Prepared for University of Phoenix.
- Grubb, N. & Lazerson, M.(2005). "Vocationalism in Higher Education: The Triumph of the Education Gospe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1).
- Itao, A. F.(1995). "Innovative Small-Scale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HE CEFÉ MODEL". A theme paper presented at Sub-Regional Course o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or Women Technician by COLOM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IAN EDUCATION. 18-29. Sep. Bangkok, Thailand.
- OECD(2009). *Learning for Jobs-OECD Review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ayne, J.(1999). "Recent changes in school-to-work transition in England and Wales" in Stern, D & Wagner, D. A(eds)(1999).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New Jersey: HAMPTON PRESS, INC.
- Stevens, R(2005). "University to Uni. -The polytechnic of higher education in England since 1944". *POLITICO'S 2005*, p. 53.
- UNESCO(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Paris: Unesco.
- Werner, M. C.(1995). *Australian key competenci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CVET. Adelaide, Australia.

日本 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2002. 1). 大學(國立大學)의 構造改革方針에 關하여(<http://www.mext.go.jp/english/>).

日本 文部科學省(2001. 12) 2002年度 開設 豫定 大學 等 一覽.

日本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 中央教育審議會(2002. 04. 03). 大學分科委員會 義 會議錄(<http://www.mext.go.jp/english/>)

http://en.wikipedia.org/wiki/University__college

<http://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95>

<http://news.jknews.co.kr/today/news/20090706/2966627.htm>

http://txk.k12.ar.us/info/texarkana__area__vocational__center.htm

<http://wacc-online.org/>

<http://websites.kahoks.org/cavc/index.htm>

<http://www.academyinfo.go.kr/>

<http://www.bizcool.go.kr/>

<http://www.capital.tec.il.us/index.php>

<http://www.district87.org/avc/index.htm>

<http://www.gavc-il.org/>

<http://www.lacc-il.org/>

<http://www.minedu.fi>

<http://www.schools.lth5.k12.il.us/beck/index.ht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24008012>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4717>

■ 저자 약력

- 정태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전종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홍광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이길순
- 신구대학 교수
- 이병욱
- 충남대학교 교수

직업교육 혁신 2020

· 발행연월일	2009년 11월 29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크리홍보(주) (02)737-5377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063-3 9337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10,000원>